

정책담당자가 만드는 경제전문지

나라경제

1996. 2



특집/ 96년 경제운영, 이렇게 한다

96

이 달의 초점/ 경기연착륙을 위한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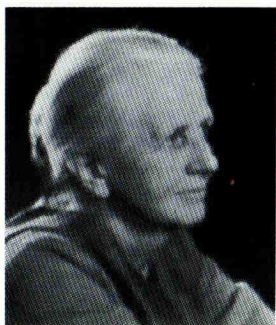
경제정책해설/ 5월부터 외국기업의 주식 발행 및 상장 허용
미래 환경의 청사진 - '환경비전 21'

권말부록 96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편집/경제부처합동편집위원회
발행/국민경제교육연구소

최초의 여성 경제학자

조안 바이올렛 로빈슨 (1903~1983)



조안 바이올렛 로빈슨(Joan Violet Robinson)은 1903년 10월 1일 영국 서레이주 캠벌리에서 육군소장이었던 모리스 경과 프레드릭 헬렌마슈의 딸로 태어났다.

그녀는 1922년 성 바울 여학교를 졸업하고 케임브리지 대학교 거튼 대학에 입학하여 당시 경제학계의 거장이었던 알프레드 마샬과 아더 세실 피구의 지도로 경제학을 공부한 최초의 여성이 되었다.

1925년 케임브리지 대학교를 졸업한 뒤 1926년에는 당시 케임브리지 크리스티 코트프스 대학에서 강사로 있던 오스틴 로빈슨과 혼인하였고 바로 이어서 인도 土侯의 가정교사로 새 일자리를 얻게 된 남편을 따라 두 해 동안 인도에서 살았다. 로빈슨은 인도에 있는 동안 경제개발에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 같다.

1931년에는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강사보 자리를 얻어 가르치기 시작하였으며, 1933년에는 그녀 일생의 명저인 「불완전경쟁의 경제학」을 출판하였고, 1937년에는 강사보에서 강사로 승진하였다. 1949년에는 부교수에 해당하는 직급인 讀師(reader)가 되었으며 1965년에는 교수로 진급하였다. 1956년에는 또 하나의 명저인 「자본 축적론」을 출판하기도 하였다.

1964년에는 김일성의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한 바 있으며, 그 때의 북한 경제에 관한 인상을 「조선, 1964 경제적 기적」이라는 작은 기행문으로 1965년 1월 뉴욕의 좌익계 잡지 『月刊 리뷰』에 기고하기도 하였다.

1983년 8월 5일 케임브리지에서 작고하였으며, 그녀의 저술은 「경제학 논문 선집」 다섯 권으로 출판되었다.

조앤 로빈슨은 어떤 의미에서는 최초의 여류 경제학자로 볼 수 있다. 그녀보다 30년 먼저 출생한 로사 룩셈부르크가 이미 여성 경제학자로서 왕성한 사회주의 활동을 벌인 바 있으나, 룩셈부르크는 경제학자로서보다는 정치활동가로 더 널리 알려졌던 만큼 대학에서 강의와 연구활동을 한 최초의 여성으로 조앤 로빈슨을 꼽는 것은 당연하다.

비교적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게 평가되었고, 특히 여성이 진출하기 어려웠던 남성 위주의 케임브릿지 대학교에서 평생 동안 활동하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조앤 로빈슨의 경제학에의 기여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녀는 당시 경제학의 지배적 조류였던 마샬의 이론이 철옹성처럼 자리잡고 있었던 케임브릿지에서 마샬 이론의 출발점이 되었던 완전경쟁이론을 버리고 불완전경쟁의 경제학을 시도함으로써 완전경쟁시장을 하나의 특수한 경우로 보게 한, 미시경제이론에서의 일반화를 이룩하였다. 조앤 로빈슨의 1933년 저술은 같은 해 출판된 에드워드 챔벌린의 「독점적

경쟁의 이론」과 우연히도 일치되어 미시경제이론에 있어서는 하나의 작은 혁명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으나 서로의 연구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서로 상이점을 갖기도 한다. 즉, 챔벌린이 「독점적 경쟁시장」의 개념에 중점을 두었다면, 로빈슨은 과점시장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30년대초 칼레스키를 해후하게 된 로빈슨은, 칼레스키의 경기변동이론이 케인즈 유효수요부족과 같은 결론을 가져오나 케인즈보다 먼저 세상에 발표되었고 또한 마르크스이론에 기초하였다는 점에서, 마르크스이론에 새로운 흥미를 갖고 이를 근대경제학으로 해석하는 데 커다란 학문적 기여를 하였다. 로빈슨은 마르

크스가 파악한 자본주의 사회의 생리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경제이론의 분석에서 마르크스가 편견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념을 분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로빈슨의 「자본 축적론」은 로사 룩셈부르크의 저술과 같은 이름을 갖고 있으나 그 내용은 근본적으로 서로 다르다. 그녀의 이론은 로버트 솔로우의 성장이론이 극히 생산함수 중심이었다는 사실에 반기를 든 로빈슨 빅셀의 자본이론에 하룻드의 動態理論을 접목한 것으로, 성장은 단순히 단기적 성격을 갖는 생산함수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고 자본주의 사회가 동태적으로 지니는 축적·기술발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1964년 김일성의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한 로빈슨은 북한 경제를 잘못 보는 커다란 오류를 범하기도 하였다. “일곱 해 전 평양은 돌맹이 하나 제대로 서 있는 것이 없었다(인구 한 명당 머리 위에 한 톤 이상의 폭탄이 떨어졌다). 이제는 백만의 인구를 갖는 넓은 강가 가로수를 중심으로 퍼져 있는 현대 도시가 되었다.”로 시작되는 이 글은 휴전선이 남한 당국에

조앤 바이올렛 로빈슨은
최초의 여성 경제학자로서
당시 경제학계를 지배하던 마샬이론의
출발점이 되었던 완전경쟁이론을
벗어나 불완전경쟁의 경제학을
시도함으로써 완전경쟁시장을
하나의 특수한 경우로 보게 한,
미시경제이론에서의 일반화를
이룩하는 데 기여하였다.

서 남한 사람들이 ‘좋은 땅’ 북한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짓의 장벽’이라 잘못 쓰고 있을 뿐 아니라 제국주의에 종속되는 가장 빠른 길인 외자와 원조를 거부한 채 ‘주체사상’을 가지고 새로이 건설하여 나가는 경제라고 북한을 극구 찬양하고 있다.

로빈슨이 살아 생전에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여성의 해’였던 1975년에 여성경제학자로서 응당 받으리라 믿어졌고, 또 그녀 자신 그렇게도 바라던 노벨 경제학상도 받지 못한 채 병상에 누운 지 6개월 만인 1983년 8월 타계하였다. 

나라경제

역사 속의 경제사상가 38

최초의 여성 경제학자 - 조앤 바이올렛 로빈슨 / 윤석범 · 연세대 교수 2

권두칼럼

삶의 질의 세계화, 실천이 앞서야 한다 / 서상목 · 前 보건복지부장관 6

만남

나웅배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 손 숙(연극인 · 방송인) 9

특 집

96년 경제운영, 이렇게 한다

새해의 경제운영 방향 / 한성택 · 재정경제원 20

경기양극화 완화와 구조조정 지원 / 전상우 · 통상산업부 26

맑은 물의 안정적 확보 / 박대문 · 환경부 30

참여 · 협력의 새로운 노사관계 구축 / 장재구 · 노동부 33

‘과학기술 세계화’의 실질적 정착을 추구 / 김의제 · 과학기술처 37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한 경쟁정책의 강화 / 김호대 · 공정거래위원회 41

기업정보 병행수입부당저지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규제 / 안영호 · 공정거래위원회 45

나라경제 초대석

정부와 기업의 관계 - 미국역사의 교훈 / 강명규 · 서울대 교수 48

경제수상 · 아 · 태지역의 정보통신 / 이종순 · 정보통신부 50

· 인류보편적인 가치관 정립 / 문유현 · 과학기술처 51

· 신문의 최적생산량 / 신무성 · 공정거래위원회 53

이 달의 초점 - 경기연착륙을 위한 선택: 안정이나, 성장이나

물가안정기조 정착시켜야 / 이병완 · 영남대 교수 56

경제성장세 지지에 초점을 / 정문건 · 삼성경제연구소 상무 60

성장토끼와 안정토끼 / 김인철 · 성균관대 교수 64

경제정책의 산실을 찾아서 - 통상산업부 통상무역2심의관실

‘무역을 통한 경제발전’의 선봉/이종재 · 한국일보 기자 67

5월부터 외국기업의 주식 발행 및 상장 허용/김규복 · 재정경제원 72

올해의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방향/이재홍 · 정보통신부 77

미래 환경의 청사진 - ‘환경비전 21’/정도영 · 환경부 80

선진 복지사회를 향한 장애인고용 촉진/송길홍 · 노동부 84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부실방지대책/정락형 · 건설교통부 87

亞 · 太지역 과학기술협력으로 과학기술 세계화의 토대 마련/구본제 · 과학기술처 90

통신시장 개방에 대비한 통신사업자 허가/이규태 · 정보통신부 93

출입기자코너

• ‘과학’을 위하여/김대우 · 내외경제신문 기자 96

• 公正委의 보물/김영태 · 매일경제신문 기자 97

서 평 정부혁신 - 선진국의 전략과 교훈/이근식 · 서울시립대 교수 98

경제동향 나라밖 : 국제금리 하락세 지속/박 훈 · 산업연구원 99

통계로 보는 우리 경제와 사회

南北韓의 경제 · 사회상 비교/최봉호 · 통계청 102

생활경제상담실 금융소득 종합과세/김연근 · 국세청 106

건강한 삶을 위하여 만성피로증후군/김우주 · 고려대 교수 108

바둑칼럼 禮成江曲과 바둑 109

경제부처발간자료 안내 주요 경제정책자료 110

권말부록 96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121

삶의 질의 세계화, 실천이 앞서야 한다

서 상 목

前 보건복지부장관

‘21세기의 한국’을 만들어 갈 국민복지 청사진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국민복지기획단이 마련해 제시한 「삶의 질의 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의 기본구상」이 그것이다. 이는 향후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기본틀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보건복지부장관 재직 시절 이 복지기획단을 태동시킨 장본인으로 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다.

필자는 범정부 차원의 국민복지기획단을 만들어 ‘한국형 베버리지 보고서’를 만들고 싶었다. 우리나라 복지제도에 일관된 철학이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전문가들과 관련 공무원들이 하나가 되어 복지정책을 연구하면 멋진 작품이 나오리라고 믿었다.

필자는 국민복지기획단 결성계획을 세워 요로요로에 도움을 청했다. 그러나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주위의 반대에 부딪혔다. 사면초가였다. 보건복지부장관 혼자서 아무리 애쓴다 해도 한계가 있었다. 통치차원에서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대통령이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고 또 범국민적인 호응이 뒷받침된다면 복지사회로의 일대도약이 가능한 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적당한 시기에 대통령께 건의할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던 중 95년 3월 유엔 창설 50주년을 맞아 코펜하겐에서 사회개발정상회의가 열리게 되어 있었다. 그간의 냉전체제에서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사회개발 분야



에 대해 유엔이 비로소 관심을 갖게 된 것이었다. 이렇듯 전 세계는 이제 인류의 복지향상이라는 共同善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당초 국무총리가 참석하도록 되어 있었던 이 정상회의에 필자는 청와대와 외무부 관계관들을 설득해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하도록 했다. 세계 190여개국에서 114개국의 정상을 비롯해 참가자의 규모가 무려 2만명에 달했다. 한마디로 지구촌의 삶의 질을 향

상시키는 방안을 논의한 큰 마당이었다.

사회개발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온 대통령은 「삶의 질의 세계화」라는 제목으로 특별담화를 발표했다. 앞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특별예산을 편성하고 그 중 70%는 복지, 20%는 환경, 10%는 안전문제에 쓰겠다고 했다. 그 일환으로 국민복지기획단을 만들 것을 밝혔다. 이렇게 해서 복지기획단이 출범하게 되었고, 약 6개월여의 작업 끝에 복지구상이 나왔으니 복지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감회가 새롭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난 30년간 우리 경제는 연평균 8%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으로써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시대를 맞게 되었다. 그러나 고도성장을 거듭하면서 불행히도 경제성장을 국가 최고 목표로 삼는 경제제일주의가 자리 잡았다. 성장의 열매가 국민들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단계로 넘어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배정책을 계속 소홀히 함으로써 급기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났고 국민들 사이의 위화감은 갈수록 깊어갔다. 한자자본주의의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여기에 80년대말부터 민주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경제 규모가 더욱 커지면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짚 필요가 생겼다. 이 패러다임의 골간은 경제제일주의를 기본으로 하되 계층 간 갈등을 해소하는 등 국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데 있다. 즉, 선진국의 문턱을 넘기 위하여 복지 수요와 경제정의를 적절히 동시에 실현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게 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후발개도국으로서의 이점을 충분히 살려야 한다. 소위 선진국의 ‘복지病’에 걸리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우리 세대에 있는 것이다. 선진국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여기에 우리의 전통을 접목시킴으로써 한국적인 복지를 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복지의식은 아주 낮다.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 못난 사람을 도와야겠다는 의식은 대다수 사람들에게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관 재직중 난생 처음으로 소록도에 간 적이 있었다. 국립 소록도병원 개원 78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도착한 다음날 아침, 병원에서 근무하는 신부·수녀님들과 함께 조찬을 했다. 그 중에 우리나라에 온 지 34년이나 되었다는 나이 지긋한 오스트리아 수녀 한 분이 잔잔한 미소를 띠면서 당시 자신의 걱정거리를 털어냈다. 월급을 본국 정부로부터 받고 있던 이 수녀님은 제2의 고향인 한국에 뿌를 묻고 싶는데 이제 정년이 되었다고 자꾸 귀국을 종용받고 있다는 하소연이었다.

필자는 그 수녀님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다.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은 소록도 병원에 근무하게 되는 것을 ‘귀양간다’라고 표현한다. 이곳 병원은 직원들이 승진을 하면 그 반대급부로 1년쯤 그저 시간을 때우는 곳으로 인식된다. 그러니 부임하는 그 날부터 떠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린다. 물론 가족도 데려가지 않는다. 그런데 한 국민의 피라고는 단 한방울도 섞여 있지 않은 이역만리에서 온 벽안의 수녀가 이토록 지극한 헌신적인 사랑을 베풀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에서 우러나는 존경심을 느

낌과 동시에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에 대한 수치심으로 한동안 마음이 착잡했던 기억이 새롭다.

필자가 과거의 일화 한 토막을 소개한 것은 복지사회의 구현은 바로 오스트리아 수녀가 몸으로 보여 준 이웃을 위한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생각에서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국민의 복지의식이 공감대를 형성할 때 우리의 복지수준은 선진국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정부차원에서 차지하는 복지부문의 우선순위가 높아져야 한다. 9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중앙정부 예산의 4%에 불과하다. 타정부부처의 사회복지 관련 예산까지 합해도 6% 수준이다. 이에 비해 복지선진국들은 대부분 50%를 상회하고 있다. 필자는 이렇게 취약한 복지관련 예산을 2010년까지는 최소한 20%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민정부 들어 점차 복지분야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것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다. 주무 행정부처의 명칭을 보건사회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꾸고 대통령께서 직접 사회개발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삶의 질의 세계화’를 선언하고 국민복지기획단을 출범시켜 ‘복지구상’을 내놓았다. 최근 대통령 비서실에 사회복지수석실을 신설하고 올해 6대 국정 과제의 하나로 ‘삶의 질’의 향상을 내세운 것은 이러한 정부의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조치라 하겠다.

마지막으로 복지공급주체가 다원화되어야 한다. 종합적 복지의 증진은 국가뿐만 아니라 민간참여 등 공급주체를 다원화하여 복지공급체제의 유연성을 확보함으로써 가능해진다.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기능 배분을 적절히 해야 하며 민간부문에 있어서는 가족·기업·민간단체·종교단체 등 다양한 주체를 복지체제에 접근하도록 하여 상호조화와 협조를 통한 종합적이고 다양한 사회복지의 보완적 역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더하여 복지관련 법체계 및 행정조직의 재정비를 통한 사회복지 관리체계의 효율화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바라는 ‘삶의 질의 세계화’는 곧 우리의 현실로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한다. 

나 용 배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대담 : 손 숙/연극인·방송인

• 때 : 96년 1월 18일 • 곳 : 제1청사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집무실





이제는 민간부문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민간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입니다. 민간부문이 창의력을 발휘하고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경제 각 부문의 비효율적·전근대적인 요소들을 개선해 나갈 작정입니다.

—평소 방송진행을 하면서 경제문제에 대해서 궁금한 점도 많았는데, 이렇게 직접 부총리를 뵙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총괄책임자인 경제부총리를 이번에 두번째로 맡으셔서 소감이 남다르셨을 테고, 8년 만에 경제부총리를 다시 맡으면서 실감하신 변화도 많을 것 같습니다.

▲경제부총리를 두번씩이나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고 보람도 크지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사실 지난 8년 전에 비해 달라진 게 너무나 많습니다. 8년 전 당시에는 1인당 GNP가 4,300달러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1만달러를 상회하고, 수출도 600억달러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해말에는 1천2백억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대략 두배 정도로 경제규모가 커진 셈입니다. 이처럼 경제규모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커졌고, 개방화·국제화에 따라 정책결정도

국제적 협력을 감안하여 내려야 하는 등 변화가 많습니다.

특히 옛날에 비해 민간경제 영역이 몰라보게 커졌습니다. 올해 정부 예산이 63조원인 데 비해서 한 해 매출규모가 이를 능가하는 대기업그룹도 있습니다. 이제는 민간기업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민간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입니다.

민간부문이 창의력을 발휘하고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경제 각 분야의 비효율적·전근대적인 요소들을 개선하며, 국제규범에 비추어 낡은 제도와 관행도 국제수준으로 개선해 나갈 작정입니다.

—지난해에는 경기가 과열되었다고 할 정도로 9%를 넘는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만, 올해는 급격히 경기가 후퇴하지 않나 하는 우려가 많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올해 경제운영에

있어 지난해에 다소 과열되었던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지 않고 안정성장이 지속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히셨습니다만, 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해의 높은 성장에 대한 반작용 등으로 올해의 성장률은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신축적인 정책대응을 통해 우리 경제의 적정 성장률 수준인 7~7.5% 수준으로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금년에는 수출과 설비투자의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양호한 해외경제여건으로 그 규모면에서는 상당한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경기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사회간접자본과 중소기업 관련 예산사업을 조기 집행함과 동시에, 기술개발 등 실물부문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하여 물가안정을 바탕으로 적정수준의 성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용해 나갈 것입니다.

—경기호황의 그늘에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을 설치한다고 들었습니다만, 단순히 기구의 설립만으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봅니다.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높은 임금상승, 개방과 규제완화로 인한 경쟁심화 그리고 유통혁신과 소비패턴의

변화 등 심각한 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95년 2월 「중소기업지원 9대 시책」과 95년 9월 「중소사업자 구조개선 촉진 대책」 등 여러 시책을 추진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수가 230만개에 달하고 정부지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선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대책이 미흡하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지난해에 마련한 시책 중 일부는 이미 시행되고 있으나 상당수는 법령개정·예산조치 등을 통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될 것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중소기업청이 신설되고, '중소기업대책회의' 운영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요망사항을 보다 충실하게 검토하고 기존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가는 데 주력할 것이므로 서서히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직접 가게를 꾸려나가는 주부들의 입장에서 물가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연초부터 농산물가격이 오르는 등 물가가 불안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올해는 농산물의 해거리여서 농산물가격이 오를 전망입니다. 저로서는 운이 나쁜 셈이지요.(웃음) 오늘도 재경원차관 주재로 물가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만, 정부는 물가안정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총선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소비자물가를 지난 해보다 낮은 4.5% 내외에서 안정되

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예년의 경우 1/4분기 물가상승률이 높았으나, 금년에는 1/4분기부터 물가를 안정시켜 안정분위기가 연중 지속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 통화·재정·환율 등 거시경제 정책수단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공공요금은 작년보다 낮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수준으로 조정할 것이며, 특히 농축수산물 가격의 상승이 없도록 안정적인 수급체계를 구축하여 물가불안 요인을 해소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선거분위기를 틈탄 개인서비스요금 상승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부동산실명제를 조기에 정착시켜 부동산투기를 적극 방지하겠습니다.

—앞에서 지적하신 대로, 지난해 우리 경제는 수출이 1천2백억달러를 넘어서고 국민소득은 1만달러를 상회함으로써 선진국 진입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각종 대형사고가 연달아 발생하였고 아직도 대도시 교통문제, 맑은 공기와 물, 식품위생 등의 측면에서 개선해야 될 점이 많다고 봅니다.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국민생활경제의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펴 주셨으면 합니다.



대담자 **손 숙** (연극인·방송인)

1944년 경남 밀양에서 출생.

고려대 사학과를 3년 수료한 후 연극인과 방송인으로 활동해 오고 있다.

「파우스트」, 「홍당무」, 「위기의 여자」 등 100여편의 연극에 출연했으며, 현재 MBC 라디오의 주부대상 프로그램인 「여성시대의 진행」을 5년째 맡고 있는 등 방송진행자로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넘어서게 됨에 따라 쾌적한 생활환경과 복지 증진 등 '삶의 질' 향상 요구가 증대하고 있지만, 현재 교통·환경 등 우리의 생활여건이나 복지수준은 소득수준에 비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 온 경제제도개혁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국민생활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생활개혁, 기존의 생산자 위주 정책에서 소비자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 등을 본격화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유통혁신을 확산하는 등 경쟁촉진을 통하여 생활물가 안정에 주력하고 소비자보호 시책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대도시 교통난 완화와 대기오염의 방지, 맑은 물 공급기반의 확충 등 국민생활 환경개선에 주력함



정부는 물가안정에 최대역점을 두고 올해의 소비자물가를 지난해보다 낮은 4.5% 수준에서 안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공공요금은 작년보다 낮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수준으로 조정하고 농수축산물의 안정적인 수급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과 동시에 각종 안전사고 또는 부실 공사의 방지를 위하여 주요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생계보호를 금년에는 최저생계비의 80%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노인·장애인과 같은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규제를 많이 풀어서 행정절차상의 간소화는 많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과 기업들은 아직도 구석구석에 정부의 간섭과 규제가 많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규제를 계속 줄여나가려는 노력과 함께 새로운 규제가 다시 생겨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규제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활동과 밀접한 관

련이 있는 핵심적 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데는 저 역시 동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효과가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기업의 수요가 큰 토지·금융·고용제도 등의 규제를 집중적으로 풀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이 같은 규제개혁을 위하여 정부와 연구기관 합동으로 '경제규제 완화 작업반'을 만들어 선진국 수준의 규제완화를 이루어 나간다는 목표하에 기초부터 재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규제가 생겨나지 않도록 법령제정시 신설규제에 대한 비용효과를 분석하고 규제입안자를 공개하는 규제실명제도 활성화해 나갈 것입니다.

—많은 기업체에서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고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여성들의 취업은 여전히 어

렵습니다. 우리가 선진경제로 나아가고 세계일류국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인구증가세의 둔화와 3D업종 기피 등으로 부문별로 인력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인력난에도 불구하고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싱가포르 등 경쟁국보다 낮은 48%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여성의 취업확대를 통해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고 여성의 지위도 향상되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88년 4월부터 「남녀고용평등법」을 시행하여 채용·배치·승진·해고·임금 등에 있어 남녀근로자의 차별을 금지하고,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여 여성근로자의 지위향상에 큰 진전을 이룩하였습니다.

또한 출산·육아기에 있는 여성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작년부터 「보육시설 확충 3개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조3천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이 계획이 차질없이 시행된다면 97년말에는 94년말보다 약 3배 정도 늘어난 62만명을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무원 여성채용목표제'를 도입하고 정부투자기관 등 공기업의 입사시험에 '여성 가산점제'를 시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성취업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사라져야 하고, 여성 자신이 남성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똑같이 경쟁하겠다는 투철한 직업정신을 갖

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화계에 몸담고 있으면서 느끼는 점입니다만,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문화비 지출부터 줄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부도 문화부문에 대한 예산지원은 상대적으로 불요불급한 것으로 인식하는 듯합니다. 진정한 세계화는 경제와 문화가 조화롭게 발전할 때 가능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문화부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많이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과거에 나라살림이 어려웠던 시절에는 문화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문화부문에 대한 지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문화체육부에 대한 예산증가율입니다. 95년의 경우 정부 전체의 예산 증가율이 15.6%인 데 비해 문체부 예산은 24%가 증가했고, 올해에도 정부 전체예산 증가율이 16%인 데 비해 문체부 예산은 25.1%나 증가했습니다. 물론 절대 규모로는 아직도 선진국들에 비해 미흡하다고 하시겠지만 정부에서 문화부문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문화부문 사업으로는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문화예술종합회관 건립, 영상산업의 핵심기지가 될 영화종합촬영소의 건립, 중앙박물관 신축, 한국문학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한 '한국문학세계화지원금' 신설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종전과는 달리 새로운 차원에서 문화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21세기는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선진경제,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이 균형을 이루는 사회,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국가를 이룩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제 4년 남짓 지나면 대망의 21세기에 접어들습니다. 21세기에는 우리도 세계일류국가가 될 수 있다는 희망에 가득차 있는데 이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려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도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21세기는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선진경제,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이 균형을 이루는 사회,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국가를 이룩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력을 양성하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정부규제 등 각종 제도와 질서도 국제규범과 국제수준에 맞게 개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통·환경 등 국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도 계속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기업들도 그동안의 저임금 의존적인 성장전략에서 벗어나 기술 개발력을 토대로 한 성

장전략을 추진해야 합니다.

아울러 무엇보다도 우리의 소득수준에 걸맞은 성숙된 시민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무거운 얘기만 나눈 것 같습니다. 늘 바쁘시겠지만, 혹 시간이 나실 때 취미생활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바쁘게 살아온 탓인지 특별히 취미라고 내세울 만한 것은 없고 시간이 나면 책을 많이 읽으려고 합니다. 딱딱한 전공서적보다 고전이나 수필집 같은 걸 읽으며 제 자신을 돌아보곤 합니다. 요즘은 개인적인 소망을 하나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와 나의 삶이 모두 軟着陸을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문명**

96년 경제운영, 이렇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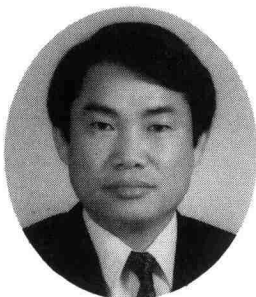
새해의 경제운영 방향

새

해를 전후하여 여러 곳에서 올해 경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경기는 전반적으로 둔화되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이며, 환율전망도 불확실하고 여기에서 비자금사건 여파, 총선 등 경제외적인 변수까지 겹치는 등 대내외적인 여건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인식에는 여러 전문가들과 큰 차이가 없으며, 지난 1월 5일 발표한 '96년 경제운영방향'도 바로 이러한 여건전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올해 경제운영방향을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지난해 경제운영성과를 간략히 평가해 본 후, 96년 경제운영 여건을 종합·점검하고 올해 경제운영방향을 설명하고자 한다.



한성택
재정경제원 종합정책과장

소비자물가는 높은 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서도 거시정책의 안정적 운영, 유통혁신, 농산물 가격의 안정 등으로 94년말에 비해 4.7% 상승에 그쳐 안정세를 보였으며 이 가운데서도 특히 농축산물가격의 안정

이 물가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經常收支는 높은 수출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적자폭이 85억달러 내외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수입증가가 주로 수출과 설비투자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수출용 원자재와 자본재 수입의 증가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내용면에서는 건실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높은 임금상승과 경쟁심화 등으로 노동집약적 경공업, 중소기업 설업, 영세사업자는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 9대시책(95년 2월) 등 중소기업 지원 및 경쟁력 강화시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올해부터는 성과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또한 不動産實名制를 실시하고 금

〈표〉 세계경제 전망

(단위: %)

	93년	94년	95년	96년
세계성장	2.5	3.6	3.7	4.1
세계교역량	3.9	8.7	7.9	6.5
油價(\$/b l)	16.1	15.5	16.7	15.5
(증가율)	(-11.5)	(-3.7)	(7.7)	(7.2)
국제금리	3.3	4.7	6.0	5.6
엔화환율(¥/\$)	111.2	102.3	93.6	104.4

註: 국제금리는 Libor 3-Month

자료: IMF, 95.10. 단 국제금리와 엔화 환율은 WEFA, World Economic Outlook, 95.11.

지난해 우리 경제는

9.3%의 높은 성장률 기록

지난해 우리 경제는 엔화 강세 등에 따른 수출증가와 설비투자의 큰 폭 증가로 9.3%의 높은 성장을 기록하여 수출이 1,200억달러를 넘어 서고 1인당 국민소득도 1만달러를 상회할 전망이다.

음실명제의 정착을 위한 세계개편을 추진하는 등 경제개혁도 꾸준히 추진하였으며, 3단계 금리자유화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외국인투자 5개년 개방계획도 수립·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농어민연금제 및 고용보험제의 도입으로 선진국형 사회보장체계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한 해였다.

非交易 부문에서의 효율성이 국가경쟁력을 좌우

올해 世界經濟는 95년에 이어 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제 원자재가격·금리 등이 안정될 전망이어서 전반적인 대외여건은 작년과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제곡물가격, 엔화 환율 등의 변동추이는 향후 우리 경제의 불확실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WTO체제의 본래도 진입과 더불어 개방압력이 자동차·금융·통신·서비스 등 경제 각 분야로 확산될 전망이다. 또한 국가간 경쟁의 준칙이 동일한 기준으로 수렴되고 자본·인력 등 생산요소와 기업들의 유출입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국가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공서비스, 사회간접자본, 임금수준 및 근로자 생산성 등 非交易 부문에서의 효율성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국내경제의 흐름을 보면, 수출과 설비투자는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나 규모면에서는 상당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그러나 엔화 약세가 장기간 지속되고 자본자유화에

올해의 경제운영은, 물가안정 바탕 위에 經濟活力이 지속되도록 하면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경쟁력강화 기반의 확충에 중점을 두는 한편 경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경제제도와 질서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부문간 均衡發展에도 주력할 것이다.

다른 환율절상 압력이 증대하는 경우 수출의 지속적인 신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物價與件은, 총수요 및 국제원자재가격의 안정 등은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나 작년 작황호조를 보였던 농산물 작황이 소위 해거리 영향으로 부진할 경우 가격반등이 우려되며, 자본자유화에 따른 해외자본유입 확대, 총선 등의 불안요인도 상존하고 있다.

勞動市場은 부문별 인력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민노총의 출범 등으로 선명성 경쟁이 확대되는 경우 임금 및 노사관계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개방확대와 경쟁촉진, 유통혁신 확산 등으로 景氣兩極化 현상이 계속되어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지속될 전망이며, 외환 및 자본자유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주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말 前職大統領의 부정축재사건 이후 경제의 공

정성·투명성 확보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크게 증대하고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넘어서게 됨에 따라 생활환경의 개선과 복지 증진 등 삶의 질 향상 욕구가 확대되고 있다.

한편 개방화·자유화·지방화의 진전으로 정책수단의 제약요인이 늘어남에 따라 정책운용방식의 전환과 더불어 보다 효율적인 정책의 발굴·추진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물가안정 지속과 景氣軟着陸 유도

올해 경제운영은, 향후 2~3년을 내다보는 시각에서 물가안정 바탕 위에 經濟活力이 지속되도록 하면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경쟁력 강화 기반의 확충에 중점을 두는 한편 경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경제제도와 질서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부문간 均衡發展에도 주력할 것이다.

97~98년에 선진국형 低物價構造(3%대)의 정착을 목표로 거시경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되, 수출과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수단간의 종합적 연계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通貨는 물가안정에 초점을 두어 안정적으로 공급하되, 경기·금리·환율 등 관련지표의 추이를 보아가며 신축적으로 운용해 나갈 것이다. 특히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中小企業에 대한 자금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통화관리방식도 개방경제체제에 부합하도록 공개시장

조작 활성화 등 간접통화관리방식 정착을 위한 노력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財政은 건전재정기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신축적인 예산집행을 통하여 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방지해 나가 고자 한다. 즉, 도로·항만 등 사회 간접자본과 중소기업 관련 재정투자 사업을 조기집행하고 民資誘致事業의 활성화 및 조기투자를 유도할 것이다.

換率은 외환수급사정을 반영하되 경기·국제수지 등 실물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시장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景氣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하강하는 경우에는 내수진작보다는 수출, 사회간접자본, 설비투자, 기술개발 등 實物部門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景氣兩極化 완화와 구조조정 지원

최근 경기양극화로 표현되고 있는 부문간의 成長隔差는 그동안의 높은 임금상승, 개방과 규제완화에 따른 경쟁심화, 소비패턴의 고급화 등에 따른 경제구조의 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構造調整을 원활히 하고 경영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중소기업 構造調整 지원 강화

정부는 중소기업의 시설자동화·정보화 등 구조개선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構造改善資金을 93년부터 매년 1조원씩 지원해 오고 있으나 올해에는 당초계획 1조원에서 1조5천억원으로 증액하고 소진상황을 보아가며 2조원까지 증액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産業銀行의 중소기업에 대한 설비자금지원제도를 신설하여 시설자금 5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創業을 촉진하고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轉業을 적극 유도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창업보육센터 건립을 확대(95년 : 5개 → 96년 : 10개)하기 위하여 재정·세제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첨단업종, 기술집약형기업 등 유망한 창업기업 등에 대해 기술개발자금을 확대 지원해 나가는 동시에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상의 유인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中小流通業 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설현대화 및 협업화사업 등에 대해 재정·세제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제품에 대해 관세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관계의 확산을 유도해 나가는 등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에도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政府出捐을 확대(95년 : 4,100억원 → 96년 : 5,000억원)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信用貸出 기반을 확충하고 우수한 기술

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대해 금융 지원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기술평가 및 보증제도도 개선해 나갈 것이다.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의 연쇄부도 방지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中小企業共濟事業基金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95년 : 200억원 → 96년 : 400억원)하고, 貸出도 1호대출(부도 어음 소지에 대한 대출) 중심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경쟁력이 취약해진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유망 유치품목 및 경공업 제품에 대하여 讓許稅率 범위내에서 관세율 체계를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대기업이 수탁기업체 협력기금에 출연시 손비로 인정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인력개발지원 비용에 대해 稅額控除(10%)를 도입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관계 강화를 유도해 나갈 것이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시책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우선 잠재인력을 산업인력화하여 중소기업에 중점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익근무요원 1만3천명, 전경 4천명을 각각 축소조정하여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을 확대(95년 : 3만5천명 → 96년 : 3만9천명)하는 동시에 이들 대부분을 중소기업에 배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올해 안에 4,800억원을 지원하여 보육시설 2,700여개소를 확충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부당 스카우

트에 대한 자율규제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애써 양성한 인력들이 대기업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을 신설

중소기업 문제를 汎 경제부처 차원에서 대처해 나가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 등으로 '中小企業對策會議'(의장: 경제부총리)를 신설하여 주요 중소기업시책을 확정·추진하고 중소기업청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동 대책회의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대책 점검반'(반장: 재정경제원차관)을 운영하여 그동안 발표된 중소기업지원 시책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함으로써 중소기업시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

농어업 경쟁력 강화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정부는 개방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의 경쟁력강화 노력도 꾸준히 전개함으로써 부문간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하여 94년 6월에 발표한 「農漁村發展對策」을 토대로 농업생산기반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농어촌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경제개혁의 추진과

기업환경의 개선

경제개혁의 끊임없는 추진과 함께 기업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반시책을 마련·추진해 나

97~98년에 선진국형
低物價構造(3%대)의 정착을
목표로 거시경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되, 수출과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수단간의
종합적 연계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갈 것이다.

金融 및 不動產 實名制의 정착과 稅政의 선진화

지난 93년에 실시된 금융실명제와 95년에 실시된 부동산실명제는 개혁 중의 개혁조치로서 경제정의 실현의 기틀을 마련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양대 실명제가 생활 속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동시에 金融所得綜合課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의 전산능력을 제고하고 실명제에 대한 교육·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신용을 바탕으로 한 경제거래질서의 정착을 위해 개인 및 기업에 대한 信用情報가 체계적으로 수집되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여 신용정보 유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稅政의 선진화를 위해 정부부와 및 지도신고제에서 자율신고

납부제도로 전환하고 97년 稅政 통합전산망의 가동을 목표로 과세자료를 개인별·기업별로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관련제도의 선진화 및

經濟力集中 완화

전직 대통령 비자금사건을 계기로 정경유착의 고리를 단절하고 경제질서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업제도도 선진화해 나가는 동시에 경제력집중 완화 시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企業公示제도 개선하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등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제고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위하여 개별적 행위규제는 완화하되 經濟力集中 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기업집단의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시정에도 철저를 기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유효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경쟁제한적인 수입관련제도 및 유통구조 등도 꾸준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規制改革의 지속적 추진

앞으로 규제완화를 改革次元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업계·연구기관 합동으로 '경제행정규제완화작업반'을 구성하여 선진국(예: 미국, 영국, 독일, 싱가포르, 뉴질랜드) 수준의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96년에는 금융·고용제도 등 정책적 분야에 대한 규제완화도 과감히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法定 의무고용 분야 중 안전관리와 직접 관련이 없고 제도유지의 실익이 없는 분야는 의무고용을 철폐하는 등 제도개선을 해 나갈 계획이다.

賃金 및 노사관계의 안정과 인력수급의 원활화

정부는 올해 임금안정을 위해 생산성향상 범위내에서 임금교섭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대기업 등 고임금 부문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성과배분제도의 모델 개발·보급 및 성과배분제 실시성공 업체의 발굴·홍보 등을 통하여 성과배분제도의 확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작년부터 확산되고 있는 노사협력분위기를 바탕으로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고 노사관계의 법·질서·원칙을 확립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시간제근로의 활성화 및 고용정보체제의 확립 등을 통하여 勞働市場의 유연성을 제고해 나가고 인력양성이 산업계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훈련직종을 조정하고 훈련수준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公企業의 고령자 적합직종을 95년 20개에서 96년부터 40개로 늘리고 高齡者 고용비율(95년 : 26.6% → 96년 : 40%)도 제고하는 한편, 장애인복지공장 등에 대한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지원을 확대하여 인력공급확대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金利의 하향안정과 금융산업의 경쟁력 기반 조성 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을 줄이고,

금융시장 개방에 따른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일층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자금기수요 등에 의한 금리상승을 방지하고 외환제도 개혁 및 자본자유화의 효율적 추진으로 内外金利差의 축소를 유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규제완화, 효율적인 개방추진 등으로 금융산업의 경쟁추진을 유도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여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기관 경영평가 및 公示制度 등을 개선하고 96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예금자보호 제도 및 선물거래 제도의 조기정착을 도모해 나갈 것이다.

기술개발과 資本財산업의 육성

기술개발의 뒷받침 없이는 산업의 국제경쟁력 유지가 어려우며, 자본재산업이 발전하지 않고서는 수입유발적 수출구조 또한 개선되기 어렵다.

정부는 기술개발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경쟁적 연구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研究管理實名化制度(프로젝트베이스 시스템)를 확대해 나가고 창조적 고급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高等科學院을 설립·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하부구조확충 5개년계획」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탄력적인 기술기반공급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資本財産業 육성을 위하여 국산기계 구입 및 리스용에 대

한 外貨貸出을 실시하는 등 국산기계에 대한 수요기반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보화 촉진과 물류개선 강화

미래는 정보화 사회다. 정부는 국가사회의 정보화사업을 가속화해 나가는 동시에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96년 3월까지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업활동 및 기술개발지원 등 국가경쟁력 강화와 직결된 정보화사업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超高速國家通信網을 기존의 22개 주요 도시에서 80개 도시로 확대하되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고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요인의 하나인 고물류비용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하여 사회간접자본투자 확충 등을 통한 물류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단과 주요 수송구간의 物流隘路 해소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특히 공업단지 주변 국도 및 고속도로 수송망을 조기에 확충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공단기반시설(공단진입도로, 용수공급시설, 하수처리장 등) 확충사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올해 안에 綜合物流情報網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육상·해상·항공의 연계수송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公共 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 지속

정부 부문에 경영원리를 과감히 도입하여 예산·조직·인력관리의

생산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며 대형 장기 계속공사에 대한 繼續費제도의 활성화 등 재정지출의 효율성도 높여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생산성향상 작업반'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생활경제의 안정과 質 향상

생활물가의 안정과 교통 및 환경 개선, 복지증진 등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질적 향상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공산품의 국내외 가격차 축소를 위하여 병행수입을 허용하는 등 경쟁촉진을 통해 공산품가격의 인하를 유도해 나갈 것이다.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농협 계약매매사업을 확대하고 대형유통업체와의 직거래 및 低價割引賣場의 개설을 유도하는 한편, 개인서비스 요금의 편승·담합인상을 철저히 단속하여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대도시 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도시철도 중심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불필요한 교통수요도 줄여나가는 정책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맑은 물의 중장기적인 안정공급을 위하여 다목적댐의 추가개발, 광역상수도 시설의 확충 등을 추진하고,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지속적으로 건설해 나갈 계획이다(하수처리율: 95년 45% → 96년 50% → 2005년 80%). 또한 LNG 등 淸淨燃料의 공급을 확충하고 급증하는 자동차로 인한 스모그 등 대기오염 저감에 주력해 나갈 것

이다.

'삶의 質 세계화'를 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식품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生計保護를 98년까지 최저생계비의 100%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목표하에 우선 올해에는 80% 수준으로 확대하고, 노인·장애인에 대한 醫療保險·醫療保護 급여기간 제한을 철폐하여 연중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식품안전관리 전담조직의 신설, 식품회수제도의 도입 등으로 危害食品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經濟世界化의 지속적 추진

올해는 WTO체제가 본래도에 진입하게 되고 우리나라의 OECD 가입 추진도 본격화되는 해이다. 앞으로 OECD 加入 협의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세계화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OECD 規範은 발전적으로 수용하되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하고, 기본통신과 해운협상 등 WTO 후속협상에서 우리의 개방계획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환경·노동·경쟁 등 새로운 국제적 논의의제에 대한 입장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95년 APEC 오사카頂上會談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행동계획 작성 등 관련 후속조치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개도국과의 협력증진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확대지원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개방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과 같은 시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경우 올해 우리 경제는 95년의 고성장국면에서 안정적 조정국면으로 軟着陸함으로써 경제성장·물가·국제수지가 보다 균형있고 조화로운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경제성장은 신축적인 정책대응으로 잠재성장률 수준(7~7.5% 내외)으로 적정화될 전망이며, 소비자물가는 95년보다 낮은 4.5% 내외에서 안정되어 97년 이후 3%대의 선진물가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經常收支는 적자폭이 50~60억달러로 축소되어 對内外 불균형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각종 經濟改革이 생활 속에 정착됨에 따라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확충되고 국민생활이 안정되는 가운데 생활여건도 꾸준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정**

실천하는 친절행정
쌓여가는 국민신뢰

96년 경제운영, 이렇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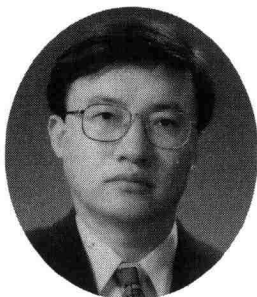
경기양극화 완화와 구조조정 지원

95년도 우리 경제는 엔高 현상 등에 따른 수출증가와 설비투자의 호조로 9.3%의 높은 성장을 기록하여 수출이 1,200억달러를 넘어서고 1인당 국민소득도 1만달러를 상회하는 등 우리 경제의 외형적 규모는 선진국대열에 진입할 수 있을 만큼 커졌다.

올해에는 엔貨 약세가 지속되고 자본자유화에 따른 환율절상 압력이 계속 증대할 경우에는 수출 등 경제 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는 있지만, 대체로 국내경제의 전반적인 흐름으로 볼 때 수출과 설비투자는 상당한 수준을 나타낼 전망이다.

경기양극화 현상으로 중소기업의 부도 급증

이와 같이 우리 경제는 주로 수출과 투자가 경제확장을 주도해 나가고 있고 물가도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실한 성장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또다른 측면에서 볼 때, 중화학공업은 두 자리수의 성장과 수출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경공업 등 일부 산업은 경기활황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생산 감소 등 경



전상우
통상산업부 산업정책과장

기부진을 면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의 경우 부도업체수가 급증하고 있는 등 이른바 경기양극화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의 어음부도율은 94년부터 비교적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95년에는 계속 0.2%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부도업체수에 있어서도 95년 1~10월중 1만1,416개를 기록, 전년동기에 비해 무려 2,397개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부도업체 중 중소기업 부도가 전체의 99.9%를 차지하고 있고 업종별로는 중화학공업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경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건설업 및 유통·서비스업 부문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업종간 경기양극화는 지난 80년대의 경기확장기와 비교하여

〈표 1〉 산업별 생산증가율 추이

(단위: 전년동기 대비, %)

	92년	93년	94년	95년		
				1/4	2/4	3/4
국내총생산(GDP)	5.1	5.8	8.4	9.9	9.7	9.9
제조업	5.1	5.0	10.4	12.9	11.1	11.6
중화학공업	7.6	8.6	13.0	16.4	14.8	17.4
경공업	-0.3	-3.2	3.6	2.8	0.9	-3.1
총수출	6.6	7.3	17.1	31.7	34.6	36.6
중화학제품	11.7	13.0	21.4	38.3	43.9	46.6
경공업제품	-0.9	-2.3	6.3	13.9	9.9	7.5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수원

볼 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 당시에는 비록 중화학공업의 생산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경공업도 약간의 격차를 둔 채 증가세를 보여 왔으나, 이번에는 반대로 경공업의 생산이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경기양극화는 선진화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

현재의 경기양극화 현상의 원인에 대해서는 경기변동적 측면, 산업조직 측면, 인력 및 금융적 요인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경기변동적 측면에서 현재의 경기확장기 동안의 산업간 설비투자 추이를 살펴보면, 기술집약적 중화학 분야에 상대적으로 설비투자가 집중되었으며, 특히 자동화투자 등이 90년대 들어 더욱 늘어남에 따라 중화학 분야는 생산성 향상, 경쟁력 강화, 수출증가, 설비투자 확대라는 선순환이 발생하는 반면, 경공업 분야는 설비투자 감소, 경쟁력 약화, 낮은 수출증가율, 설비투자 감소라는 악순환이 발생한 때문이라 분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산업조직 또는 구조조정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리나라 전체 GDP에서 서비스 부문의 비중이 점

우선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경쟁력 강화, 경영안정 등을 위한 장·단기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다음으로 산업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경공업 부문도 성장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 또한 중소유통업이나 중소건설업 등에 대한 지원대책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차 높아지고 있는 반면, 제조업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제조업내에서도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경공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제조업내의 업종들 간에도 발생하고 있어 경제의 이중구조화를 초래하고 있다.

경기양극화의 또다른 원인으로서 인력 및 자본의 수급문제를 들 수 있다. 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생산활동에 따른 파생수요(derived demand)이므로 경제성장의 속도와 구조에 따라 양적·질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받는데, 노동력의 공급이 이

러한 수요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데서 인력수급에 차질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또한 금융 등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아직도 왜곡되어 있어 자본수급이 원활하지 못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화학공업과 경공업 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인해 경기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경기양극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에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있다고 하겠다.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경기양극화는 고비용구조로의 이행에 따른 국내 산업간 성장성·생산성 차이 및 개방과 규제완화에 따른 경쟁심화, 소비패턴의 고급화 등 우리 경제가 선진화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구조적인 현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단지 이러한 경기양극화 현상이 더욱 확대되고 장기화된다면 금년도 우리 경제는 경기연착륙에 실패할 우려가 있고, 또한 경기가 연착륙하더라도 업종에 따라서는 경기둔화의 폭이 상대적으로 더욱 크고 중소기업의 어려움도 가중될 것이 예상되므로 경기변동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장단기 중소기업 지원시책 등 경기양극화 완화대책 마련

정부에서는 경기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경쟁력 강화, 경영안정 등을 위한 장·단기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착실히

〈표 2〉 제조업 중 중소기업 부도업체수 추이

(단위:개, %)

	92년	93년	94년	95년 1~10월
중화학공업	887(27.3)	747(26.2)	813(26.0)	629(22.0)
경 공 업	2,367(72.7)	2,099(73.8)	2,315(74.0)	2,383(78.0)
제 조 업	3,254(100.0)	2,846(100.0)	3,128(100.0)	2,862(100.0)

註:괄호 안은 비중임.



추진해 나가고, 다음으로 산업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경공업 부문도 생산성 향상과 고부가가치화를 통하여 성장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지원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부문에 대한 지원대책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중심으로 시책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지원 강화

중소기업의 자동화·정보화·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93년부터 지금까지 3년 동안 총 약 3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였는데 앞으로 97년까지 2

년 동안에도 최대 2조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산업은행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장기저리의 시설자금으로서 5천억원(연리 9~10% 수준, 대출기간 최장 8년)을 별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진흥공단내에 '자동화센터'를 3월에 개원하여 자동화진단, 지도 및 교육을 본격 실시하고 중소기업 정보은행기능을 확충하여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기능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와 아울러, 구조조정과정에서의 경쟁력 있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창업보육센터'를 현행 5개에서 10개로 늘리고 첨단업종·기술집약형 등 유망한 창업기업에 대해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통하여 기술개발자금을 확대지원하는 한편, 사업전환 및 개인

사업자의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50%)을 비제조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제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재래시장 개발시 시설건축비의 50%를 지원하고 재래시장에서 이전·재건축시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해 줄 방침이다. 이와 아울러, 중소기업자단체의 공동구매사업과 소규모점포의 시설개선사업을 위해 금년에 7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공동집배송단지 및 공동창고를 건립할 때에는 유통근대화자금을 활용하여 공사비의 30%를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

경기연착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불안정을 최소화하고 유망한 중소기업이 일시적

경영난으로 도산하는 일이 없도록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시책이 필요하다 하겠다. 즉, 연쇄부도 등 외부요인에 의해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출연을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의 신용대출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대해 금융지원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기술보증제도를 개선토록 하는 한편, 중소기업자가 부금에 가입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부금액의 10배 범위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에 대해서도 제도개선 및 정부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연쇄부도 방지기능을 최대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같은 금융지원과 함께 세계 지원에 있어서도 유망 유치품목 및 경공업제품에 대하여 양허세를 범위 내에서 관세를 체계를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한바, 이를 위하여 대기업의 수탁 기업체 협력기금에 출연시 이를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포함하여 손비로 인정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해 지출하는 기술인력개발 지원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10%)를 해주기로 확정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상담을 위하여 올해 1월에 시·도별로 '경영애로 지역대책 협의회'를 구성하였다. 특히, 작년에 이어 금년도 통상산업부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중소기업의 자동화·정보화·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97년까지 2년 동안에 최대 2조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산업은행에서도 장기저리의 시설자금으로서 5천억원을 중소기업에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순회 종합상담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지역내 다수 중소기업의 공통 경영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한편, 정부는 이러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경영안정 지원계획의 수립절차 및 사업전환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금년 1/4분기중에 마련,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

정부는 중소기업의 심각한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잠재인력을 산업인력화하여 중소기업에 중점 공급할 계획이다. 즉, 금년에는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을 약 4만명 가까이 늘리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확대를 위해 보육시설의 확충 및 현대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인력채용희망 중소기업체와

취업희망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중소기업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채용정보를 상호교환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인력 부당 스카우트를 방지해 나가는 한편,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도입을 확대하여 96년중에는 1만명의 추가인력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 및 규제개혁 추진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은 결국 전체 국민경제의 범위 안에서 상호 연관되어 있으므로 물가·생산·투자·부동산·노사 등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을 통한 물가안정기조의 유지와 경기연착륙 유도 또한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97~98년에 선진국형 저물가구조(3%대)의 정착을 목표로 거시경제 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되, 수출과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수단간의 종합적 연계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제까지의 단편적·절차적 규제완화를 지양하고 개혁차원의 규제개혁으로 강화하여 WTO체제 출범 이후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규제개혁은 제조업·유통 등 산업 부문은 물론, 교육·법률·서비스 등 모든 분야에서 동시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으므로 정부는 관계부처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총체적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96년 경제운영, 이렇게 한다

맑은 물의 안정적 확보

맑

은 물의 안정적 확보는 삶의 질 향상과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풍요로운 미래를 보장하는 기본적인 요건이다. 특히, 선진국 진입단계에 와있는 현 시점에서 국민들의 깨끗한 환경에 대한 욕구는 점차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규모의 확대 및 산업화 진전에 따라 오염원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이상 기상에 따른 가뭄의 빈발 등으로 하천수질의 관리여건은 점점 나빠지고 있는 실정이다.

불리한 물관리 여건 극복하고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국내 물관리 여건은 계속적으로 악화될 전망이다. 유기용제 등 각종 수질오염물질의 대량 생산·유통·폐기의 증가로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하는 등 96년도 물관리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수질의 악화 및 수질오염사고 위험의 증가이다. 환경기초시설의 집중설치 및 규제강화에도 불구하고 개발확대 및 오염물질의 지속적 증가 등으로 인해 상수원의 수질이 계



박대문
환경부 수질정책과장

속적으로 악화될 전망이다.

또한 산업발전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물수요가 급증할 것이며, 이에 따라 하천유지용수의 부족으로 수질오염의 우려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둘째, 상수원 상류지역을 엄격히 관리함에 따라 상·하류 간의 마찰이 심화될 전망이다. 지방자치제의 본격 실시로 자치단체는 재정수입 증대를 위한 지역개발에 더욱 열을 올릴 것이며, 물사용 및 보전을 둘러싼 수혜자와 원인자 간의 비용분담 문제로 하천수계 상·하류 간의 상반된 이해관계가 더욱 첨예하게 대립될 것이다.

셋째, 낙동강·영산강 등 하류지

역의 수질오염도가 가중될 것이다.

하천의 유지용수가 부족하고, 오염원의 증가 등으로 낙동강·영산강 등 주요 지천 및 하류지역의 수질오염도가 가중되고, 폐수배출량의 증가로 인해 하수처리장·폐수중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처리용량 부족이 심화될 것이다.

넷째, 해양오염사고 및 적조발생 우려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른 운항선박 및 해상물동량의 증가, 양식어업의 기술개발로 인한 양식장 면적확대 및 밀식양식, 육상오염물질의 유입량 증가 및 연안지역 환경기초시설 부족 그리고 해양환경 관련부처의 다원화 등으로 금년에도 해양오염사고 및 적조발생의 위험성은 계속 상존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고 수질오염사고 방지를 위한 예방기능을 강화하고, 개발욕구와 수질보전시책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키며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96년 물관리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삼고 수질을 깨끗하게 보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기본방향 아래 물 보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환경기초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상수원 상류지역 관리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수질오염사고 예방기능을 강화하고, 해양환경보전 정책총괄기능 등을 올해의 역점과제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역점 추진과제별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물 보전·관리체계를 강화

물 보전·관리체계의 강화이다. 하천 및 호소의 오염물질 증가로 인한 부영양화와 해양적조 방지를 위하여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질소·인에 대한 규제도 실시할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공업지역의 경우 BOD 기준 150mg/l에서 120mg/l), 질소·인 규제를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은 96년부터, 주요 호소 및 정체수역 영향권역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97년부터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하천에 거품을 발생시키는 계면활성제에 대한 규제도 시행할 것이다. 이와 함께 종래 농도기준규제의 배출부과금제에서 배출총량에 따른 부과금제로 전환하여 오염물질 삭감을 유도할 것이다.

정부는 물 보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환경기초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상수원 상류지역 관리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수질오염사고 예방기능을 강화하고, 해양환경보전 정책총괄기능 등을 올해의 역점과제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환경기초시설을 조성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적정한 수량의 확보, 오염물질을 저감시키기 위한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등 환경기초시설을 조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맑은 물 공급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동 대책은 총 31개 과제로서 투자사업 11개, 시책과제 20개로 구성되어 있다. 대책기간 동안에 총사업비 15조9천억원을 투자하여 상수원의 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597개소를 확충함으로써 97년까지 하수처리율을 73%로 개선하고, 지역의 균형개발에 따른 용수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8개소의 다목적댐 건설과 21개소의 광역상수도를 건설하며, 급·배수관의 노후화로 수도물 급수과정에서의 수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급·배수관 2만km를 교체할 계획이다.

또한 맑은 물 공급대책과 병행하여 추진기로 한 4대강 수질관리개선 대책은 맑은 물 공급 종합대책사업 중 환경기초시설, 광역상수도 확충 등 투자시기를 앞당겨 상수원의 수질을 우선적으로 개선하기로 하고, 광역상수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수질이 좋지 않은 지역의 정수시설에 대해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동 대책은 환경기초시설의 투자시기 단축과 동시에 투자비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에서 국고보조 또는 전액 융자지원함으로써 투자재원 부족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 등의 문제해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는 총사업비 3조4,200억원을 투자하여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하여 환경기초시설 216개소를 건설하고, 양질의 용수공급을 위하여 4개소의 다목적댐과 13개소의 광역상수도를 건설할 계획이며, 노후화된 급배수관 2,591km 개량,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등 상수도시설을 개선할 계획이다.

〈표 1〉 강화되는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단위: mg/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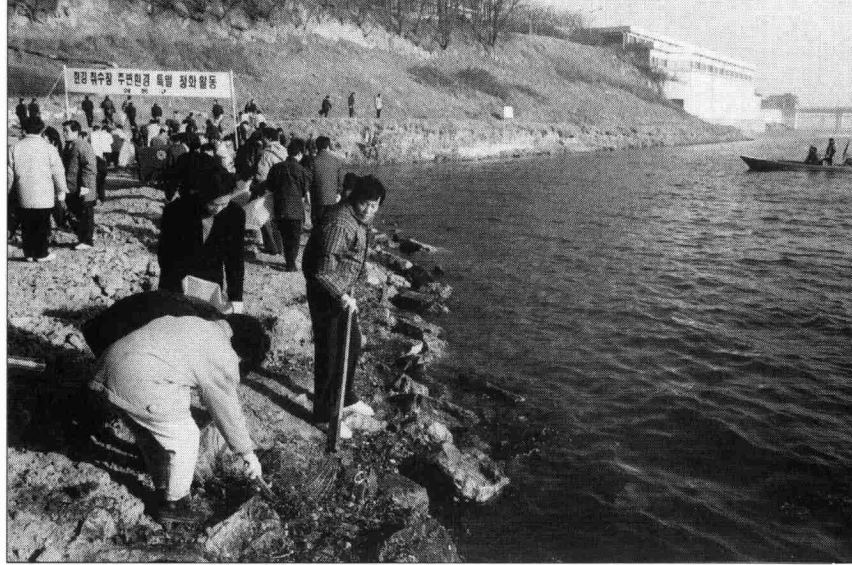
폐수배출량	2,000m ³ /일 이상			2,000m ³ /일 미만		
	BOD	COD	SS	BOD	COD	SS
청정	50→30	50→40	50→30	50→30	50 유지	50→40
가	80→60	80→70	80→60	100→80	100→90	100→80
나	100→80	100→90	100→80	150→120	150→130	150→120
특례	30 유지	50→40	70→30	30 유지	50→40	70→30

註: 96년 1월 1일부터 시행

상수원 상류지역 관리제도를 개선

상수원 상류지역의 관리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공공규제지역 중의 하나이다. 구역내 주민들은 각종 행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제약으로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반면에 규제지역 외의 일반국민은 상수원의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어 이의 합리적인 해결책이 현안과제가 되고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하여 금년부터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에 대하여 육영사업 등 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보호구역내 거주주민의 주택·영농시설 등의 설치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구역내 거주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관계규정을 보완개정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상수원보호구역규정의 신중한 검토 및 주민지원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등을 통하여 규제지역 주민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오염자부담 원칙을 기본으로 하되 특별한 희생을 감수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수혜자 부담폭을 넓혀 규제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수질오염사고 예방기능 강화하고 해양오염방지 종합대책을 마련

상시자동감시체계의 확충, 폐수시 문제도의 실시 및 산업폐수 10% 줄이기 운동의 확산 등 산업폐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수질오염사고 유형별 시나리오 작성·훈련실시, 사고방지 감시활동의 강화 등 수질오염사고 위기관리 대처능력을 제고하며, 유기용제 등 수질오염사고물질을 추적 관리하는 등 수질오염사고 예방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유류유출사고 예방과 赤潮 방지를 위하여 해양오염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

다. 유류유출사고에 대한 대책으로는, 해상방제업무를 일원화하고 유조선의 안전운항체계를 강화하며, 민간주도의 해양오염방제 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체계적인 초기방제를 구축하는 한편, 방제기술개발 등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방제작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 등에 해양오염방제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적조방지대책으로는, 연안오염 특별관리해역을 지정·관리하고 연안지역에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집중 설치하여 적조발생의 주원인이 되는 질소·인 등 영양물질의 유입을 근본적으로 줄여 나갈 계획이다.

수질보전은 환경정책의 최우선을 두고 추진하여야 할 사안이며, 특히 상수원의 수질만은 다소의 불편이 있더라도 꼭 지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것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우며 정부·기업 및 국민개개인이 모두다 한 마음이 되어 수질을 지키겠다는 마음을 같이할 때 가능할 것이다. **문정**

〈표 2〉 맑은 물 공급 종합대책 투자사업비 현황

		(단위:억원)
	주요 사업 내용	사업비
• 상 수 원 수질개선대책 • 광역 상수도 공 급 확 대 • 상 수 도 시 설 개 량	• 환경기초시설 확충(4개)	53,903
	• 생활환경개선대책(3개)	18,755
	• 상수원댐 건설	14,620
	• 광역수도 건설	19,047
	• 노후 정수장 및 상수도관 개량	44,443
	• 고도처리시설 설치	47,935
계		159,788

96년 경제운영, 이렇게 한다

참여 · 협력의 새로운 노사관계 구축

80

년대 이후 세계 주요국의 노사관계가 급변하고 있다. 세계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업간·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노사는 대립과 갈등의 관계가 모두의 생존을 어렵게 한다는 깨달음을 바탕으로 새로운 동반자적 노사관계를 열어 나가고 있다.

주요 선진국 정부도 국민경제의 생산성을 극대화하여 기업발전과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동반자적 노사관계의 정착을 주요 과제로 삼고 노사관계의 변화와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반자적 노사관계로의 변화가 세계적 추세

이러한 세계적인 변화의 물결은 우리의 최근 노사관계에도 미치고 있다. 지난해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산업현장의 노사협력 분위기로 전국의 3천개 가까운 기업체와 근로자 45만명이 노사협력 선언에 참여하였다. 이는 경쟁력 확보를 통한 노동동반 성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합리적 노동운동의 확산에 힘입은 바 크다고 생각된다.



장재구

노동부 부이사관

※ 필자가 이 글을 쓸 당시에는 노정과장이었음.

이러한 '노사협력'의 분위기로 95년도의 노사관계는 당초 지방선거, 민노총(준)의 활동에 따른 노동계의 선명성 경쟁 등으로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전체적으로 안정기조를 유지하였다. 종래 대형 노사분규를 주도하였던 현대중공업, 대우중공업 등의 노동조합에서 집행부의 강경투쟁 일변도에 제동을 거는 사례도 있었고, 기아자동차, 서울대병원 등 주요 기업에서 분규 없이 임금·단체교섭을 타결하기도 하였다. 노사분규와 관련된 지표도 90년대 들어 지속적 노사안정 추세가 지난해에도 계속되었음을 보여준다(〈그림 1〉 참조).

또한 임금교섭도 대체로 빠르고

원만하게 진행되었고, 경기활성화 등으로 협약임금인상률은 94년도의 7.2%보다 약간 높은 7.7%, 실제임금인상률은 94년도의 12.7%보다 약간 낮은 12.5% 내외로 전망된다(〈그림 2〉 참조).

올해의 노사관계도 전반적으로 이러한 노사협력분위기와 노사안정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87년 이후 폭발적인 노사갈등을 경험하면서 노·사 양당사자가 노사관계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였고, 노동단체간 분열과 경쟁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노동운동의 기저는 전반적으로 합리적·실리적 노동운동을 추구해 가는 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안정요인들 가운데에서도 금년도 노사관계를 둘러싼 불안요인들이 다소간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전반적으로 경기가 수축기에 진입함에 따라 임금교섭에 애로가 예상되고, 95년 11월 발족한 민노총과 한국노총이 총선과 임금·단체교섭 집중시기를 전후하여 경쟁적으로 선명성 확보와 정치세력화를 모색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근로자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을 동시에 높이는 것이 과제

금년도는 87년의 폭발적 노사갈 등 이후 10년째를 맞이하는 해임과 아울러 21세기를 불과 몇년 앞두고 있는 해이다. 이제는 급변하는 국제 노동환경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과 기업·국가경쟁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협력적 노사관계를 정착시켜야 함과 아울러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노사관계의 법·질서·원칙을 확립하여야 할 시점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 치열해져 가는 국제경쟁을 배경으로 노동관련 문제를 무역과 연계하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대응하여 우리의 국익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노동외교의 강화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참여와 협력'의 새로운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노사협력과 안정에 모범이 되는 우수업체에 대하여는 금융·세제·인력·포상 등 정부의 각종정책에서 우대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노사협력 우수업체는 금융·세제 등에서 우대
금년도 이후의 새로운 노사관계 구축방향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하여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노·사 및 각계가 참여한 가운데 대대적인 노사관계 토론회가 개최된 바 있다. 토론회는 '세계화시대의 새로운 노

사관계'와 '노사 동반 성장을 위한 임금·복지'라는 두 가지 주제하에 전국 주요도시에서 개최되어 새로운 노사관계 발전 방향에 관하여 각계의 지혜를 모으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토론회를 주관한 '노사관계발전 대토론회 추진위원회'에서는 토론회 결과를 종합한 건의안에서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경쟁력의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하여는 참여·협력적 노사관계로의 발전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노사가 자기 몫을 키우기 위해 상호 대립·대결하기보다 공동의 몫 또는 공동선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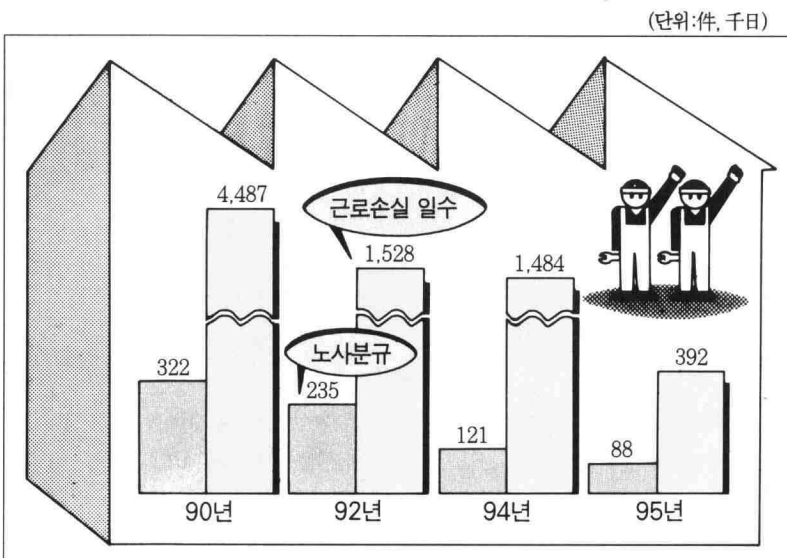
정부는 대토론회에서 도출된 각계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참여와 협력'의 새로운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지난해부터 일기 시작한 노사협력 분위기의 지속적 확산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노사협력과 안정에 모범이 되는 우수 업체에 대하여는 금융·세제·인력·포상 등 정부의 각종정책에서 우대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또한 노사협력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감으로써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에 관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고자 한다.

중앙노사협의회 활동을 활성화

새로운 노사관계를 열어나가기 위하여는 노·사·정 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

〈그림 1〉 노사분규 관련 지표추이





다는 점을 고려, 지난 수년간 사실 상 활동이 중단되었던 '중앙노사협의회'를 활성화하여 명실상부한 노·사·정의 최고협의기구로 정착 시킴으로써 임금·노사관계 전반에 걸친 주요 현안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 그리고 정부간 이해와 협조를

증진시켜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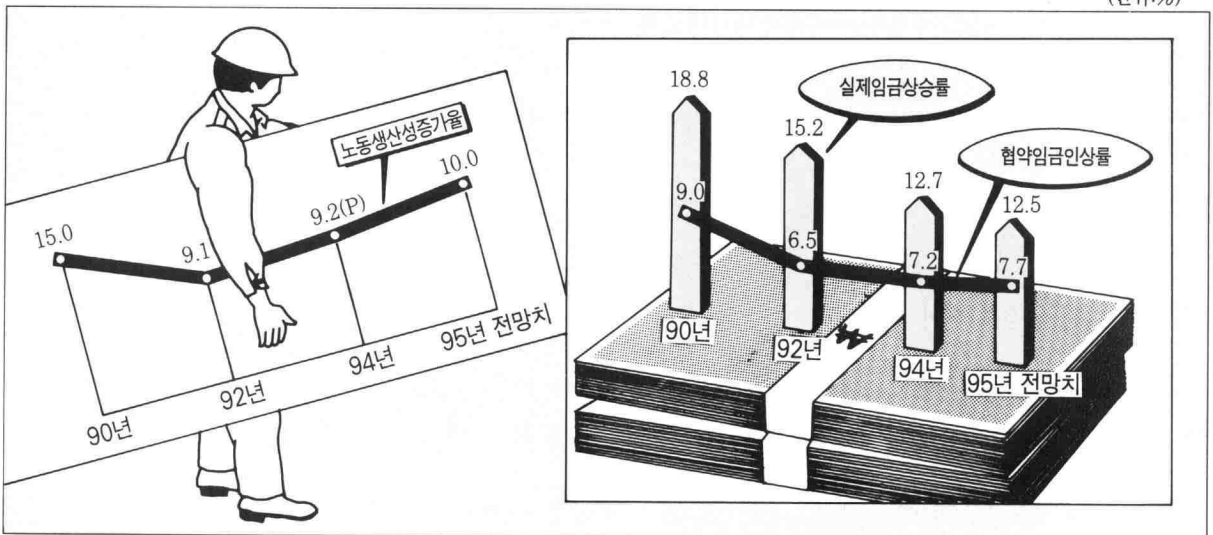
또한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각계의 중지를 모아 지속적으로 모색하기 위하여 96년도에도 노동운동과 노사관계의 합리적 발전 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해 나갈 것이다.

동반자적 노사관계를 개별기업에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 안정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사전에 발굴하여 노사관계를 근원적으로 개선하고 적극적·능동적으로 동반자적 관계를 모색해 나가는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정보의 부족으로 이

〈그림 2〉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임금상승률 추이

(단위: %)



러한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데 애로가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에서는 기업에서 노무관리 실태를 스스로 진단해 보고 개선방향을 도출하여 사전에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무관리 진단·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노무관리 진단을 위한 체크리스트와 설문지 등으로 구성된 '노무관리 진단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기업이 자체적으로 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노사관계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원하는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노무관리 진단 지원 사업을 계기로 정부도 그간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이나 노사분규의 해결지원과 같은 소극적·규제적 노사관계 행정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서비스적인 행정으로 전환하는 전기를 마련코자 한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불법행위는 법에 따라 엄정히 대처

다음으로 우리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과제가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법·질서·원칙의 확립이다. 이를 위하여 부당노동행위나 불법쟁의행위 등 단체교섭이나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사용자와 근로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에 따라 엄정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불합리한 교섭관행과 노동조합 운영상의 관행도 지속적으로 개선토록 지도해 나가면서, 단체협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바람

지난 수년간 사실상 활동이 중단되었던 '중앙노사협의회'를 활성화하여 명실상부한 노·사·정의 최고협의기구로 정착시킴으로써 임금·노사관계 전반에 걸친 주요 현안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 그리고 정부간 이해와 협조를 증진시켜 나갈 계획이다.

직한 교섭방향과 제도개선방향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노동외교 역량을 강화

우리의 국가적 위상에 걸맞도록 노동외교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 위하여 우선 민간 노동외교 전문기구 설립을 지원하는 등 노·사의 민간 노동외교 활동을 적극 장려하면서 민간과의 상호협조를 통해 노동외교에 있어서의 노·사·정 공조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ILO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하는 등 OECD, ILO, APEC 등 對 국제기구 활동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블루 라운드 등 국제적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지적한 대로 금년은 87년 이후의 폭발적인 노사갈등 양상이 표출된 지 10년째를 맞이하는 해로서 이제는 우리 노·사·정 그리고 국민 모두가 지난 노사관계의 문제

점을 반성하고 새로운 노사관계의 틀을 모색하여 열어나가야 할 시점이다.

정부는 이를 위하여 위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노·사 당사자들의 새로운 인식과 노력이라고 하겠다.

기업과 경영자는 격변하는 경제환경하에서 인적자원 관리의 합리화·효율화가 경영의 최대 관건이라는 기본인식하에 근로자들의 창의와 협력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근로자 참여와 경영의 투명성 제고 등 인사·경영혁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노동조합과 근로자도 생산성향상에 책임있는 주체이자 기업발전의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인식하고 합법적 노동조합 활동과 경제적 논리에 기초한 합리적 교섭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기 바란다. **노동계**

손길은 봉사위해
발길은 개혁향해

96년 경제운영, 이렇게 한다

‘과학기술 세제화’의 실질적 정착을 추구

96년은 국내적으로는 광복 50주년을 보내고 또 다른 반세기를 시작하는 첫해이며 21세기라는 ‘통일과 번영의 한민족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마지막 준비 5년의 첫해로서, 국민소득 1만달러, 연구개발(R&D)투자 100억달러, GNP 대비 R&D 투자 3%를 달성하는 등 커다란 획을 긋는 시점이다.

한편, 국제적으로는 이미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와 더불어 국제간에 무한경쟁이 시작되어 기술우위를 유지하는 국가만이 생존할 수 있는 적자생존의 논리가 팽배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강대국들의 이익을 중심으로 배타적 블록화와 전략적 제휴라는 새로운 형태의 국제질서가 형성되면서 동시에 WTO라는 국제 무역체제의 출범으로 지구촌 차원의 무한경쟁시대가 도래하였다. 이러한 경쟁협력시대에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나라만이 세계무대에 확고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선진 각국은 과학기술 우위정책을 과감히 펴나가고 있다.

최근 독일·프랑스 등 구주 중심



김의제
과학기술처 기획예산담당관

국가들은 과학기술정책을 다루는 정부조직을 대폭적으로 개편하여 교육·과학기술·연구개발·직업훈련까지를 포괄하는 미래형 대규모 구조로 탈바꿈시켜 미래사회를 예측하고 기획하는 부처인 소위 ‘未來部’를 출범시켰다.

또한 미국과 일본도 독보적인 과학기술 선진국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래원천기술을 국가가 주도하여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 아래 관련 국가정책을 재정비하고 있으며 여타 국가들도 각기 나름대로의 생존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무한경쟁시대에 대응

우리나라도 새로운 시대를 맞아 국가 사회경제적으로 전반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는 역사 바로 세우기와 삶의 질 개선이라는 큰 틀의 국정목표를 세우고 ①남북관계 개선 ②선진경제 기틀 확립 ③핵심과제의 지속적 개혁 ④‘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개혁 ⑤사회간접시설 확충 ⑥세계질서에서의 능동적 참여라는 6대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국정목표 아래 정부는 세 가지 기본방향 아래에서 일곱 가지 과학기술 부문 주요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위대한 선진조국 건설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향해 과학기술개발체제와 그 운영을 세계수준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세계화에 앞장서는 과학기술’, 선진국의 기술을 도입하여 적용하는 단계를 벗어나는 ‘모방에서 창조로의 과학기술’ 그리고 국민소득 1만달러시대에 걸맞는 과학기술 측면의 복지를 창조하는 ‘삶의 질을 높여주는 과학기술’을 3대 기본방향

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구체화하는 주요과제로 ① '연구개발사업실명제' 도입 ②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전략적 추진 ③ 기초과학 육성을 위한 운영기반 마련 ④ 과학기술 세계화 촉진 ⑤ 원자력 기술의 고도화 및 원자력 안전행정의 정착 ⑥ 과학기술 인프라 확충 ⑦ 과학기술문화 창달 등 일곱가지를 제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는 과학기술 부문에서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변화하리라고 본다. 이러한 과학기술 부문의 변화는 주로 첨단기술에 의하여 주도되고 미래사회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시켜 나갈 것이며 과학기술지식과 정보에 기반을 둔 산업이 전체산업을 이끌어가면서 인간생활에 절대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한편으로, WTO의 출범과 더불어 국제간에는 무한경쟁이 시작되었으며 기술우위를 점하는 국가만이 생존할 수 있는 적자생존의 원리가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치열한 상호경쟁 속에서도 한편으로는 기술분업을 추구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협력을 촉진하는 경쟁·협력의 모습을 보이면서 각국은 지역적으로는 블록화를 구축하며 기업간의 전략적 제휴를 모색할 것이다.

올해부터는 위대한 선진조국 건설이라는 위대한 목표를 향해 착실하게 추진하여온 '과학기술의 세계화'가 실질적으로 정착되도록 다음과 같은 정책과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연구개발의 실명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것이다. 이 제도는 연구개발에 투입하는 인적·물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제도와 함께 출연연구소의 특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별 '고유간판연구사업' 제도를 추진할 것이다.

연구개발 實名制度를 전면적으로 시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연구개발의 실명제도(Project Base System)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것이다.

연구개발에 투입하는 인적·물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운용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을 보다 더 증대시키는 데 이 제도의 목적을 두고, 우수한 연구원이 연구기관에 모이고 열심히 연구하는 연구원이 대접받고 존중되는 세계 수준의 일류연구소를 건설코자 한다. 한편,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하여 인문사회계를 포함하여 여타 정부 출연연구기관들에 대하여도 이 제도를 확대 적용토록 할 것이다.

지금의 시점에서는 우리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도를 보완·발전시켜야만 급속도로 변화하는 세계 연구환경에 적응하며 세계 속에서 경쟁하고 나아가 세계적인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묶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선진 7개국 중심국가' 수준의 과학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물론 이 제도의 도입·운용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주의 깊게 분석·검토하여 이를 보완함으로써 이 제도가 본래의 취지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 제도와 함께 출연연구소의 특성을 보다 더 살리고 연구원의 주인 의식을 고양하기 위하여 연구기관별 '고유간판연구사업(Star Project)'과 추천연구원제를 추진할 것이다. 금년에는 고유간판연구사업에 해양공간·이용 대형복합플랜트(BMP) 개발, 환경복원 및 재생기술 등 6개 과제에 114억원을 투입·지원하며 점진적으로 모든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1개 이상의 간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이러한 사업과 제도는 다가오는 무한경쟁시대를 헤쳐나가 세계 속에서 뚜렷한 업적을 거둬으로써 국민의 확고한 지지를 받는 데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선도기술개발사업'을 확대 추진

첨단·원천기술개발사업인 '선도기술개발사업(G7 Project)'을 더욱 확대 추진할 것이다.

지난 92년부터 추진하여 온 민·관·학 협동의 이 사업은 우리의 기술능력을 선진 7개국 수준으로 높여려는 야심찬 것으로서 그동안 추진하여 온 10개 사업과 함께,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연구수요에 대처하고

자 주문형반도체·초소형정밀기계 등 7개 신규사업을 추가로 선정하여 우리나라 첨단과학기술개발사업을 선도하여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금년중 정부 4,330억, 민간 3,103억원 등 총 7,43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창의적 연구수행을 위해 핵심우수연구원을 선발하여 3년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추천연구원 제에는 지난해의 20명에 이어 올해에는 30명을 선발(30억원)하여 지원할 것이다. 이와 함께 연구성과를 많이 거둔 중진연구원들을 석좌연구원으로 신규 발굴하여 자긍심과 명예심을 고취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21세기를 대비한 핵심원천기술개발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미래에너지 해결을 위한 핵융합연구를 착수하고 우리 기술에 의한 위성체(과학위성·탐사관측위성·통신방송위성) 및 발사체를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며, 이미 추진중인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하고 첨단신소재·소프트사이언스 등을 신규로 발굴·기획할 것이다.

창조적 고급과학기술인력 양성체제 마련

창조적 고급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체제를 마련할 것이다.

세계화 추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두뇌집단을 양성하여 資本을 대신하여 등장할 腦本社會인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한다.

국제성과 독창성을 갖춘 고급과학기술인력은 끊임없는 국제적 교류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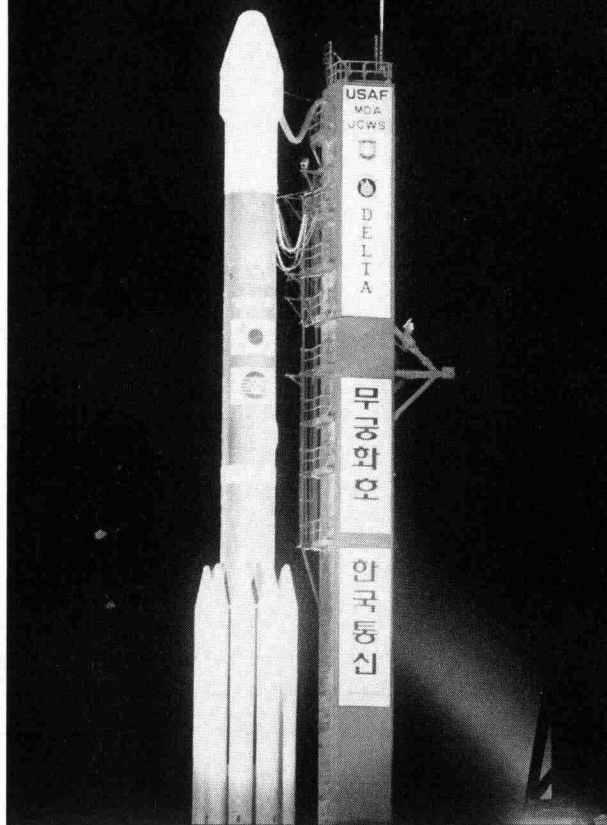
차원 높은 연구환경 속에서 양성될 수 있다는 신념하에 지난해 설립·발의하여 올해부터 설립·운영되는 '고등과학원'을 통하여 젊고 우수한 과학자가 국내외 석학과 함께 초일류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겠다. 또한, 기술과 경영을 접목시키는 '기술경영대학원'을 운영하여 기술중심의 다원적 경쟁과 협력을 촉진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공학연구센터(ERC), 과학연구센터(SRC), 지역연구센터(RRC)를 전국을 잇는 네트워크로 운영하여 상호협력과 보완을 통해 우리나라 기초과학발전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全方位的 국제기술협력기반 구축

전방위적 국제기술협력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일정한 크기의 떡을 놓고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더 큰 떡을 만들어 더 큰 몫을 나누어 가지는 데 국제과학기술협력의 요체가 있다고 본다. 일반적인 국제협상은 소위 제로섬게임(Zero Sum Game)이어서 내가 아니면 내가 주어진 몫을 차지하기 마련이지만, 국제기술협력은 포지티브섬게임(Positive Sum Game)으로서 상호이익을 더 크게 가지는 데 특성이 있다고 하겠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국제과학기술협력 및 외교활동을 통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세계화를 한 단계 높여 놓았다고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추진한 현지 연구협력센터 등도 올해에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국내 연구자원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특화기술분야 중심의 국제공동연구를 활성화해 나갈 것이다. 독일에서 2월중에 개원하는 유럽 현지연구센터인 'KIST-Europe'과 영국에 설립하는 '한·영 소재연구센터(KURC)', 워싱턴 근교에 설립될 '한·미 과학기술협력센터' 등은 한·미·영·일 등 세계중심지역을 연결하는 국제연구네트워크로서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것이며, 기술·인력·자원·정보 등을 卽時的·卽地的으로 엮어서 첨단기술사회의 연구협력기술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다.

또한 'APEC 과학기술각료회의'를 금년 하반기중에 서울에서 개최

하여 이 행사를 통하여 우리의 국제 과학기술 협력무대를 보다 넓히고 외교협력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인의 긍지를 세계적으로 드높이고자 한다.

한편, '아·태 이론물리센터'와 미국 '과학연구소(SRI) 독성연구센터' 등 해외 우수연구기관을 국내에 유치하고 해외 과학기술선진국에 현지연구센터의 설립을 확대하며, 나아가 과학기술의 세계화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 과학기술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새로운 국가 원자력행정을 확립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원자력기술진흥의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미 마련된 '원자력종합계획'을 연내에 확정하고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에 대한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보완하여 원자력개발 관련 계획을 체계화할 계획이다. 또한 원자력의 이용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원자력행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국내기술로 건조한 '하나로' 원자로를 활용한 첨단연구, 다목적 열병합 원자로기술 개발, 차세대발전용원자로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여 21세기 초 우리나라가 원자력 선진국으로 부상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이다.

한편, 원자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투명한 정책을 펴나감으로써

첨단·원천기술개발사업인 '선도기술개발사업(G7 Project)'을 더욱 확대 추진할 것이다. 그동안 추진하여 온 10개 사업과 함께, 연구수요에 대처하고자 주문형반도체·초소형정밀기계 등 7개 신규사업을 추가로 선정하여 우리나라 첨단과학기술개발사업을 선도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우리의 원자력행정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도록 노력할 것이다. 지난해에 굴업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후보지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활성단층을 발견하고 이 사실을 지체하지 않고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안전성 위주의 원자력행정을 수행한 것은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올해에는 원자력의 이용·개발에 철저한 안전관리와 함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제도화하여 합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원자력 행정을 펴나갈 것이다.

민간 부문의 과학기술혁신을 촉진시키는 과학기술인프라를 계속 구축해 나갈 것이다.

WTO체제 속에서 경제활동의 핵심주체인 우리 기업들이 세계 주요 기업들과 경쟁하여 이기기 위하여는 우리 기업이 기술과 경영, 기술과 외교, 기술과 환경, 기술과 제도 등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문제해결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운영·정보시스템 구축·연구센터 운영 등 정부 차원의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양화하여 무한경쟁시대에 우리 기업이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특히,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연구개발자금·세제·신기술 제품의 시장개척·과학기술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이해 및 문화창달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과학기술은 산업경쟁력 확보와 경제성장을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의 근본적인 변혁을 통하여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과학기술의 발전과정에서 야기되는 환경과파·자원고갈 등의 역기능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과학기술에 관한 이러한 순기능과 역기능을 이해하면서 지구환경·인간·자연·사회·문화와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가운데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는 데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친화감이 증진되고 과학적 사고와 안전의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각종 과학기술문화행사를 범국민적으로 개최하고 신문이나 방송 등 대중매체를 통한 과학기술홍보에도 주력할 것이다. **김영**

96년 경제운영, 이렇게 한다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한 경쟁정책의 강화

작

년말 전국민에게 충격을 안겨 주었던 전직대통령 비자금 사건은 단순한 하나의 사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앞만 보고 달려온 지난 30년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동 사건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면에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과제들을 던져주었으나 경제운영과 관련되는 사항만 본다면 아무래도 경제의 투명성 제고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체제의 확립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된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수많은 정부규제가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하고 각종 인허가 및 공사발주 등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니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기보다는 로비에 치중하게 되고 중요한 의사결정이 로비에 의해 좌우되다 보니 로비력이 강한 대기업집단이 이익창출의 기회를 독점하여 중소기업집단에 의한 경제력 집중이 더욱 심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96년 경쟁정책의 중점방향을 국민경제의 균형발전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경제 각 부문의 경쟁을 최대한 촉진하고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철저히 단속·시정



김호대
공정거래위원회 총괄정책과장

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고히 정착시키는 데 둘 예정이다.

경제력 집중 완화하고 기업간 공정경쟁을 유도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 제한제도와 채무보증 제한제도를 시행한 이래 이들 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이나 타회사출자비율 등 관련지표가 추세상으로는 낮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높은 수준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집단의 소유분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작년 4월부터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국내 타회사에 대한 출

자한도를 종전 순자산의 40%에서 25%로 인하하는 한편 소유분산 및 채무구조가 우량한 기업이나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출자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유인장치를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소유분산 우량기업을 통하여 출자한도를 회피하는 등의 탈법행위를 철저히 방지하도록 하고 출자한도초과액을 경과기간내에 차질없이 해소하도록 점검·독려할 계획이다.

한편 93년 4월부터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하여 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을 자기자본의 200% 이내로 제한하면서 한도초과액의 해소를 위하여 3년간의 경과기간을 부여하였는데 금년 3월말이 곧 그 경과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다. 제도 도입 당시 보증한도 초과회사는 170개사였으나 95년 현재로는 59개사로 줄어들었는바, 금년 3월말을 기점으로 대규모기업집단 전체 계열사의 채무보증실태와 금융기관여신 점유비중, 자금시장에서의 기업들의 직접금융 조달사정, 여신관리제도의 변경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제도보완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대규모기업집단 계열사간 상호보조에 의하여 한계기업의 퇴출을 막

고 경제효율을 저하시키는 부당내부 거래에 대한 조사·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대규모기업집단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행위를 업종별·유형별로 체계적으로 조사·시정하여 기업집단 계열사와 비계열 중소기업 간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94년에 시정조치한 22개 기업집단에 대하여 시정명령 이행실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기업집단의 위장 계열사를 통한 중소기업분야 침투도 억제할 것이다.

94년부터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도 기업간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소홀히 할 수 없는 분야이다.

앞으로 국제화 추세가 심화됨에 따라 국내기업간 결합뿐만 아니라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간의 결합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업결합에 의해 관련시장에서 경쟁의 정도가 감소되거나 독과점 지위가 형성되는 사례가 없도록 심사도 강화하고 심사제도 자체도 보완할 예정이다.

경쟁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작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독립기관으로 개편된 이래 경쟁제한법령 개선작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여 30개 법령, 36개 과제를 개선한 것은 각 산업분야에 경쟁정책을 본격 시행하게 됐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금년에는 작년에 이어 계속 경쟁제한법령 정비작업을 추진함으로써 산업전반에 경쟁구조가 정착되도록

정부는 96년도 경쟁정책의 중점방향을 국민경제의 균형발전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경제 각 부문의 경쟁을 최대한 촉진하고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철저히 단속·시정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고히 정착시키는 데 둘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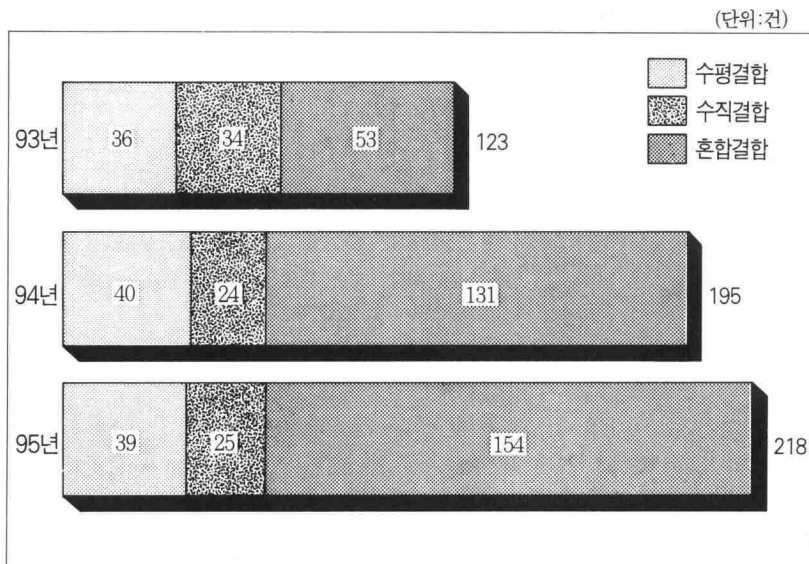
할 계획이다. 즉, 운수·통신·에너지 등 국민경제에 파급영향이 큰 산업을 대상으로 당해 산업과 관련되는 분야를 종합하여 진입규제·영업활동규제 등 경쟁제한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이러한 작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당해산업에 대한 심층분석뿐만 아니라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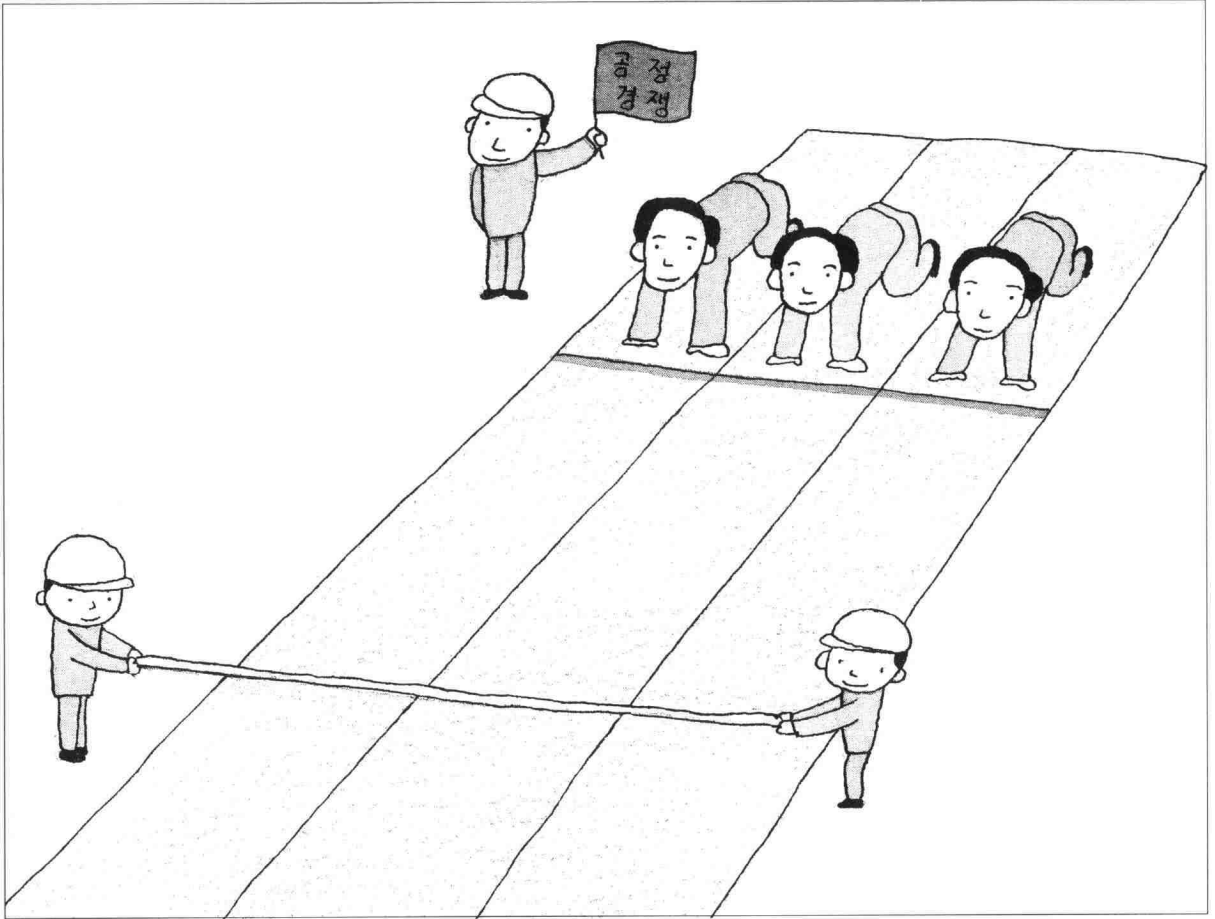
도변경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작업반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아울러 새로운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시 또는 각 부처가 소관산업의 규제와 지원, 공기업민영화, 대외무역 및 투자 등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경쟁개념을 적극 도입하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공정거래법 적용이 미흡한 금융분야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적용을 확대하고 지적재산권 남용행위도 엄격히 규제하도록 할 것이다.

95년에 218개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369건의 경쟁제한적 정관·내부규정 등을 고치도록 한 데 이어 금년에는 업종별 협동조합 등 법령에 근거하여 경쟁제한적 정관·회칙 등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대한 개선작업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그림〉 연도별 기업결합 추이





하도급거래질서를 바로잡고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남용을 방지

불공정하도급거래는 중소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부실공사의 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불공정건설하도급과 제조하도급에 대한 직권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작년에는 지하철·터널·교량 등 대형공공공사 시공업체만을 대상으로 불공정건설하도급거래행위를 조사하였으나 금년에는 주요 민간시설물 시공업체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제조하도급에 대하여도 하도급의

존도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추석·연말연시 등 자금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실태를 조사하여 중소기업 자금난을 완화하도록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수급사업자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상습 또는 악질적인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하고 국제 동향에도 적극 대응

각종 불공정거래행위 중에서도 입찰담합 및 가격담합 등 공동행위는 경쟁제한성이 크고 그 경제적 영향도 심대하다. 따라서 금년에는 이들 공동행위에 대한 단속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감시를 강화하고 공동행위 적발시에는 과징금을 중과하고 형사고발하는 등 엄중조치하여 법위반 행위의 사전예방을 도모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수시점 검할 계획이다.

326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140개 품목에 대한 독과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여 출고 조절이나 부당한 가격인상 등 불공정행위를 사전예방도 록 하고 대형백화점의 入店業體 또는 납품업체에 대한 우월적 지위남 용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공정거래행위도 중점단속 분야이다. 예식장·영안실·공원묘원 등의 끼워팔기와 백화점의 허위바겐세일에 대해서는 조사·단속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최근 범람하고 있는 건강보조식품·학습교재 등의 허위·과장 광고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교통과 통신발달에 따라 새로이 등장하는 통신판매와 프랜차이즈 등 새로운 업태와 판매방식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제도도 보완하고 조사·단속활동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약관은 대다수 국민의 권익과 관련되고 또한 분쟁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역점을 두어 개선하고자 하는 분야의 하나이다. 금년에는 상가·빌딩 분양 약관 및 임대차약관, 스포츠·레저 시설 등 회원제시설 이용약관에 대하여 전면적인 직권심사를 실시하고 은행·병원이용 관련약관에 대해서는 표준약관을 제정·사용도록 하여 분쟁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겠다.

그간 OECD, UNCTAD, APEC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쟁 정책에 관한 국제규범마련 논의가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집단의 소유분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작년 4월부터 유인제도를 시행한 바 있는데, 올해에는 이러한 소유분산 우량기업을 통하여 출자한도를 회피하는 등의 탈법행위를 철저히 방지하고 출자한도초과액을 기간내에 차질없이 해소하도록 점검·독려할 계획이다.

금년에는 그 내용과 향후 추진일정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아울러 미국 등 선진국의 경쟁 정책문제를 이유로 한 통상압력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금년초에 관계부처·업계·학계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대책기구를 설치하여 OECD, UNCTAD 등의 논의동향을 파악하고 과제별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분석하여 우리 입장을 적극 반영하는 한편 미국·EU 등과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이유로 한 통상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쌍무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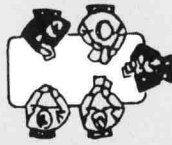
공정거래 준수 풍토를 조성

업계 스스로 공정거래규범을 준수하도록 自律遵守便覽의 보급을 확대하고 각종 교육을 내실화해 나갈 것이다. 공정경쟁협회를 통하여 개별회사별로 실제 사용할 자율준

수편람을 제정토록 지원하고 업종별 단체 및 협회 등을 통하여 공정경쟁규약을 제정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공정거래 관련교육도 업종별로 세분화하고 사업자와 이해관계인이 함께 참여하는 구체적 사례중심의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효과를 제고할 것이다.

각종 소비자단체·여성단체와의 협조체제를 강구하여 이들 단체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와 각종 건의를 활성화하고 각종 경제단체·사업자 단체 등과 간담회·강연회 등을 자주 개최하여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제고하고 자율준수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남영재**

허리숙인 봉사정신
일어서는 국민경제



기·업·정·보

병행수입 부당저지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규제

안영호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서기관

並行輸入이란 독점수입권자에 의해 당해 외국상품이 수입되는 경우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眞正商品(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착되어 배포된 상품을 말함)을 국내 독점수입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병행수입이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국내의 대형 디스카운트 판매점인 프라이스클럽이 95년 4월 기술제휴업체인 미국의 '프라이스스코트'社로부터 다량의 청바지를 수입하였으나 미국내 리바이스 상표권자인 '레비스트라우스'社의 한국 현지법인으로서 리바이스 상표의 한국내 전용사용권자로 등록되어 있는 '리바이스코리아'社가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세관에 통관보류를 요청한 사실이 세관에 의해 받아들여져 통관이 보류되면서 부터라고 말할 수 있다.

그동안 수입이 개방되어도 국내에서 가격경쟁이 일어나지 않고 국내 공산품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에도 크게 기여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재정경제원이 주관이 되어 공정거래위원회·특허청·관세청 등 유관기관의 협의를 거쳐 병행수입을 허용하기로 정부방침을 결정(95.10)하고 관세청이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 통관 사무처리규정'(관세청 고시)을 개정·시행(95.11.6)함으로써 병행수입이 허용되게 되었다.

그러나 병행수입이 허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병행수입품이 수입·유통 단계에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가격경쟁이나 서비스경쟁이 일어나지 아니하여 독점수입권자의 독

점이윤이 사라지지 않을 경우 병행수입 허용효과는 반감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병행수입품에 대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함으로써 병행수입품의 수입·유통의 원활화를 도모하여 경쟁이 촉진되도록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유형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병행수입의 허용기준▶

병행수입이 허용될 경우에 상표권을 어느 정도까지 보호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상표법은 상표권자 또는 그 전용사용권자에 대해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독점적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등록상표를 보호하고 있다. 반면에 병행수입의 허용은 상표권자 또는 그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제3자가 동일 상표 제품을 수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표권자의 독점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상표권도 보호하면서 독점의 폐해를 최소화한다는 균형잡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병행수입에 대한 합리적 허용기준을 확정하여 실시키로 하였다. 동일 상표의 수입 상품간에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또 소비자의 후생도 증진한다는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여 병행수입을 허용키로 결정한 것이다.

우선 상표권자 또는 상표의 전용사용권자 허락 없이 제3자가 동일 상표 제품을 병행수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 관계(주식 또는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경우) 등 자본적 유대관계가 있는 경우

둘째, 국내외 상표권자가 자본적 유대관계는 없으나 수입대리점 관계에 있는 경우

셋째, 외국의 상표권자와 자본적 유대관계 또는 수입대리점 관계에 있는 국내 상표권자가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경우

다시 말하면, 국내외 상표권자가 그 상표에 대한 경제적 이해를 같이 할 경우에는 병행수입이 허용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여전히 병행수입이 금지된다.

첫째, 외국상표의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당해 상표 제품을 수입은 하지 않고 국내에서 제조하여 판매만

하는 경우

둘째, 외국의 상표권자와 자본적 유대관계 또는 수입대리점 관계가 없거나 또는 그러한 관계가 소멸된 자가 국내 상표권을 양도받은 경우

다시 말하면, 외국의 원상표권자가 그 상표에 대한 국내에서의 권리를 일단 국내 전용사용권자에게 양도한 후 양자의 경제적 이해가 별개로 취급될 수 있는 경우 병행수입은 여전히 불허된다고 말할 수 있다.

◀병행수입 부당저지에 대한 규제의 기본원칙▶

병행수입은 통상 내외가격차가 있을 때 일어나지만 병행수입품이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독점수입권자가 취급하는 상품의 가격붕괴가 일어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종의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독점수입권자는 외국사업자나 그 해외의 거래처에 압력을 가하여 병행수입의 경로를 봉쇄하기도 하고, 국내에서의 병행수입품의 판매를 방해하는 등 병행수입품의 수입·유통저지행위를 강구할 것이다. 병행수입은 가격이나 서비스경쟁 등을 촉진시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경쟁정책의 입장에서 적절하게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 관한 지침'에서 병행수입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행위로서 7개의 대표적인 유형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그것들이 어떤 경우에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가를 명백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병행수입은 진정상품의 수입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병행수입품이 진정상품이 아니고 위조상품인 경우에는 상표권의 침해를 이유로 독점수입권자가 그 판매를 중지시킬 수가 있고, 그 외에도 상품사양이나 품질이 다른 상표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허위의 출처표시를 하는 등으로 해서 일반소비자에게 독점수입권자가 취급하는 상품과 동일한 것이라고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 상표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주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부당한 병행수입 저지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유통경로로부터의 진정상품 구입방해이다.

병행수입업자가 해외의 유통경로로부터 진정상품을 구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는 독점수입권자가 취급하는 상품과 병행수입품과의 가격경쟁을 감소·소멸시키는 것으로서 독점수입권자의 보호범위를 벗어난 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독점수입업자가 ①병행수입업자가 진정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상표권자의 해외거래처에 대하여 외국상표권자로 하여금 제품공급을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②병행수입품의 제품번호 등을 통하여 그 구입경로를 알아내어 동 제품을 취급한 외국상표권자의 해외거래처에 대하여 외국상표권자로 하여금 제품공급을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부당하게 하는 경우에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되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에 위반된다(구속조건부거래, 경영간섭).

둘째, 판매업자에 대한 병행수입품의 취급제한이다.

독점수입권자가 독점수입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부당하게 병행수입품을 취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자기의 판매업자와 거래하는 등 판매업자에 대하여 병행수입품을 취급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어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구속조건부거래). 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느냐 안하느냐 문제는 판매업자가 자유로이 결정할 문제이지만 이를 제한하는 것은 독점수입권자의 거래처인 판매업자의 상품의 구입활동을 제한함으로써 병행수입의 저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제한은 판매업자와 병행수입업자와의 거래를 방해하여 병행수입품을 국내유통단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성격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위법으로 되는 것이다.

셋째, 병행수입품을 취급한 판매업자에 대한 차별적 취급이다.

독점수입권자가 독점수입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자기의 판매업자 중 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판매업자에 대하여는 타판매업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거나, 수량·품질 등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부당하게 차별적 취급을 하는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어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차별적 취급).

넷째, 병행수입품을 취급한 판매업자에 대해 제품공급을 거절하거나 중단한 경우이다.

독점수입권자가 독점수입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사업자와는 거래개시를 거절하거나 그동안 계속 거래하여 오던 자기의 판매업자 중 병행수입품을 취급한 사업자에 대하여 병행수입품을 취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제품의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어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거래거절).

다섯째, 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소매업자에 대한 독점수입품의 판매제한이다.

독점수입권자가 자기의 판매업자(도매업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소매업자에게는 독점수입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어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구속조건부거래, 경영간섭).

여섯째, 병행수입품을 위조품인 것처럼 비방하여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이다.

독점수입권자가 병행수입품에 대하여 진정상품이 아니라 상표권을 침해한 위조품인 것처럼 하는 등 충분한 근거 없이 비방표시·광고행위를 하여 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판매를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어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부당한 표시·광고).

일곱째, 병행수입품의 광고활동 방해이다.

병행수입품의 광고활동이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광고의 유사성 등 때문에 독점수입권자의 영업과 혼동이 생기는 등의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독점수입권자가 그 거래상대방인 잡지·신문 등의 광고매체에 대하여 병행수입품의 광고를 게재하지 않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등 부당하게 병행수입품의 광고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어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구속조건부거래). 나라경제

경 제 상 식

• 벤치마킹(Benchmarking)

일반적 의미의 '벤치마킹'은 관련업계 최고의 작업방식을 발전·분석하고 이를 채택하여 실제작업 과정에 적용하는 것을 증명하는 계속적인 연구인 동시에 학습경험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벤치마킹이란 자기 회사의 업무수행과정과 유사한 프로세스를 보다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는 관련 업계의 선두주자나 초우량 기업을 비교기준으로 삼아 최선의 실무를 파악하고 이를 적절히

수정하여 자기 회사에 도입하려는 새로운 경영기법이라 할 수 있다.

벤치마킹의 핵심은 중국의 전략가인 손자(B.C 5세기)의 '지피지기면 백전백승'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제록스사가 1979년에 경쟁 벤치마킹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수행하면서 시작되었다.



정부와 기업의 관계

—미국역사의 교훈



강명규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지금으로부터 100년전인 1895년에 미국의 工產品 수출액은 경상가격으로 1억4천여만달러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이 끝난 3년 후인 1920년에는 32억여달러로 급신장하여, 25년 만에 22배로 늘어나게 된다. 이것은 당시만 해도 후발국이던 미국경제의 놀라운 경제성장을 상징할 만한 지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공산품의 세계교역량에서 영국과 독일 및 프랑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35.8%, 17.2%, 14.5%이던 1890년에 미국은 겨우 3.9%였고, 1차 세계대전 전야에 와서도 영·독의 25.4%, 23.0%에 비하면 11.0%에 불과하여 그 상대적 점유율은 여전히 낮은 것이었지만 영국과 프랑스의 추세적 지위하락에 비한다면 미국의 성장속도는 이 시기부터 두드러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미국이 2차 대전후에 패권국가로 군림하게 되는 경제적 기반확립은 실상 위에서 예시한 19세기말에서 20세기초에 이르는 2,30년 동안에 이루어졌다고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의 미국경제사와 정책사는 학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윌리엄 베커(William H. Becker)라는 미국 학자의 「기업과 정부의 관계에 관한 動學」이라는 책자에는 미국의 경제력이 선진국 프랑스와 독일을 추월하여 급기야는 패권국가 영국을 제치고 일류국가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전개되었던 저간의 사정을 흥미있게 서술하고

있다. 여기서 현단계의 우리에게 참고가 되는 몇가지 측면을 간추려 보기로 하자.

우선 첫째로, 이처럼 결정적인 시기(구체적으로는 1893~1921년)에 있어서 미국이 국제적으로 英·佛·獨과 같은 선진제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혼신의 國力を 집중한 분야는 대외수출의 촉진이었다. 초기에는 주로 식료품·담배와 원자재에 집중되던 수출구조가 점차 금속제품과 기계류의 비중 상승으로 바뀌어 갔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이 시기의 특징이거니와, 그 시장점유율의 제고를 위해 미국의 경제계와 정부 및 정계가 경주한 노력은 이른바 자유방임사상의 정책노선이라든가 규제철폐 따위와는 정반대의 보호주의적 정책을 서슴없이 펴왔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둘째로, 그렇다면 이와 같은 수출촉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업계와 정부 사이의 관계는 어떤 모습이었든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단적으로 말해서 업계와 정부기관 사이의 관계는 해외시장에서 수출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정부측의 입장이었다. 정부가 업계의 이 같은 해외 시장 확대를 돕기 위해 전국제조업협회라든가 미국상공회의소 같은 업체단체를 조직하도록 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商務省 같은 정부조직을 신설한 것도 이 시기(1903년)다.

특히 윌슨대통령 때의 商務長官 레드필드(William Redfield)는 '국립대외무역위원회'를 만들어 反트러스트法의 규제를 완화하고 수출품 輸送船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했을 뿐 아니라,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자들이 해외시장에서 상호협조하도록 하는 데조차 여간한 힘을 기울인 게 아니었다.

셋째로는, 그러나 이와 같은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官의 적극적인 지원은 담당부서라 할 수 있는 상무성의 독점물이 아니었다. 상무성이 정부조직상 설치된 것이 1903년이지만, 정부 수립 이래 대외관계를 맡아 온 國務省도 실은 미국의 국제정치상의 발언권이 빈약하던 당시까지는 해외에서의 업무래야 수출업자들을 영사상으로나 무역업무상 관세부담을 덜게 한다든지 국제법상 불이익을 덜 받도록 도와주는 등의 일이 가장 중요한 업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뿐 아니라 국내적으로는 관할고객(constituency)이 없는 국무성으로서는 議會에서의 예산확보를 위해 서라도 유력한 수출업자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수출업계는 의회에서 해외시장 확대에 불리한 법령을 개정하고 은행의 해외지점 설치 등 지원책을 얻는 데 정부기관을 활용하고, 후자는 의회에서의 예산확보를 위해 재계의 유력층을 활용하는 협력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말하자면 재계·관계·정계 사이에 3각의 추악하지 않은 유착관계가 형성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측면은 국무성의 이 같은 부처利盆을 위한 행위가 뒤늦은 상무성의 설치로 인해서 중대한 침해를 받게 되었다는 점이다. 상무성은 그 고유의 업무영역상 관할고객이 확실할 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어서도 그동안 국무성이 관장해 오던 활동이 도전을 받게 된 것이다. 여기서 나오는 부처간의 관료주의적 경쟁이 미국의 수출업자들에게는 적어도 이 시기 동안은 유리하게 작용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넷째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던 1914년에 미국의 工產品 수출의 80% 이상이 웨스팅하우스(Westing-

house), 유에스 스틸(U.S. Steel) 등의 100대 기업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 대기업의 사정과 중소기업들의 수출활동 조건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중소기업자들은 기술수준과 마케팅, 자본력과 정보수집에 있어서 그리고 관세상으로나 국회의 지원을 얻는 데 있어서도 대기업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었고, 따라서 정부기관의 도움에 대한 의존도가 더 클 수밖에 없었다. 이들의 利害관계를 대변하기 위한 각종 協會가 정부주도로 만들어졌으며, 미국상공회의소가 창설된 것도 이때문이었다. 중소기업자들은 국내경기가 호황일 때는 대외수출에 관심을 덜 갖다가도 불경기가 되었을 때는 해외시장에 눈을 돌리는 그런 행태였고, 이럴 때에 정부의 각종 지원을 요청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반하여 대기업들은 대량생산체제에 의한 대량유통·대량수출의 계속성을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경기변동에 따라 해외활동을 줄이고 늘리고 할 처지가 아니었다.

따라서 대기업들은 이 시기의 후기에 올수록 기업 독자적인 해외시장망과 정보망을 구축하여 정부의존을 탈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부에 의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점점 회의적으로 되어간다. 규모에 있어 이미 수천명의 조직을 기획 통제하고 거대한 자금을 관리하며, 해외에 공장을 건설운영하고 현지 외국인을 고용하며 국내의 대량생산공장의 운영과 함께 이를 통합적·합리적으로 일사불란하게 경영하는 등 당시 미국정부의 어느 기관도 경험하지 못한 조직관리를 실행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미 미국기업들은 정부보다 한 차원 앞서고 있었던 것이다.

초일류국가로의 미국의 비약은, 이처럼 政·官·財界의 상호협조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벌어진 이들 사이의 견제와 경쟁 속에서 피어나게 된 기업들이 세계시장의 가혹한 경쟁에 시달리며 '홀로 서기' 시작한 20세기초의 비교적 짧은 기간에 그 계기가 조성되었다는 史實을 우리는 他山之石으로 삼아야 되겠다. **문필**

95 년은 우리나라가 유엔 安保理에 진출하는 등 국제적으로 국력에 알맞는 위상을 찾은 한 해였고, 정보통신 부문에서만 국한해 보더라도 APEC 회원국 장관들이 서울에 모여 제1회 아·태 통신·정보산업장관회의를 통해 상호 호혜적 바탕에서 정보통신 부문을 발전시킬 것을 '서울선언문'을 통해 결의한 해이기도 하다.

또한 지난해 11월에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태 전기통신협의체(APT) 사무총장 경선에서는 일본에서 추천한 현 사무총장과 경합 끝에 본인이 사무총장에 당선되어 우리나라가 통신 분야의 주도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도 하였다.

아·태 전기통신협의체(APT)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ESCAP)에서 지역내 경제·사회발전에 부응하는 전기통신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제반 문제점 해결 및 각국 전기통신기관 상호간을 조정할 상설기구로 79년 7월에 정식 발족된 기구이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북한·일본·호주·중국 등 28개 정회원국과 4개 준회원국, 한국통신 등 33개 협찬사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아·태지역 정보통신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이 지역은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경제력의 격차가 현격한 곳으로 1인당 GDP가 100~200달러인 아프가니스탄·방글라데시·네팔·라오스 등 극빈국과 1만달러 이상인 호주·일본·브루나이·뉴질랜드·싱가포르 등이 공존하고 있다.

84~94년 기간중 아·태지역의 전기통신망의 성장을 보면 동 기간중 전화회선수는 76억6천만회선에서 159억6,200만회선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7.6%의 증가율을 보였고, 100명당 회선수는 84년 2.80에서 94년 4.90으로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화회선수는 동 기간중

아·태지역의 정보통신



이종신

정보통신부 정보통신협력국장

에 630만회선에서 2천만회선으로 증가하였고 100명당 회선수는 84년 13.8에서 94년 39.6으로 증가했다.

역내 개도국의 전화망은 동 기간중 25억5,300만회선에서 90억2,800만회선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13.5%의 성장률을 나타냈으며, 100명당 회선수는 0.98에서 2.90으로 증가했다. 역내에서 가장 큰 성장을 보인 지역은 동아시아로 전화회선수가 14억6,300만회선에서 59억1,600만회선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15%의 성장을 기록했으며, 특히 중국은 연평균 26.4%의 증가율을 기록하여 가장 괄목할 만한 성

장을 보였다. 반면에 100인당 회선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남아시아로 1.17이다.

이동전화서비스의 성장은 94년 가입자수가 920만명이며 이 가운데 3분의 1이 동아시아지역 가입자로 90~94년중에 아·태지역내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78.2%가 증가하여 기간통신망 성장의 10배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다.

역내국가의 연간 전기통신투자는 평균 385억달러로 90~94년중 전기통신수입의 재투자는 통신망의 적절한 성장을 위한 ITU의 목표치인 40%를 초과한 49%를 기록했다.

아·태지역의 전기통신정책에 있어서 규제정도 및 민영화는 국가별로 다양하나 전반적으로 자유화 추세에 있으며, 전기통신 부문의 민영화는 교통 및 우편 부문보다 용이하나 민영화에 대비하여 국가별로 적절한 대응과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아·태지역은 인프라의 구축에 막대한 자원과 기술·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으므로 국내 정보통신 부문의 발전에 성공한 우리나라에서도 이 지역 특히 저개발국가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진출이 요청되고 있다. 

새 해에 거는 기대와 희망 때문인지 요즘은 신문이나 잡지, TV나 라디오를 통해 유난히 자주 접하는 단어가 있다. '21세기', '세계화', '지구촌' 등의 용어가 바로 그것이다.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이젠 모방이 아닌 우리만의 독창적인 과학기술을 개발·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고, 우리 기업들이 마음껏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행정규제완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다. 21세기 고도정보지식사회에 있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은 정보력과 知力이라는 지적과 함께 창의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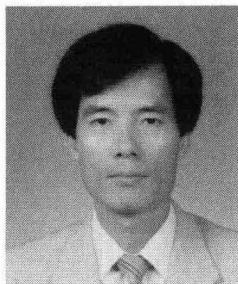
을 극대화하고 사고 발상의 전환을 유연케 하기 위한 교육 개혁의 목소리 또한 매우 높다. 무한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모두가 옹고 시급한 과제들이다.

그러나 생존경쟁 개념의 이들 정책 대안들 못지않게 지구촌의 여러 국가, 다양한 민족들과 더불어 사는 全球의 가치관의 확립이 무엇보다도 시급히 요청되고 있지 않나 싶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좋은 싫든 여러 국가, 다양한 민족과 함께 이들의 전통과 문화, 가치관을 존중하며 더불어 살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다.

舊소련, 동유럽 공산 체제의 붕괴로 국가간을 경계짓고 사람들의 이동을 통제하던 물리적인 개념의 국경은 점차 그 의미를 상실해 가고 있고, 교통과 정보통신의 발달은 지구촌을 하나의 생활단위로 묶고 있다. 21세기초가 되면 초고속 여객기는 서울과 뉴욕 간을 4시간 대로 연결하여 지구촌을 1일생활권으로 바꿔놓을 것이며, 정보통신 혁명으로 우리는 세계 어느 곳 어떤 민족과도 우리말·우리글만으로도 얼굴을 마주 대하며 대화하고 문자·기호만이 아니라 화상으로도 필요한 정보를 마음대로 주고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인류 보편적인 가치관 정립



문유현

과학기술처 기계전자연구조정관

명동 거리에서도 우리의 선남선녀들이 피부색이 다른 외국인과 데이트하며 활보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대할 것이며 주말이나 여름 휴가를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 보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북한을 경유, 중국·유럽으로 자동차 여행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개별 국가 중심의 경제단위는 세계를 묶는 단위 경제권으로 바뀌게 되어 스위스의 자본과 독일의 기술, 대만의 부품을 가지고 중국에서 물건을 만들고 미국에서 장사하는, 그야말로 쏘지구촌을 무대로 하는 삶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적 교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생활과 문화의 전파 속도는 급속히 빨라질 것이다. 세계 여러 곳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들은 동시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 지구촌의 풀기 어려운 산적한 문제들, 예를 들어 환경·자원·에너지·빈곤·인권·분쟁 등은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가 될 것이다. 세계 여러 나라들의 정치·경제·문화를 도외시킨 채 우리만의 정치·경제·문화를 생각할 수는 없다.

우리 이익만을 추구하는, 우리만이 잘사는 21세기 국가건설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우리는 벌써 LA에서 뉴욕에서 이웃과 더불어 사는 지혜가 부족한 민족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마인드 부족은 우리 기업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제 우리만이 잘살기 위해 움직일 것이 아니라 지구촌의 이익, 평화와 번영을 함께 생각하며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대구 지하철 가스폭발사고, 중소기업 도산만이 우리의 아픔이 되어서는 안된다. 소말리아 난민의 고통, 가나의 기근, 남아공의 인종차별, 남극의 오존층 파괴, 아마존 유역의 열대우림 훼손, 보

스니아 내전, 북한의 핵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전략 핵무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아픔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문제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전통적 사고방식이나 가치관, 문화에 대하여도 우리만의 것을 고집하지 말고 다른 민족들의 것도 존중하며 지구촌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방향으로 다시 짜고 밭전시켜야 한다. 우리의 활동무대가 한반도 구석진 곳에서 지구촌으로 확대되듯이, 우리의 사고방식, 가치관 또한 그 무게 중심을 한반도·한민족에서 전세계 인류로 확대시켜야 한다.

내게는 열살 난 딸이 있다. 나중에 성년이 되어 혹시 외국인과 결혼하겠다고며 아빠의 허락을 요청해 온다면 내 심정은 어떠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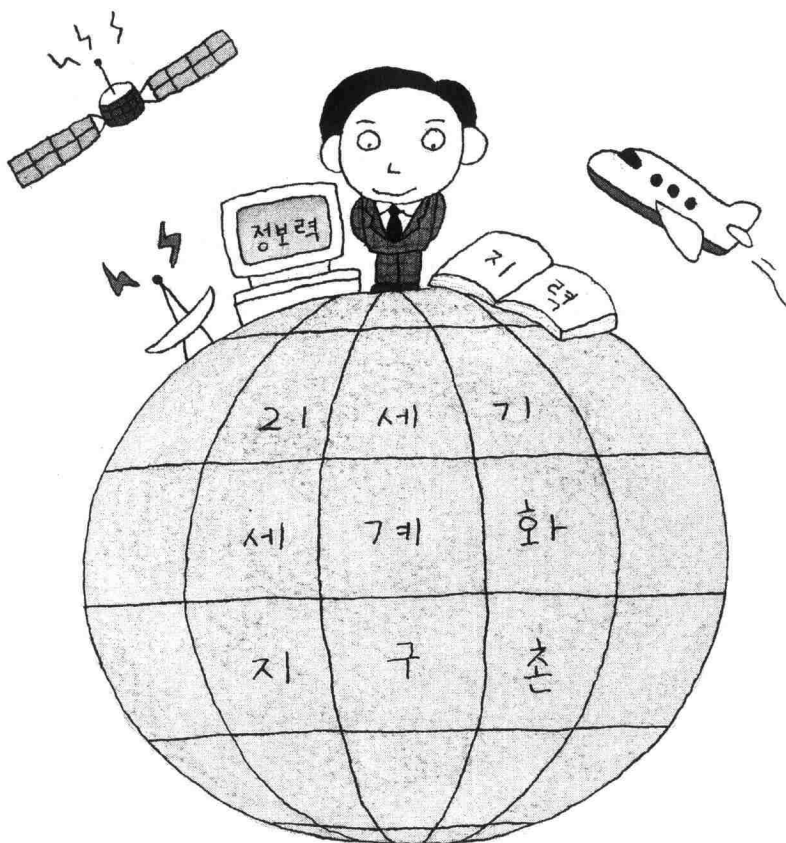
피부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반대할 경우, 이러한 아빠의 사고방식에 딸은 얼마나 동의할 것이며 한반도 구석에 자리한 우리 민족의 가치관에 대해 외국인들이 보는 눈은 어떠할까?

마치 영호남의 지역성을 이유로 어떤 부모가 자녀 결혼을 반대한다면 이러한 편협된 지역감정을 우리가 탓하듯이 한국인이기를 고집하며 자랑스레 지켜온 우리의 가치관이 앞으로 다가올 21세기 국제사회에서는 우스운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을까?

지금으로서는 좀 엉뚱한 가정같아 보이지만 지금의 우리 전통·사고방식·가치관만을 고집할 경우 이와 유사한 수많은 충돌과 갈등이 분명 우리의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우리만이 아닌 세계 모든 나라, 다양한 민족들과 더불어 사는 인류 보편적 가치관. 이는 인도주의 차원을 넘어 벌써 국제규범으로서 우리에게 강요되고 있고 21세기 국가 생존전략으로서 특별히 요청되고 있다.

인류 보편적 가치관이 생활규범으로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하여는 지금까지의 학교나 가정에서의 단순한 도덕·윤리 교육만으로는 안된다. 21세기 주역이 될 자라나는 우리 세대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만이 아니라 지구촌이 모두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세계일류시민으로 바람직한 가치관과 자질을 갖추 수 있도록 우리 교육시스템을 면밀히 검토·보완하여야 한다. 지구촌의 산적한 문제들을 우리의 문제로 제기하고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하며 세계시민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시민단체들도 전략적으로 육성·발전시켜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나 단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동시에 우리 목소리를 높이고 위상을 제고시켜 나가야 한다.

인류 보편적 가치관. 이는 다가오는 21세기 세계일류국가 되기 위한 기본명제이다.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구체적인 대책과 프로그램을 속히 마련하고, 중장기적 안목 하에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이를 추진해 나가야 할 때이다. **남정**

19 17년 소련의 공산당 혁명 이후 70여년에 걸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이데올로기 전쟁은 자본주의의 승리로 끝이 났다.

공산화되기 이전에는 쌀 수출국이었으나 공산화로 폐쇄된 이후에 쌀 수입국으로 전락했던 월남이 자유농을 허용하는 소위 '도이모이(開放)' 정책으로 1989년부터 다시 쌀 수출국이 된 것을 보더라도 자본주의의 강점은 경쟁을 인정하는 데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본주의의 우월성은 누구든지 자기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인정하고 자기 책임하에 경쟁원리에 의거 행동하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경쟁구조에 있다고 생각한다.

전세계가 자본주의를 지향하면서 지금 세계는 경제국경이 무너지고 단일시장으로 통합되고 있다. 더욱이 WTO체제가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세계경제는 무한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세계경제의 자연스런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은 치열한 경쟁을 통하여 서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신문업도 여기에서 예외일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신문사들도 보도의 신속·다양성과 참신성 그리고 공정성 제고 등을 추구하는 노력을 해왔다고 본다.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구독자 확보를 위해 과도한 경품제공 등의 사례가 있었다. 예컨대, 일부 신문보급소의 경우 새로운 주거단지가 형성되면 가가호호 방문하여 TV 안테나 무상설치 등을 제의하면서 자사신문의 구독을 유인하였던 것이다. 때로는 일정기간 동안의 무료배달에 그치지 않고 고객에게 구독을 강요하는 등의 각종 공정거래법 관련 위반사례들이 있다.

작년 봄 10개 주요 일간신문사에 대한 실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문사들이 나름대로自社신문의 최적

신문의 최적생산량



신무성

공정거래위원회 조사1국장

생산량을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에 대해 상당히 고민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먼저, 신문의 최적생산량 결정 및 공급을 논의하기 전에 신문의 특수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공공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을 목표로 삼는 국회, 정부와 법원에다 언론기관을 덧붙여서 이를 흔히 제4부라고들 한다. 이는 언론이 국민생활의 각 부문에 필요한 정보와 함께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제공하여 생활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향유와 의무수행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

문인지도 모른다.

따라서 언론의 행동기준은 당연히 공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모아져야 할 것이다. 이런 언론의 공익성 판단기준은 언론의 본래적 기능인 보도업무뿐만 아니라, 언론이 기업으로서 적정이익을 확보하여 재생산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판매업무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사회에서의 신문보도는 민주주의 국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의 언론은 '있는 사실'의 정확한 記述과 건전한 상식에 벗어나지 않는 판단을 기반으로 하여 제반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과거 중국의 신문에는 맞는 것이 날짜뿐이라는 말을 상기한다면 신문보도에 있어서의 공익성의 중요함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신문의 판매업무는 보도업무와 나란히 동전의 양면에 해당한다. 개방경제체제에서는 광고기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총 광고비 중에서 신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고 신문사 수입에서 광고료 수입이 구독료 수입보다 많다는 사실을 감

안하면 신문사 운영에서의 판매업무의 중요성은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판매는 수요에 맞추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요즘에는 신문사가 유효수요에 부응하는 적정생산량을 초과하여 신문을 제작·판매함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과잉생산된 신문의 구독자 확보를 위하여 無價紙를 제공하고, 일부 신문사는 그래도 남는 것이 있어 그냥 버리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는 개별 신문사의 손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크나큰 자원손실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신문사가 구독자나 광고 이용자를 많이 확보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의 경품제공의 한 방법으로 일정기간 신문을 무료로 제공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선진국을 향하여 발돋움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가게, 기업 그리고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한마음이 되어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에 있다. 버려지는 신문지를 다른 부문에 활용함으로써 국민생산을 증가시켜야 한다. 이런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은 공정거래질서의 핵심인 공정경쟁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신문업도 현대 정보화사회에서 무한경쟁을 요구받고 있다. 종국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신문도 ABC제도를 실시함으로써 각 신문사가 수요에 맞게 생산을 하여 공정거래질서를 준수하면서 판매가 이루어질 때가 곧 올 것으로 믿는다. 다만, 과도기에 접한 지금으로서는 신문사가 공정경쟁규약 등을 제정하여 스스로 공정거래법을 준수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성숙한 모습을 보이기를 기대한다.

모든 신문사가 공정거래규정을 준수할 때 구독자들은 경품의 내용이 아니라 보도의 내용에 따라 신문을 선택하게 될 것이고, 신문사 또한 보도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어 우리 국민들을 위한 제4부로서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되리라 믿는다. 



·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전략(CALS)

‘산업의 인터넷’으로 비유되는 CALS(continuous acquisition and life cycle support)는 1980년대초 미국방성이 군사조달 시스템에서 서류에 의한 불필요한 업무의 증가와 열악한 통신체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한 것이다. 지금은 시스템의 개발 및 운용과정에서 디지털정보를 이용하는 자동화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함께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공유, 원가 절감, 종합품질경영능력의 향상 등을 꾀하는 전략으로 그 의미가 확산되었다.

다시 말해서 CALS는 ① 각종 기술자료를 디지털화하여 관련 데이터를 통합·운영하는 업무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종이 없는 업무수행 체제를 구현하고 ② 요구 및 변경사항을 적시에 수용하고 조달·보급정비 대기시간을 감소시킴으로써 시스템 획득 및 개발기간을 단축시키며 ③ 동시공학적 정보서비스를 통해 문서관리 소요비용 절

감, 행정절차 간소화, 인력절감 등 정보화 경영혁신 및 비용절감을 기하고 ④ 설계·제작과정에서의 오류감소, 불합리한 운영개선, 정보의 일관성 유지 등을 통한 품질향상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국방성 주도의 추진체가 93년 이후부터 민간산업 중심으로 급속도로 이동하고 있으며, 2000년까지 정부조달을 CALS 프로그램에 근거한 업무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국내에서도 CALS에 대한 인식이 대두되고 있기는 하나 구체적인 개념과 실행방법 등에 대한 이해가 아직은 부족한 실정으로 정부는 CALS 도입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시범사업에 대해 희망업체를 선정·추진해 나가고 있다.

물가안정기조 정착시켜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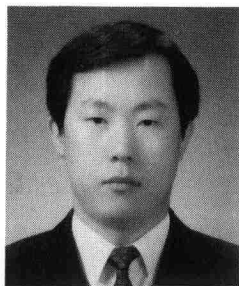
지난해 우리 경제는 9.3%에 이르는 높은 성장률을 시현하면서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4.5%에 묶어 뒀으로써 이 두 가지 지표만 놓고 볼 때는 기대 이상의 양호한 거시성적을 얻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올해의 경우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비롯한 각종 거시지표들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될까? 최근 이에 대한 기대와 예측이 분분하다.

무수히 많은 불확실한 변수들이 작용하는 복잡다기한 생물체의 미래 움직임을 아무도 정확히 그려 낼 수 없긴 하지만 각종 전망치들을 일견해 보면 성장률의 경우 작년보다 낮아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다만, 호황국면을 이탈하고 있는 국민경제활동 수준이 적정생산수준으로 부드럽게 근접해 갈지 아니면 가파르게 급강하할지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이 있는가 하면 기업 쪽을 중심으로 한 비관적인 견해도 있어 서로 상충되고 있다.

경기가 상승국면에 진입할 때는 과열 여부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처럼 하강국면에 진입할 때는 軟着陸 여부에 대해서 소위 '경기 논쟁'이 활발하게 벌어진다.

이러한 논쟁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병완
영남대 경제학과 교수

이제는 성장을 안정보다 하위의 정책목표로 명실상부하게 끌어내려 놓아야 한다. 성장은 국민 모두에게 열매를 가져다주는 성장이라야 의미가 있는 것이며 그것은 곧 물가안정의 바탕 위에서라야 가능하다. 물가안정이 뒷받침된 낮은 경제성장은 장기적인 물가안정기조를 정착시킴으로써 성장잠재력을 오히려 강화시킨다.

물가안정을 희생하더라도 성장의 지속을 바라는 입장과 성장의 둔화를 감수하더라도 물가안정이 저해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이 서로 부딪치는 모습을 띠고 있음을 종종 보게 된다. 前者의 입장을 큰 목소리로 일관되게 호소하는 경제주체들은 항상 기업부문이다. 경제예측의 불확실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재계에서 내세우는 경기전망은 항상 비관 쪽으로 쏠려 있기도 하다.

그러면 과연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인 안정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입장에 입각한 거시정책이 바람직할까?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後者 즉, 성장의 둔화를 감수하더라도 물가안정이 저해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일 수밖에 없다. 사실 안정우선의 경제기조를 다져야 한다는 명제는 이론과 현실의 양면에서 이미 검증된 것으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누누이 지적한 바 있어 이를 강조하는 것이 새삼스러운 일로 느껴질 정도이다. 아울러 최근의 각종 여론조사는 물가안정을 통한 민생안정이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돼야 함을 보여주고 있어 물가안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도 하다.

고물가를 수반하는 성장은 지탱될 수 없다

지난 30여년의 눈부신 압축성장으로 우리 경제의 규모는 현재 세계 10 위권에 근접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률이 아무리 높더라도 물가가 마구 올라가면 성장의 열매를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향유할 수 없게 되어 사회적 갈등이 초래되고 또한 경제활동은 비생산적이고 불건전한 투기 쪽으로 쏠리게 되면서 중국에는 성장도 주저앉고 만다. 즉, 고물가를 수반하는 고성장은 지탱될 수가 없는 것이다.

왜 그럴까? 인플레이는 우선 근로소득생활자의 구매력을 앗아가 근로의욕을 짓밟는다. 이때 토지 등 부동산 가격은 더 많이 오르기 때문에 이러한 실물자산을 많이 가질수록 인플레이로 인한 불로소득을 더 많이 챙길 수 있게 되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된다. 불로소득자의 과소비는 거품경기 과열을 불러오면서 물가인상을 더욱 부추기게 된다.

인플레이는 또한 부채보유자의 상환 부담을 경감시켜 주므로 기업들로 하여금 자기자본비율을 낮출수록 인플레이의 혜택을 더 많이 보게 만든다. 제도금융권의 저금리 자금을 최대한 많이 조달해서 천문학적 규모의 부채를 지면서도 실물자산을 많이 보유하면 인플레이의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부채와 자산이 많은 재벌기업들이 결국 인플레이로부터 가장 큰 혜택을 누리게 된다. 만일 산업자금으로 싸게 빌린 뭉치돈을 이용해서

업무용으로 위장해가며 부동산을 마구 사들이면 그들은 인플레이의 혜택을 더욱 키울 수 있게 된다. 재벌기업들의 이러한 '財테크' 행위는 정부의 5·8 강제매각 조치로 백일하에 드러난 바 있다. 인플레이의 최대 수혜자들로서는 물가상승을 미시적 단견으로 반갑게 받아들일망정 중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시각에서 굳이 경계심을 갖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인플레이는 중국적으로 모든 경제주체를 피해자로 만들고 만다. 기업들도 공장부지가격과 지대 및 임금의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로 가격경쟁력을 잃게 되면서 수출은 막히고 값싼 외국상품의 수입으로 내수시장에서도 고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생산이 줄면서 결국 고성장시대는 마감되고 실업자가 즐비해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면서 종래에는 공황상태로 치닫게 될 수도 있다.

요컨대 물가안정이 없이는 경제의 건전성장이 지속될 수 없고 국제수지의 개선이나 빈부격차의 해소와 같은 중요한 거시적 목표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과거의 경험이 남긴 값비싼 교훈

우리는 이미 70년대의 석유파동으로 인한 고인플레이 시대를 경험하면서 인플레이와 인플레이 기대심리가 경제에 미치는 해악을 절감한 바 있다. 그리고 만연된 물가오름세심리를 꺾어서 주저앉히기 위해서는 예산동결 등 얼마나 고통스러운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가 하는 점도 80년대 초반의 경험

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5공화국 7년 동안의 안정중시정책이 남긴 또 다른 교훈은 우리도 인플레이율을 낮은 자리수에 붙들어매 수 있다는 가능성일 것이다. 그리고 전반기에 다 저놓은 안정화와 내실화 여건이 있었기에 80년대 후반기에 와서 3저 여건이 도래했을 때 호황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 중요한 시기에 국민경제는 눈에 안 보이지만 경제에 치명적인 해를 입히고 마는 인플레이라는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있었고 장기적 성장에 필요한 경제체질 강화의 호기를 살리지 못했다.

근로의욕은 저하되고 과소비현상과 부동산·증권투기를 비롯한 財테크 열기가 만연되는 등 심각한 후유증만 남긴 채 고성장·거대흑자경제는 곧 부실성장·거대적자경제로 돌아섰다. 기업들은 경제적 잉여를 투자활동이나 기술개발에 사용하는 대신 부동산 투기와 財테크에 소진하고 말았다.

이후에 정부가 내놓은 4·4조치와 같은 부양책들은 물가 부추기는 데만 기여할 수밖에 없었다. 거품경제 현상은 국민경제뿐만 아니라 국민의식에도 심대한 후유증을 남겼고 이는 6공정부의 전반적인 실정으로 깊은 상처로 남아 있다. 지나친 고성장은 침체보다 못한 상처만을 남길 따름이라는 값비싼 교훈을 새겨야 할 것이다.

작년의 경우에 5%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물가상승률이 둔화된 것은 그 당시의 거품이 이제 겨우 가라앉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물가안정기조의 정착노력은 이제부터 본격 시작되어야 한다. 마지막 남은 거품도 마저 없애야 한다. 폭등

에 폭등을 거듭하던 부동산가격의 진정국면을 계속 유지시켜야 한다. 4.5%의 물가상승률도 매우 높은 상승률로 인식될 때야 비로소 물가안정 심리가 자리잡힐 수 있을 것이다. 서민가계가 피부로 체감하는 물가는 사실은 4.5%보다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기준연도인 90년에서 가장 멀어져 있는 시점이어서 이러한 피부물가와 지수물가의 괴리를 더욱 크게 하고 있다.

이제는 성장을 안정보다 하위의 정책목표로 명실상부하게 끌어내려 놓아야 한다. 성장 없는 안정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성장은 국민 모두에게 열매를 가져다주는 성장이라야 의미가 있는 것이며 그것은 곧 물가안정의 바탕 위에서야 가능하다.

그렇다고 안정정책이 곧 경제주체들의 건전한 생활활력을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아니다. 물가안정이 뒷받침된 낮은 경제성장은 장기적인 물가안정기조를 정착시킴으로써 성장잠재력을 오히려 강화시킨다.

안정정책의 기초토대부터 마련해야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정부는 정부대로 인기없는 긴축정책에 매달려야 하고 국민은 국민대로 고통에의 동참을 감수해야 하는데, 이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선거를 의식하지 않으면서 기업단체와 정치권 및 언론의 확장정책을 요구하는 압력으로부터 중립적일 수 있어야 하지만 정부로서는 그게 어디 쉬운 일 이겠는가?

더욱이 우리 경제에는 물가안정 정

**작년 하반기부터 가열돼온
경기논쟁은 수요를 자극하기 위한
단기부양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우려를 자아낸다. 안정이라는
보약은 당장은 입에 쓰지만
성장이라는 설부터 영양제와는 달리
우리 경제의 체질과 하부구조를
튼튼하게 해줌으로써 소위
선진화합경제로 가는 지름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다. 돈가치의 안정을 책임져야 할 한국은행에게 제도적·관행적으로 중앙은행다운 위상을 정립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기활성화를 재경원 쪽에서 거론하면 한국은행은 '유연하고 신축적인' 통화관리방침을 내세우며 화답하는 것을 흔히 보게 되는데 이를 보는 국민들로서는 정부의 물가안정의지를 어찌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게다가 인플레이를 성장의 불가피한 부산물로 보던 6~70년대 성장정책시대의 관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정책당국자들도 있어 보여 국민들의 우려를 가중시킨다.

돌이켜보면, 70년대의 경우 매년 15% 정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보였는데, 간단한 계산을 해보면 그 당시에는 소비자들이 느끼는 통화의 실질구매력이 경제개발 5개년계획 한번 할 때마다 반감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90년부터 작년까지 지난 6년 동안의 소비자물가는 평균 6.4%의 상승률을 보였다. 70년대에 비한다면 돈가치의 추락속도가 많이 감속된 셈

이긴 하나 선진국 수준에 비하면 여전히 매우 높다. 이대로 가면 곧 10만원권 지폐가 아니라 50만원권 지폐의 발행 필요성을 아우성치는 목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한국은행에게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통화신용관리를 맡김으로써 장기적인 통화가치 안정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물가안정기조 정착의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과거처럼 행정력을 동원한 물가지수관리작전에 매달리는 물가정책으로는 장기적인 일반물가의 상승을 막을 수 없다.

저속·안정성장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개혁을 도모할 때

개방과 국제화의 진전과 함께 우리나라의 대내외적인 경제환경은 여러 모로 크게 달라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를 들여다보면 우리 경제는 이제 고도성장에서 저속 안정성장으로 체질개혁을 도모해야 할 전환기적 호기를 맞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80년대 후반의 거품현상이 진정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 및 부동산 싼명제의 실시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통한 세제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장기적으로 건전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토대가 닦여가고 있다. 비자금사건도 기업경영환경과 경영구조를 장기적으로 건전하게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물가안정의 달성은 금리의 하향 안정화를 유도하여 자금조달 비용을 경감시킴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게 된다. 아울러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리 자율화를 무리없이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줄 것이다.

자본시장개방 일정을 별 충격없이 마무리짓는 데도 국내물가의 안정이 필수적임은 말할 것도 없다.

그리고 장기 안정적인 산업자금의 공급처가 될 장기채권시장, 서민주택 마련을 도와줄 장기주택자금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도 물가안정은 꼭 달성되어야 한다. 물가가 두 자리로 뛰는 경제에서는 특별한 유인이 따로 없는 한 만기 10년 이상의 장기채권이나 연금저축을 누가 선호하겠는가? 채권시장의 활성화는 또한 공개시장 조작과 같은 간접통화관리방식의 정착을 위해서도 필요하므로 말하자면 물가안정은 금융시장의 발전과 금융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도 선결과제로 추진돼야 한다.

그런데 올해의 물가여건을 보면 흐름의 징조가 여기 저기 있어 보인다.

우선 4월의 총선으로 인해 과거보다는 차분하더라도 물가오름세심리가 부추겨질 가능성이 있다. 외국인 주식 투자한도 확대에 의한 해외자금 유입으로 통화증발이 예상되고 농산물물의 해거리 현상으로 인한 공급감소 가능성이 점쳐진다.

그리고 공공요금을 비롯한 잠복성 물가상승요인도 있으며 무엇보다도 작년 하반기부터 가열되어온 경기논쟁은 수요를 자극하기 위한 단기부양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우려를 자아낸다.

이제 정부는 강력한 안정의지를 다져야 할 시점이다. 그리고 흔들림 없

이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경제주체들에게 확고한 정부의 의지를 각인시켜 줄 수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안정이라는 보약은 당장은 입에 쓰지만 성장이라는 선부른 영양제와는 달리 우리 경제의 체질과 하부구조를 튼튼하게 해줌으로써 소위 선진화합경제로 가는 지름길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홍문표**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나라경제』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저희 『나라경제』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나라경제』는 창간 이후 국민과 정부를 잇는 징검다리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만, 아직 독자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本誌는 '독자와 함께 호흡하는 잡지'가 되기 위하여 독자가 참여하는 紙面을 대폭 늘리고자 합니다.

경제정책에 대한 제언, 本誌에 게재된 원고에 대한 의견 등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원고가 채택되어 '나라경제 포럼'이나 '제언'에 게재된 분에게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원고는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보내주십시오.

* 원 고 매 수: 200자 원고지 20매 이내

* 마 감 일: 수시로 접수

* 보 내 실 곳: ☎ 135-270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951-12 국민경제교육연구소 『나라경제』 편집실

전화: (02)3452-8241 FAX: (02)569-9415

경제성장세 支持에 초점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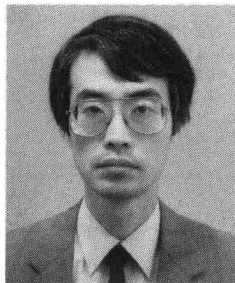
지난 한해를 돌이켜보면, 한국 경제는 WTO체제의 출범에 따른 전세계적인 무한경쟁의 회오리와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일련의 과거청산작업에도 불구하고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와 수출 1천억달러를 상회하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우선 경기순환 측면에서 볼 때 우리 경제는 지난해 36개월에 걸친 경기확장국면이 정점에 다다름으로써 9%대의 성장세를 시현하였다. 성장의 내용에 있어서도 세계경제의 회복과 超엔高에 힘입어 수출과 설비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경공업 부문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중화학제품들이 주종인 고부가가치 부문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바람직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시장개방의 확대로 초래된 산업구조조정으로 인해 호경기 속에서도 중소기업의 도산이 줄어들지 않는 '산업의 양극화 현상'으로 빛이 바랄 수밖에 없었다.

산업계의 생산성 혁명이
지난해 물가안정에 기여

여기서 필자는 지난해 우리 경제가



정문건
삼성경제연구소 상무

작년 3/4분기를 정점으로
하강국면에 들어선 경기의
연착륙 즉, 경제성장세의 支持와
생산성 혁명이 중소기업으로
확산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하겠다. 왜냐하면
그동안 경기회복을 주도하였던
수출과 설비투자의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되고 있는데다
내수마저 침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론 팔목할 만한 업적 중 하나로 산업계의 '생산성 혁명'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동안 제조업 현장에서는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각종 합리화 노력을 기울이고 컴퓨터를 활용해 생산체제를 자동화함으로써 업종에 따라서는 벽돌 한 장 더 들이지 않고 생산능력을 배가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지난해 제조업 생산성증가율은 두자리 숫자인 12%에 이르게 되면서 유례없이 경기호황 속에서도 물가상승률은 4%대의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제조업의 혁신의 결과로 우리 경제는 불규칙한 농산물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中心 인플레이션(core inflation)'이 한자리수 시대 그것도 5% 이내의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단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 경제도 정보화·전산화의 물결이 산업현장에 확산됨에 따라 '경기과열과 급랭'이라는 과거 냄비체질에서 벗어나 경기순환의 진폭과 주기가 과거와는 달리 안정적인 모습으로 전환되고 있다 하겠다.

그러면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금년도 경제를 전망해 보자. 먼저 금년 중에 전개될 대내외 환경을 점검해 보면 WTO체제의 본격화와 통상압

력의 가중으로 시장개방이 가속되는 가운데 총선과 각종 개혁정책의 본격화로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국제교역환경 악화되는 등 대외여건 어려워질 듯

대외여건을 살펴보면, 세계경제는 95년의 회복세가 금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세계 유수 전망기관들은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미국은 주택·자동차 등 주요 내구재 소비 둔화로 성장전망이 당초 예상보다 못할 것으로 판단되고, 유럽은 높은 실업률과 통화통합을 앞두고 재정적자 축소를 목표로 한 역내국간 거시경제조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금년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그리고 우리의 주요 교역 대상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도 금년중 산업화의 지속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나 성장세는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다만, 선진국 중 일본만이 과거 4년여에 걸친 장기불황에서 소폭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제교역환경도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출범한 WTO의 국제무역분쟁 조정능력이 아직 의문시되는데다 미국이 대통령 선거로 통상압력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세계경제의 회복이 한계를 보이고 교역환경도 악화될 것이므로 세계무역신장률도 95년의 8.0%에서 감소한 6.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제환율은 엔화강세현상이 시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현재 시장에서는 그간의 달러 약세가 기본 경제여건에 비추어볼 때 지나치게 진행되었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데다가 그동안 수차에 걸친 미·일 무역협상의 결과 양국간 무역불균형이 시정되는 추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달러의 강세가 큰 폭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엔화는 금년 연말 달러당 105~110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96년도 우리나라 수출여건은 작년에 비해 악화될 전망이다. 그렇다고 우리 상품의 수출증가율이 한 자리 숫자로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반도체 및 전기·전자, 자동차, 선박 등은 제품 경쟁력 강화로 수출선이 이미 전세계로 다변화되었기 때문이다.

경기양극화현상 지속되는 등 대내여건도 어려울 전망

96년도 대내여건을 살펴보면, 정부는 OECD 가입논의가 본격화함에 따라 각 분야의 시장개방을 가속화하고 국내의 제반제도와 정책들을 국제화시켜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변혁은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하겠지만, 이 개혁의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책간의 상충문제나 정책적 시행착오 등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심화되고 있는 중화학공업과 경공업,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산업의 양극화 현상이 경제 각 분야의 경쟁격화로 유통·금융 분야로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표 1〉 경제성장 전망

(단위: %)

	95년	96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국내총생산	9.3	6.5	7.1	6.8
총소비	7.4	6.4	6.5	6.5
민간소비	8.1	6.6	6.8	6.7
총고정자본형성	12.0	6.0	6.6	6.3
설비투자	17.3	6.1	7.8	7.0
건설투자	8.1	6.0	5.6	5.8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표 2〉 물가전망

(단위: %)

	95년	96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생산자물가 상승률	4.8	3.1	2.7	2.9
소비자물가 상승률	4.7	5.0	4.8	4.9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또한 이러한 와중에서 다가오는 총선으로 각종 정책이 정치논리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기업의 미래를 대비한 투자 등 경제활동을 더욱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이상과 같은 대내외 경제여건을 종합해 보면, 96년도 우리 경제는 성장세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둔화된 6.8%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95년중 지난 2년여에 걸쳐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던 설비투자는 96년 들어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기업들의 투자순환이 종료됨에 따라 증가율이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결정요인을 보더라도 가동률 하락과 재고의 증가, 경제외적 불안요인으로 작년과 같은 큰 폭의 투자증가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소비는 금년중 부동산실명제 및 금융자산종합과세 실시와 개혁을 위한 지속적인 司正 등으로 자산소득이나 불로소득에 의한 소비증가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당연구소에서 조사한 소비자태도지수도 4분기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고 비자금 사건 이후에는 더욱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자리 물가상승세가 정착되고 있는
현재 시중금리는 금융구조 변화에
따른 유동성 요인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금융개혁의
가속화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사금융시장의 중개규모를 감안하여
정부는 총통화증가율을
명목경제성장률 이상 수준에서
신축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금년중 수출은 물량기준으로 95년의 17% 증가에서 7% 증가로 그 증가세가 대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전망의 근거는 선진국의 경기회복세가 확대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다 원화환율이 자본유입 확대에 따른 달러공급의 증가로 절상될 것이므로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다소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한편 내년중 국내물가는 기술발전으로 공산품가격이 꾸준히 안정되고 경기둔화로 수요압력이 더욱 완화된 동시에 수입개방과 경쟁촉진에 따

른 가격과괴현상까지 가세하여 5% 이내의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공공요금 현실화 추진과 작황부진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의 일시적 급등으로 물가불안요인은 작년에 비해 커지고 있다 하겠다.

끝으로 96년의 대외거래를 전망해 보면, 수출은 대외여건의 악화와 범세계적인 경쟁격화로 금액증가율이 작년보다 크게 줄어든 18.5%에 머물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수출총액은 1,504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입은 95년중 설비투자증가가 둔화되고 지난 2년간 집중된 설비투자의 수입대체 효과가 점차 가시화됨에 따라 수입증가세는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96년도 수입규모는 95년에 비해 14.3% 늘어난 1,56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96년 경상수지는 적자규모가 작년보다 크게 개선되었지만 48억달러 적자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성장세 支持에 정책의 초점 맞춰야

96년은 대외적으로는 '무한경쟁시대'가 본격화하고 대내적으로는 총선으로 인해 정치논리가 득세하고 개혁과 개방이 가속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는 작년 3/4분기를 정점으로 하강국면에 들어선 경기의 연착륙 즉, 경제성장세의 支持와 전술한 생산성 혁명이 중소기업으로

〈표 3〉 대외 거래 전망

(단위:억달러, %)

		95년	96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경상수지		-80	-30	-18	-48
통 관 기 준	무역수지	-99	-40	-24	-64
	수출	1,270	717	787	1,504
	(증가율)	(32.2)	(23.0)	(14.6)	(18.5)
	수입	1,368	757	811	1,568
		(33.7)	(16.0)	(13.4)	(14.6)

자료:삼성경제연구소

확산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하겠다.

왜냐하면 그동안 경기회복을 주도 하였던 수출과 설비투자의 증가세가 대내외환경 악화로 급격히 둔화되고 있는데다 내수마저 司正政局의 장기화로 침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기의 양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문제도 경기가 나빠지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정부는 금융정책의 집행에 있어 보다 신축적인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한자리 물가상승세가 정착되고 있는 현재 시중금리

는 금융구조 변화에 따른 유동성 요인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금융개혁의 가속화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사금융시장의 중개규모를 감안하여 정부는 총통화증가율을 명목 경제성장을 이상 수준에서 신축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간접자본 관련 재정투자를 조기 집행하고 동시에 중소기업의 자동화 지원에 있어서도 재정의 역할을 크게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인력·자금·기술 등 대기업의 경영자원의 중소기업으로의 이전이 활성화되도록 준비인정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는 등 각종 세제유인정책도 지금까지의 사고를 파괴하는 수준에서 새로이 정비되어야 하겠다.

이렇게 되어야만 정부가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을 위해 국내제도와 정책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과도기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

경 제 상 식

· 기업연령지수

‘기업연령지수’란 기업의 안정성·성장성 등을 비교해서 현재의 기업 체력이 어느 연령수준에 와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기업의 연령을 지수화한 수치이다.

따라서 기업의 설립연도와는 무관하다. 대신 해당산업의 전망과 기업의 성장성이 높은 기업은 기업연령지수가 낮아지나 반대로 해당산업이 쇠퇴하고 기업의 성장성이 떨어질 경우 기업연령지수도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된다.

즉, 20대의 경우 기업의 성장성이 높은 대신 안정성은 떨어질 수 있다. 또 30대와 40대는 어느 정도 성장성과 안정성을 겸비했다고 볼 수 있으며,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기업의 성장성이 현저히 낮아져서 경영혁신이 필요할 정도로 노쇠함을 시사한다.

참고로 94년말 기준으로 한경Business가 산출한 우리나라 상장기업 564개사(증권업과 관리대상 제외)의

기업평균연령지수는 45.6세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자동차·전자·철강업종 등이 40대 초반에 포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층	회사수*	주요 기업
20대	3	• 청호컴퓨터, 환영칠강공업, 평화산업
30대	256	• 한국이동통신, 신원, 나산실업, 대구백화점, 현대자동차, 데이콤, 삼성전자, 대우전자 등
40대	182	• 기아자동차, LG전자, 쌍용정유, LG화학, 포항중합제철, 대한항공, 아남전자, 대우 등
50대	92	• 한전, 현대건설, 코오롱 등
60대	27	• 한국유리, 한국화장품, 한일방직 등
70대 이상	4	• 동원, 영우통상, 태화 등
계	564	

註: *94년말 기준. 증권업과 관리대상 제외

성장토끼와 안정토끼

올 해 우리나라 경제는 다소 하강국면에 들 것으로 내다보는 사람이 많다. 특히, 기업가들의 경기 전망은 매우 비관적이다. 95년 경제는 9% 이상 성장했고 물가도 5% 이내로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96년 경기는 투자부진과 수출저조로 인하여 매우 저조할 것으로 많은 기업가들이 우려하고 있다.

정부도 96년 경제가 95년보다 못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경기급락보다는 경기연착륙을 유도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정부사업의 조기집행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연초가 되면 으레히 정부정책의 최고 책임자는 연중 정책운용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을 받는다. 그 중에서 특히 성장이나 안정이나의 질문은 단골메뉴이다. 올해 경기의 급락을 막고 경기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성장을 중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성장과 안정은 그동안 두 마리 토끼로 곧잘 비유되어 왔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면 한 마리도 못 잡으니까 한 마리 토끼를 미리 결정하여 그 토끼만을 잡도록 해야 된다고



김인철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우리 경제의 연착륙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성장과 안정의 선택문제를 새롭게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장목표와 물가목표가 적정 수준에 잡혀 있으면, 여러 관련된 정책을 적절히 배합하여 사용함으로써 경제성장 토끼와 물가안정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최근에 와서 안정적 성장이라는 구호 아래 성장토끼와 안정토끼 두 마리를 모두 잡겠다는 말도 나오고 있으나, 아직도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는 힘들다는 인식이 사람들 머리 속에 깊숙히 뿌리박혀 있는 듯하다.

성장과 안정에 대한 논의를 함에 있어서는 대상기간의 장단기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 성장전략과 단기 경기조절작용의 차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50년대 초반에 개발된 후진국 성장이론으로서 불균형성장이론이 있다. 이 이론에 의하면 경제에는 선도부문과 전통부문이 있게 마련인데, 개발 초기에는 정부가 선도부문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의 전체규모를 빠르게 확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선도부문의 성장을 통해 '경제파이'의 전체규모는 확대될 것이며, 그런 후 '국물효과(spillover)'에 의해 결국 다른 부문도 경제이익을 얻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이론적 주장을 불균형성장이론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같은 불균형성장이론도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발전하면

설득력을 잃게 되며, 그때는 불균형 성장보다 오히려 균형적 성장이 더 바람직한 발전전략이 된다고 보는 학자들이 많다.

50년대 후반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 성장과 안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실업률과 인플레이율은 서로 역관계에 있음을 통계적 분석을 통해 확인하고, 이것을 정부는 단기 경기안정화정책에 응용하기도 했다. 소위 필립스(Philips)곡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성장을 위해서는 물가안정은 다소 희생해야 하며 만일 물가안정을 위한다면 어느 정도 낮은 성장은 감수해야 한다는 논리가 한동안 상당한 설득력이 있었다. 그후 경제성장과 물가안정 간의 역관계는 후진국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그러나 70년대에 들어 필립스곡선에 입각한 성장과 물가안정의 역관계가 깨져 버렸다. 소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여 경기불황과 물가양동이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이다.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총수요정책뿐 아니라 총공급정책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정책당국이 깨닫기 시작했다.

경제의 총공급곡선이 수평인 경우 정부의 총수요 확대정책은 인플레이션 없이 성장을 달성할 수 있으나, 총공급곡선이 수직인 경우 총수요 확대정책은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물가만 상승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래서 총공급곡선의 위치와 형태가 어떠한가에 따라 정부정책의 효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이 새롭게 인식되었다. 그런데 장기 총공급곡선은 수직이 되므로 총수요 확대정책은 장



기에는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렇게 하여 한때 정책수립자들이 신봉하던 성장과 안정의 역관계는 정책적으로 이용할 가치가 크게 떨어졌다.

그후 70년대 후반 들어 합리적 기대론이 출현하여 기존의 거시정책과 이론을 크게 뒤흔들어 버렸다. 미래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여하에 따라 단기 총공급곡선이 수직이 될 수 있고 또 우상향할 수도 있는데, 합리적 기대론자에 의하면 만일 사람들의 기대가 합리적 기대라면 단기에라도 총공급곡선은 수직이 되고 따라서 수요 확대정책은 오로지 물가만 자극한다는 것이다. 시카고대 루카스(Lucas) 교수는 합리적 기대론을 가지고 95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사람들의 기대가 합리적이라는 말은 그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정책의 배경과

정책의 효과를 미리 알 수 있다는 뜻이다. 예컨대, 경제는 이미 완전고용 수준에 접근하고 있는데 정부가 통화량 증대를 통해 경기를 진작시키고자 할 때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노동자들은 미리부터 임금인상을 요구할 것이며 기업가들은 상품가격을 미리 올리게 되어 결국 실물생산은 늘어나지 않으면서 물가만 올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시중에 자금이 모자란다고 하여 통화량을 늘렸지만 그럴수록 자금부족은 더욱 심화되는 현상을 경험한 적이 많았다. 낮은 수준에 책정된 규제금리와 함께 자금의 초과수요 상태에서 자금의 공급이 늘어나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작용하여 자금수요가 더욱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통화와 물가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심리 때문에 자금공급이 늘어나도 결국 자금부족은 계속되었

던 것이다.

이렇듯 성장과 안정 간의 이론적 관계는 이제 매우 불분명해졌다. 어떤 때는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이 서로 역관계에 있으나, 또 어떤 때는 정의 관계에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되어 버렸다.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없다는 말은 이제 예전과 같은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설령 성장과 안정이 서로 역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 정책을 적절히 혼합하여 쓰면 성장과 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예컨대 통화공급의 확대를 통해 총수요를 증대시키면서 생산증대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일어난다. 이 때 정부가 세금감면과 기술지원 등을 통해 총공급곡선을 하향이동시키면 생산증대와 물가하락을 기대할 수 있다.

69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네덜란드의 틴버겐(Tinbergen)은 정책목표가 많은 경우 정책수단도 그만큼 많은가 아니면 그보다 더 많아야 한다는 소위 틴버겐준칙을 발표한 바 있다. 실제 한 나라에서 추구하는 정책목표는 두 가지 이상이고 게다가 정책수단도 두 가지 이상이다. 그러므로 성장과 안정의 두 마리 토끼를 쫓을 수 없다는 말은 과장된 표현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특히 연초에 정부와 언론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성장과 안정의 선택문제는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 그들의 논의는 거시경제의 총수요와 총공급의 상호작용 틀 속에서 진행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그것은 정치적 색채를

이제부터는 우리도 너무 거시적인 GNP성장을 자체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말고, 각 계층의 소득이 비슷한 성장속도로 갈 수 있게 필요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경기양극화현상 등 불균형성장을 조속히 지양하고 균형적 성장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

다분히 띤 것이었다. 우리나라에서 고위정책담당자의 영향력은 아직도 대단하다. 그래서 그들이 경제적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경제파이'라는 전체규모를 늘려가야 한다고 믿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한다. 지난 30년간 우리 경제는 주로 대기업이나 재벌 중심으로 성장하여 왔다. 그래서 고위 정책책임자가 성장론자인가 아닌가의 여부에 따라 對재벌정책이 달라질 수 있었다.

이제 96년 우리 경제의 연착륙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성장과 안정의 선택문제를 새롭게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처럼 완전고용상태에 있지 않다. 그래서 웬만한 확대정책은 생산증대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어느 정도 물가도 부추긴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장목표와 물가목표가 적정 수준에 잡혀 있으면, 여러 관련된 정책을 적절히 배합하여 사용함으로써 경제성장 토끼와 물가안정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거시총량지표를 관리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

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이제는 거시총량지표에만 집착하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 우리가 이제는 연간 1인당 1만 달러 소득을 올린다고 하지만 그것은 총 GNP 소득을 전체 인구수로 나눈 결과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은 실제로 국민 한 사람이 모두 1만달러 소득을 누린다는 뜻이 아니다.

우리나라 경제형편에 적절한 실질성장률은 7~8%라는 견해가 10여년 전부터 있어 왔으며, 앞으로 10년까지도 그것이 우리의 적정성장률이라고 평가하는 학자들이 많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도 너무 거시적인 GNP성장을 자체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말고, 각 계층의 소득이 비슷한 성장속도로 갈 수 있게 필요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경기 양극화현상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러한 불균형성장을 조속히 지양하고 균형적 성장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

정부가 안정을 정책목표로 추구하는 데 있어서 물가안정을 유지해 가는 한편, 정치·사회적 안정기반을 같이 다져감으로써 사람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성장과 안정은 서로 연계되어 있다. 안정 없는 성장이 무의미한 것처럼 성장 없는 안정도 무의미하다. 정부는 환경보호를 염두에 둔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동시에 경제성장이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가져 올 수 있도록 구태의연한 과거의 정책 목표와 방향을 수정하고 적절한 정책수단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문필**

— 통상산업부 통상무역2심의관실 —



‘무역을 통한 경제발전’의 선봉

통상산업부 통상무역2심의관실은
개발연대에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주도했던
상공부 商易局의 후신이다.
세월이 지나면서 조직과 기능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국제수지 균형과 개방과 자유화에 맞는
수출입정책 수립은 물론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활동에 관한 정책수립과 집행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서로 자리하고 있다.

글 · 이종재/ 객원기자(한국일보 기자)

‘몸’은 김정구인데 마음은 서태지다’는 말이 있다. 나
이 때문에 의욕만큼 안될
때 마음만은 전과 다름없다는 유모
어다.

세월이 지나면서 바뀌지 않는 것
은 없다. 세태가 바뀌는 만큼 바뀌
지 않는다는 것이 어찌면 이상한 일
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
들은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과거
를 더 애뜻해한다. 과거가 화려할수
록 과거에 대한 애뜻한 감은 더하
다. 그러나 과거의 기억에만 집착할
수록 미래는 어둡다. 화려했던 과거
를 기억하고 있는 집단일수록 더 많
은 변신노력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
이다. 이들의 변신과 정확한 제자리
찾기는 한 조직의 새로운 위상을 좌
우하기도 한다. 과거 상공부 시절
商易局이란 이름으로 명성과 함께
힘을 발휘하던 통상산업부 통상무
역2심의관실이 지금 그렇다.

상공부 상역국은 과거 경제기획
원의 경제기획국과 예산국, 재무부
의 이재국, 내무부 지방국과 함께
정부내 최대 정책국으로 자리했던
부서다. 輸出立國의 기치 아래 수출
확대에 힘을 모을 때 모든 책임과
영화가 상역국에 있었다. 수출업체
가 전력부족으로 납기를 맞추지 못
하게 되면 韓電에 지시해 전력을 추
가 공급토록 하고 수송수단이 모자
라면 특별기를 내서 물건을 공수하
도록 하기도 했다.

48년 상무국으로 출발한 상역국
은 50년부터 이 이름으로 40여년간
영화를 누리다가 94년 정부조직 개
편과 함께 무역국으로 잠시 이름을
바꾼 뒤 94년말 다시 통상무역2심

통상무역2심의관실은 WTO체제 출범 등으로 수출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과 관리가 금지되는 등 정책수단이 제한되고
정부보다 민간의 역량이 앞서는 상황 변화 속에서
‘무역을 통한 경제발전’이라는 숙제를 풀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의관실로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
다. 출범 초기에는 국내에 변변한
산업 하나 없었고 생필품과 외환부
족으로 상역업무의 대부분이 정부
보유외환에 의한 수입과 원조수입
이었다. 이 때문에 수입할당작업은
업계의 이해와 막바로 연결돼 상역
국의 파위가 그만큼 막강했다.

60년대 들어 경제개발계획이 본격
화하면서 강력한 수출드라이브정책
이 추진됐고 상역국의 위상은 한층
높아졌다. 어느 부처 어느 부서고
수출이라면 상역국의 뒷전이었다.
매년 수출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
한 무역진흥시책 수립, 무역금융 중
합상사 수출보험 등 다양한 수출지
원책을 마련했다. 매월 대통령이 주

재하는 수출진흥확대회의를 주관하
면서 수출진흥시책뿐만 아니라 중화
학공업육성 등 전반적인 산업지원시
책도 입안했다. 이 같은 상역국의
위상은 70년대말까지 계속됐다.

그러나 시장개방이 가속화하고
86년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서면
서부터 수출지상주의가 퇴조했고
상역국의 위상도 그만큼 약화돼 갔
다. 이 국의 조직도 시대에 따라 달
라져 80년까지 수출계획과, 수출진
흥과, 수출1과, 수출2과, 수출3과
로 운영되던 상역국에는 80년대 들
어 수입과와 무역협력과가 들어섰
고, 통상무역2심의관실로 바뀐 현
재는 ▲무역정책과 ▲수출과 ▲수
입과 ▲무역협력과 국제기업담당관

실 등 5개 과가 운영되고 있다.

세월이 지나면서 조직과 기능이 달라진 통상무역2심의관실은 국제수지 균형과 개방과 자유화에 맞는 수출입정책 수립은 물론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활동에 관한 정책수립과 집행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서로 자리하고 있다. 상역국 시절과 같은 권한과 영화는 없어졌으나 개방화·자유화·세계화라는 국제경제의 대세를 국내 경제에 맞추어 나가는 조율사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수출의존도가 큰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통상무역2심의관실의 위상은 전과 전혀 달라질 게 없다. 개방과 자유화에 대한 대응이 우리 경제의 당면현안인 것처럼 통상무역2심의관실은 상역국과 같이 여전히 통상산업부의 선임국으로 활동중이다.

통상무역2심의관실은 수출구조의 고부가가치화, 자주적 해외마케팅 체제 구축, 무역인프라 확충,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화 촉진 등을 목표로 뛰고 있다. 특히 WTO체제 출범 등으로 수출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과 관리가 금지되는 등 정책수단이 제한되고 정부보다 민간의 역량이 앞서가는 상황에서 '무역을 통한 경제발전'이라는 숙제를 풀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행정고시 10회인 金弘經국장은 77년 수출 1백억달러를 달성할 때 수출진흥과장을 맡았고 지난해에는 수출 1천억달러를 달성한 주무국장으로 자리함으로써 韓國 輸出史의 산증인이 됐다. 전형적인 충청도 양반으로 친화력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고 있는 김국장은 정연하고 힘있

는 업무추진으로 이름이 더 알려져 있다. 과거 기계공업국장 시절 삼성에 상용차사업 진출을 허가해 놓고 특혜 아니냐는 국회의원들의 집요한 추궁을 논리적으로 설득한 일은 그의 치밀한 논리와 업무추진력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현재까지 선후배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최근 김국장에게 주어진 현안은 자칫 과거만을 그리워할 수 있는 직원들을 다독거리면서도 개방과 자유화에 맞는 상역정책의 수립과 대일역조 개선을 포함한 균형수지, 기업의 국제화를 위한 지원책 등을 수립하는 일. 통상무역2심의관실의 새로운 위상을 정립하는 일도 그의 관심사다. 상공부 시절 중소기업국장과 기계공업국장, 산업정책국장 등을 역임한 김국장의 경력이 통상무역2심의관으로 새로운 길을 찾아나선 그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김국장의 이 같은 의지를 현장에 옮기고 있는 부서는 무역정책과(과장 朴永基 부이사관), 우리나라 무역정책의 총괄담당부서로 대외무역의 기본법인 「대외무역법」을 운영하면서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있고 무역업무 자동화와 무역인력 양성, 무역관련 규제완화 등 시대변화에 맞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말에는 경제계 최대행사 중 하나였던 '수출 1천억달러 기념행사'를 주관해 과거의 영화를 떠올리기도 했다.

매월초 전달의 수출입실적을 들고 기자실을 찾아 수출입의 문제점과 현황 등을 소상히 설명하고 있는 부서는 수출과(과장 金相烈)다. 상역국 시절 수출진흥과와 수출관리과, 무역보험과의 업무를 통합한 부

서로 수출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와 정책을 맡고 있다. 과거 수출입통계나 최근동향, 앞으로의 전망 등 수출입에 관한 수치는 모두 금과장과 金淳哲사무관의 머리에 정확히 입력돼 있다.

수출과는 특히 WTO시대의 본격전개와 함께 수출지원에 대한 직접 지원에 제약이 따름으로써 상대적으로 역할이 커지고 있는 수출보험업무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종합상사의 지도 육성과 수출관련 단체의 지도감독도 수출과의 주요 업무 중 하나다. 수출과의 올해 최대 역점사업은 무역적자 축소.

수입과(과장 許 汝)는 수입동향 분석과 수입제도 운영을 포함한 전반적인 수입정책을 맡고 있다. 대부분 상품의 수입자유화가 이루어졌으나 통합공고, 수입선다변화, 중고품 수입제도 등 국민의 보건·안전 및 산업정책적 측면에서의 수입제한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최근에는 중고품 수입제도 개편, 수입선다변화 축소 등 무역관련 규제완화를 중점 추진했으며 원산지제도의 개선에도 주력하고 있다. 許과장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일본상품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 수입선다변화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풀어나가느냐 하는 것. 許과장과 수출과의 金과장은 행사 18회 동기로 국내 수출입업무를 조화시키는 데 호홉이 잘 맞는다는 것이 주위의 평이다.

무역협력과(과장 朴良雨)는 남북교역을 전담하고 있다. 지난 92년께 남북경협이 활발하게 추진될 때 이 부서는 언론의 상당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으나 통일원의 강력한

대북 업무일원화방침으로 최근의 목소리는 상당히 적다. 그러나 남북 경협문제가 어차피 기업의 일이어서 남북관계가 개선돼 기업들의 교류와 투자가 본격화한다면 언제라도 전면으로 부상해 대내외의 관심을 모을 부서다. 무역협력과는 또 미국과의 협정에 따라 적용하고 있는 전략물자수출입통제제도(과거 코콤)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새로운 다자수출통제체제 가입업무도 추진중이다. 바젤협약에 의한 폐기물의 수출입통제, 연계무역 등과 같은 특수무역관련 업무 등으로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는 중이다.

지난 94년말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통상무역2심의관실에 소속된 국제기업담당관실(과장 金容根)은 부서이름에 걸맞게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과 외국기업의 국내투자문제를 맡고 있다. 시대의 변화추세를 따라 정부내에 새로 마련된 조직이다. 국내기업의 국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외국기업의 국내투자가 다양하게 이루어지면서 이 부서의 현재까지의 역할보다 앞으로의 역할에 더욱 기대를 갖게 한다. 특히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전용공단을 설치하고 외국기업들이 국내시장에서 활동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이와는 반대로 우리 기업들이 상대국에서 활동하는 데 따르는 제약은 없는지 등을 파악, 이를 개선하는 업무가 이 부서의 가장 큰 현안이다. 과거 통상진흥국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한 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근무한 金과장은 이 같은 업무를 우리 경제의 중장기 주요 업무로 판단

일류화업체 및 품목의 개발과 수출활성화, 한국상품전시회 효과의 극대화, 농수산물수출보험·시장개척보험 등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 외국인투자활성화 등이 올해 통상무역2심의관실에 주어진 과제이다.



하고 있다. 이를 위해 金과장은 올해중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와 외국기업의 국내투자가 우리 경제에 무역확대와 연구개발·고용·경제성장 등 여러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점 분석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서태지'이기 위해 통상무역2심의관실은 이제 더 이상 과거 상역국을 그리워하지 않는다. 통상무역2심의관실을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2심의관실의 58명 온 식구가 계획하고 있는 올해 중점업무는 일류화업체 및 품목의 개발과 수출활성화, 도교 등지에

서 열리는 한국상품전시회 효과의 극대화, 농수산물수출보험·시장개척보험 등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 외국인투자활성화 등이다. 과거 상역국의 수출독려와 실적점검, 청와대 행사 등에서 벗어나 국제화·자유화·개방화시대에 걸맞는 체제를 갖추겠다는 계획이다.

상역국이 수출제일주의 시대의 꽃이었다면 통상무역2심의관실은 국제화시대의 핵심부처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무역2심의관실 식구들은 따라서 지금까지 한 일보다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은 부서로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 **남경제**

지 금 세계의 증권시장은 국제화·개방화가 진전되면서 금융의 범세계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정보·통신시스템이 발달하면서 실질적으로 하나의 통합시장으로 변화해 나가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정부는 우리 증권시장의 선진화·세계화를 도모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을 마련하면서 다음과 같은 방향에 역점을 두었다.

첫째, 외국기업의 국내 주식 발행 및 상장으로 국내기업의 직접금융 조달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투자자의 이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제반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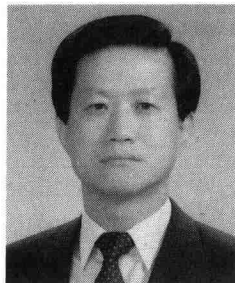
둘째, 외국기업의 국내 주식 발행절차 및 상장요건의 간소화를 통하여 외국기업의 국내 증권거래소시장에서의

5월부터 외국기업의 주식 발행 및 상장 허용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96년 5월 1일부터 신용도가 우수한 외국기업이 한국에서 주식을 발행하여 증권거래소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이는 국내 상장기업의 해외 증권거래소 시장에서의 상장(94년 9월 허용)과 함께 균형된 자본시장 국제화를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외국기업이 한국의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본의 해외유출을 촉진시켜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 등으로 인한 해외자본의 유입을 증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국내투자자에게 외국 우량주식에 대한 투자기회를 제공하여 투자수요를 촉진시킴으로써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것은 물론 특히 96년 OECD 가입을 앞두고 대외적인 자본시장개방 명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국복
재정경제원 증권제도담당관

거래비용의 최소화를 추진함으로써 한국의 자본시장이 국제 자본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시장으로서 비교우위를 갖출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외국기업의 재무서류 및 공시관련사항은 본국 법령에 의한 제약을 인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선택가능한 여러 방안이 있을 경우 국제적 추세와 부합되는 것을 채택함으로써 본국 증시와의 관련성을 유지하고 국제 관행과의 조화를 도모하였다.

넷째, 기존 사법질서의 안전성과 조정비용의 최소화를 위하여 기존의 법질서와 상충되지 않는 선에서 외국기업의 국내주식 발행 및 상장 허용방안을 강구하였다.

발행적격기관에 한해 주식발행 허용

정부는 외국기업의 상장을 통하여 우리 증권시장이 선진화·국제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신용도가 우수한 외국의 우수기업을 발행적격기업으로 하였다. 따라서 외국기업이 한국에서 주식을 발행하여 상장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국내기업에 직접금융 조달기회 제공하고 외국기업의 국내시장에서의 비용을 최소화

정부는 외국기업의 국내 주식 발행 및 상장 허용방안

첫째, 외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본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에 한정한다.

둘째, 증권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국내 또는 외국의 우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BBB 이상으로 받은 법인이어야 한다. 이는 국내기업이 해외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할 경우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과 균형을 도모하였다.

셋째, 증권거래소 상장요건(안정성, 시장성, 수익성, 신뢰성 요건)을 갖춘 외국기업이어야 한다.

앞으로 정부는 세계 증권시장의 통합화가 보다 진전될 경우 외국기업의 국내 주식발행추이를 보아가면서 신흥시장(emerging market)의 기업들도 우리 증권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발행요건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주식예탁증서의 상장방식으로 주식 상장

외국기업의 국내상장방식 유형으로는 原株의 직접상장방식과 주식예탁증서(DR)의 상장방식이 있다. 원주의 직접상장방식은 영국·일본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DR의 상장방식은 미국에서 채택하고 있다.

원주상장의 경우 대체결제방식의 채택으로 동 방식을 도입하는 데 기술적인 문제점은 없으나, 기업 전체를 상장하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과다한 거래비용, 상장유지비용 및 엄격한 규제가 요구되어 외국기업의 국내주식 발행 및 상장의 활성화를 저해할 소지가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원주상장으로 인한 강도 높은 규제로 유수의 외국기업이 동경증권거래소에서 이탈하고 신규상

정부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통화표시·매매단위·거래관행 등의 차이를 감안할 때 우선 DR발행 방식을 외국기업의 주식발행·상장방식으로 채택할 것이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증권시장의 통합화 추세 등을 감안하여 세계증권거래소 연맹총회(FIBV)에서 권고하는 방식인 원주상장방식을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장을 희망하는 기업이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기업 전체상장으로 인하여 국내 증시의 수급균형에 부담을 초래하고 해외 증권거래소와 국내 증권거래소 간의 대규모의 프로그램 매매(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많은 종목의 주식을 재정거래를 통하여 동시에 사고 파는 거래방법으로 주가의 과도한 등락의 주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에 따라 국내증시를 교란하게 될 위험이 있다. 뿐만 아니라 異種 통화권내에서는 원주의 발행·상장의 경우 매매거래 관행의 차이, 환율변동위험 등으로 매매활성화를 저해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통화표시·매매단위·거래관행 등의 차이를 감안할 때, 우선 DR발행 방식을 외국기업의 주식발행·상장방식으로 채택할 것이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증권시장의 통합화 추세 등을 감안하여 세계증권거래소 연맹총회(FIBV)에서 권고하는 방식인 원주상장방식을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발행하려는 외국기업은 외국주식(원주)을 근거로 별도의 유가증권 형태인 DR을 발행하여야 한다. 먼저 외국기업은 원주를 발행하여 현지의 원주보관기관에 보관하고 국내에서는 DR 예탁기관이 원주를 근거로 DR을 발행하여 국내 투자자에게 이를 교부하게 된다.

DR 예탁기관은 원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DR 보유자를 위한 대리인기능 및 발행회사를 위한 명의개서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국내투자자는 DR에 대한 실질소유권을 취득하고, 원주에 대한 실질주주로서 예탁기관을 통하여 제반권리를 행사하게 된다.

외국기업의 DR 발행규모는 외국기업과 국내 중간사증권회사가 자율

〈표 1〉 원주상장과 DR방식에 의한 상장 비교

	원주상장 (대체결제 방식)	DR 상장
발행주체	• 외국기업	• 국내예탁기관 (원주는 해외보관기관에서 보관)
장 점	• 발행 편리	• 현지 유통 원활
단 점	• 유통 및 권리행사 곤란	• DR 발행비용 발생
통화표시	• 자국통화표시	• 당해국 통화표시
증권감독원 신고서	• 신고서 제출	• 좌 동
상장승인	• 상장요건 충족	• 좌 동
상장형식	• 기업 전체상장	• 부분상장(DR발행분만 상장)

적으로 결정하되 국내 증시의 수급여건에 부담을 초래하지 않도록 외국인주식투자자금 유입 추이 등을 감안하여 증권관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발행가격은 원칙적으로 DR 발행자인 외국기업과 국내 주간사증권회사가 시장기능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주간사회사는 외국기업의 공모가격 결정시 사업설명서에 예상공모가를 미리 공표하여 동 가격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을 파악하여 공모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외국기업 발행 DR을 유가증권으로 지정

DR(Depository Receipt)은 증권대체증서로서 원주를 근거로 발행하는 주식예탁증서이다. 이에 따라 외국법인이 자기주식 대신 국내에서 유통되도록 DR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DR의 유가증권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발행한 DR을 「증권거래법」 제2조 제①항 제7호에 의한 유가증권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외국기업의 국내주식 발행이라는 대외적 개방명분을 확보하고 국내투자자의 투자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외국 기업은 국내에서 DR발행시 公募발행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였다. 또한 외국기업이 私募로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의로 발행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외국기업이 발행한 DR의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며 국내투자자의 효율적인 권리 행사를 위하여 외국기업이 DR을 발행할 경우에는 증권예탁원을 통하여 등록발행(실물 불발행)을 하여야 한다.

발행절차는 원칙적으로 국내기업 경우를 준용

간사회사·인수단·지급대리인·법률고문 등 발행관련기관은 원칙적으로 DR발행 외국기업이 선정하고, 발행관계인에 대한 자격요건은 현행 증권거래법령의 관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간사회사(Manager)는 국제업무허가 및 간사회사 자격을 갖춘 증권회사 중 국제적 신인도가 높은 회사로 하고, 인수단(Underwriters)은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하여 자본금 등 요건을 갖춘 증권회사로 하였다. 또한 등록사무, 상장 및 공시대리업무는 원칙적으로 주간사증권회사가 담당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DR의 등록발행, 주주권의 대행 및 관리(배당금 수령, 신주인수권 행사, 의결권 행사)를 담당하는 DR 예탁기관은 증권예탁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원주보관기관은 DR 예탁기관의 현지대리인으로 하여금 원주의 보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외국기업의 국내주식 발행절차는 원칙적으로 국내기업의 공개 및 주식발행절차를 준용하되, 주간사증권회사는 발행규모·공모가격 등 주간사 인수계획서를 증권관리위원회에서 사전승인받도록 하였다.

증권관리위원회는 증권시장의 안정 및 투자자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간사증권회사의 인수계획서를 승인할 수 있다.

또한 유가증권을 모집·매출하고자 하는 외국기업은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기업등록 및 유가증권신고를 하여야 하며, 국내투자자 보호와 공시내용의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유가증권신고 효력발생기간을 내국기업과 동일하게 신고서 제출후 20일로 정하도록 하였다.

한편 국내외 발행제도 및 관습 등의 차이를 감안하여 외국기업의 유가증권신고서 기재 사항 및 첨부서류 양식 등은 외국기업의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외국기업의 국내 上場 요건을 별도로 마련

현재 국내 주식의 증권거래소 시장소속부는 상장주권의 시장성·수익성·안정성 등에 대하여 매 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심사한 후 시장 제1부와 시장 제2부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기업이 발행한 DR의 경우 내국주권과 동일기준에 의해 분류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별도로 외국부를 설치하여 외국기업의 국내 발행 DR을 상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외국기업의 평균 자기자본 수준을

국내기업보다 상향 조정

정부는 외국의 유수 우량기업이 국내 증권거래소에 상장될 수 있도록 외국기업의 특수성 및 국내기업의 상장요건을 감안하여 외국기업의 국내 상장요건을 별도로 마련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다.

외국기업의 경영조직 및 제도정비의 안정성을 판별하기 위하여 외국기업의 설립후 경과연수를 국내기업의 상장요건을 준용하여 상장신청일 현재 5년 이상으로 하였다.

또한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기업의 자기

자본 요건을 국내 상장기업의 평균 자기자본 수준(500억원 수준)을 감안하여 500억원 이상으로 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자기자본요건은 국내 기업의 상장요건(자기자본 50억원)보다 상향조정하여 외국의 유수 우량기업들이 국내 증권거래소 시장에 상장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외국기업의 상장주식수는 증권시장에서의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의 상장시 적용되는 분산요건(발행주식총수 30만주)을 준용하여 30만 DR 이상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야 한다.

또한 외국기업의 자기자본이익률을 국내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9%)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여 외국기업의 최근 3년간 각 사업연도 순이익이 5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외국기업의 재무공시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해 외국기업의 최근 3년간 각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어야 한다. 다만 외국기업에 대한 당해국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을 인정하되, 우리나라 회계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은 주식사항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측면에서 문제가 있거나 동시상장되어 있는 양 거래소간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증권거래소가 상장을 불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에서 上場代理人 선임제

외국기업의 DR 상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기업의 비거주성을 감안하여 국내에서 상장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였다. 또한 외국기업의 국내상장을 원활히

정부는 외국의 유수 우량기업이 국내 증권거래소에 상장될 수 있도록 외국기업의 특수성 및 국내기업의 상장요건을 감안하여 외국기업의 국내 상장요건을 별도로 마련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다.

하여 국내 투자자의 유동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국기업의 상장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상장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기타 외국기업의 상장유지 및 관리(상장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외국 증권거래소와의 경쟁력을 고려하여 증권거래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주식의 매매거래단위, 호가가격단위, 위탁증거금징수 등 매매방법은 국내주식과 동일하게 운영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국내기업의 현행 상장폐지절차를 준용하여 본국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될 경우 즉시 상장폐지되도록 하되, 우리나라의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나 본국거래소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경우 상장폐지 유예기간을 부여하도록 하겠다.

외국기업의 국내공시는 「증권거래법」상의 규정을 적용 외국기업의 국내공시는 증권시장의 투명성 확보 및 정보에 대한 균등한 접근을 통한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증권거래법」상 공시에 관한 규정(법 제92조, 제93조, 제186조)을 외국기업에게도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시제도의 선진화를 위하여 선진제국의 공시규정을 참고하여 외국기업에 적합하도록 공시내용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외국기업이 국내에 제출하는 재무서류의 작성기준은 본국의 회계처리기준을 인정하지만 우리나라 회계기준과 상이한 항목에 대해서는 주식사항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외국기업이 제출하는 재무서류의 종류는 원칙적으로 내국기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당해 외국기업의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는 증권거래소와 증권관리위원회에

〈표 2〉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상장요건 비교

	국내기업	외국기업
안정성 요건	• 설립후 5년 이상 경과, 자본금 30억원 이상, 자기자본 50억원 이상	• 설립후 5년 이상 경과,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
시장성 요건	• 30만주 이상 상장	• 30만 DR 이상 상장
수익성 요건	• 납입자본이익률: 1년 만기 정기예금 최저 이율 이상	• 최근 3년간 각 사업연도 순이익 50억원 이상
신뢰성 요건	• 한정 또는 적정의견	• 적정의견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증권거래법 제92조, 93조).

또한 종속회사가 있는 외국기업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제출을 의무화하되, 본국에서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을 면제하도록 하고, 분기보고서는 본국에서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서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제출시한은 국내기업의 재무서류 제출기한을 준용하여, 사업보고서는 90일 이내, 반기보고서는 45일 이내에 제출하되, 재무정보에 대한 내·외국인의 균등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국 증권거래소에 제출한 경우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외국기업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미국·영국·일본의 경우처럼 본국 법령에 의한 외국의 공인회계사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인정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외국기업의 재무상황에 대한 국가별 회계관습 및 제반여건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은 본국의 공인회계사에 의하여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작성언어는 국내 투자자가 재무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외국기업의 재무서류 작성 비용의 절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어 또는 한국어로 공시하되, 국내 투자자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증권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은 한국어로 공시하도록 하였다. 다만 재무서류를 영문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국문요약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외국기업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실이 발생하거나 국내 투자자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증권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은 「증권거래법」의 공시규정(제186조)을 적용하여 외국기업의 공시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수시공시의 공시의무주체는 당해 상장 외국기업으로 하되, 지리적 격리 등을 고려하여 외국법인의 공시행위에 대한 상임 대리인을 국내에 두도록 한다.

수시공시정보의 공시사항은 원칙적으로 내국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공시사유 발생시 지체없이 공시하도록 하되, 지리적 격리 및 매매시간 등을 감안하여 그 시한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외국기업의 불성실 공시에 대해서는 국내 상장법인과 동일하게 「증권거래법」 제193조를 적용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유가증권발행 제한, 매매거래 정지, 상장폐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외국법인의 본국법률 및 규정에 의하여 불가피하다고 증권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공시유예 등 예외

를 인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증권거래법」 개정을 추진

외국기업의 DR 발행자금은 원칙적으로 해외로 반출하여 사용하도록 하되, 유가증권투자 등 외국인의 국내운용이 허용된 범위내에서 국내사용을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외국기업이 해외로 반출하기 전에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예치하고 인출하기 위하여 외국환은행에 비거주자 원화계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외국기업의 DR발행 원화자금을 외화로 반출하기 위하여 외국기업과 국내 외국환은행 간의 원화 對 외화의 스왑(Swap)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현행 「증권거래법」 제2조에 의하면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의 양도에 대해서 증권거래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DR은 증권거래세 징수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 내·외국 주식의 매매거래상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국법인이 발행한 국내 DR에 대해서 증권거래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증권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외국기업이 발행한 DR에 대한 외국인의 국내투자는 국내 상장기업의 주식과 마찬가지로 당해 외국기업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후 증권회사를 통하여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외국기업 DR에 대한 외국인투자한도는 현행 외국인주식투자한도(1인당 3%, 전체 15%)를 동일하게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96년 5월 1일부터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주식을 발행하고 상장할 수 있도록 제반 제도적 장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외국기업이 발행하는 DR에 대하여 「증권거래법」 제2조 제⑦항에 의한 유가증권으로 지정하고, 외국환관리규정, 외국인의 유가증권발행 등에 관한 규정(증권관리위원회 규정) 및 유가증권 상장규정 및 공시규정(증권거래소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법률

지 난 95년은 정보통신산업사에 있어 가장 변화가 많았던 해이다.

WTO체제의 본격적인 출범과 함께 정보통신산업에서도 개방경쟁 체제로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시작했으며,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소프트웨어산업 분야를 비롯한 전반적인 정보통신 관련 업무가 새로이 신설된 정보통신부

리나라는 소프트웨어산업을 발달시킬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고부가가치의 무공해 산업이기 때문에 매력이 있는 미래의 유망산업 분야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96년도에는 다음과 같은 시각에서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정책을 펴나가고자 한다.

올해의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방향

로 일원화되었다.

그간 과학기술처에서 관장해 오던 소프트웨어 관련 업무는 과학기술처의 관련 조직과 인원 및 서류 등 모든 업무가 그대로 정보통신부에 인계됨에 따라 업무 이관에 따른 행정 공백 없이 곧바로 그 기능을 발휘하게 되었고, 95년 2월 16일에는 새로운 체제와 조직하에서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세부적인 실천에 들어갔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소프트웨어개발 촉진법」의 전면 개정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WTO체제에 맞게 개정한 것을 들 수 있다. 이 외에 정보통신진흥기금 등을 통하여 소프트웨어 분야에 1천억원 이상 지원하는 등 정보통신산업 육성의 전체적인 시각과 조화에 의해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정책이 펼쳐지기 시작하였다.

고부가가치의 무공해 산업인 소프트웨어산업을 육성

소프트웨어는 지적인 창조능력을 요구하는 분야로서 정보화 환경에 익숙하고 경험이 있는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한다. 교육 정도가 높은 우수한 인적 자원이 많은 우



이재훈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진흥과장

자유경쟁원리 존중되는 산업환경 조성

WTO체제에 맞게 자유경쟁원리가 최대한 존중될 수 있는 산업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그간 소프트웨어산업에 관한 정부의 지원은 규제적인 정책 대신에 기술개발 지원이라든가 인력양성 지원 등 실질적으로 업체를 도와 주는 방향으로 시행이 되어 많은 기업이 자유롭게 진입하고 퇴출하는 자유경쟁의 원리가 존중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기술개발 지원과 같은 직접 지원책은 WTO체제하에서 허용 여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더구나 수혜를 받는 기업이 한정될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96년부터는 이러한 기술개발 지원보다는 간접적이지만 보다 대중적이고 광범위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책을 크게 펴나감으로써 공평한 지원 환경하에서 기업 스스로가 창의력을 갖고 경쟁해 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소프트웨어와 시스템통합사업의 적정한 대가 기준 마련

소프트웨어와 시스템통합(SI)사업 수행에 있어 적정한 대가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대폭 확충할 것이다.

소프트웨어와 SI산업은 무형의 서비스 산업이기 때문에 적절한 대가 기준을 정하기도 어려워 일방적인 계약관계에 의존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폐단으로 적정가격 이하로 수주하여 개발함으로써 개발업체는 채산성이 떨어지고 공급되는 제품의 품질도 기대 이하가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96년부터는 새롭게 개정된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에 따라 기존의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기준을 확대하여 멀티미디어형 소프트웨어의 화상 데이터와 지리정보시스템(GIS)용 데이터의 구축 산정비용과 같은 다양한 경우에 있어서도 적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대가기준을 만들어 고시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할 것이다.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산업이 서비스 산업이긴 하되 소비적 서비스 산업과는 차원이 다른 생산적 서비스 산업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각종 정부의 지원정책에 있어 제조업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젊고 창의적인 신세대들을 소프트웨어 부문 산업인력화

젊고 창조적인 신세대들의 소프트웨어 산업 인력화 추진과 함께 산업 각 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소프트웨어 형태로 창출되도록 할 것이다.

소프트웨어의 개발은 젊고 창의적인 머리를 요구한다. 따라서 많은 신세대들이 소프트웨어 산업인력으로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들을 신세대 소프트웨어 기업군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소프트웨어종합육성센터의 설치, 창업보육센터 기능의 확충과 아이디어 개발 공모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에는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후속조치로 관련 시행령을 금년 6월말까지 개정하고 다양한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며, 소프트웨어기술성 평가기준도 새롭게 정비할 것이다. 또한 소프트웨어산업의 획기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종합육성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이제는 어느 정도 사회의 정보화와 산업 정보화가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각 산업 분야에서 축적되어 온 경험과 지식이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소프트웨어 형태로 만들어져 산출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다시 산업 정보화의 촉진 및 고가의 소프트웨어 수출 상품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96년에는 소프트웨어 개발 자원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

이러한 시책 방향 아래 올해에는 소프트웨어 관련 법규의 정비, 소프트웨어종합육성센터의 설치와 정보화촉진기금 등을 통한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소프트웨어종합육성센터 설치 95년도에 개정된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후속조치로 관련 시행령을 금년 6월 말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특히,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은 법자체를 전면 개정할 만큼 시행령도 비현실적인 조문을 과감히 삭제하고 신설된 조항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소프트웨어사업 대가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며, 소프트웨어기술성 평가기준도 새롭게 정비할 계획이다.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소규모기업이 많이 생겨서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킬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개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개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산업의 획기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프트

웨어종합육성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러한 소프트웨어종합육성센터가 설치되면,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고가장비나 개발툴을 비치하여 동 장비의 활용을 필요로 하는 개발자가 사용케 함으로써 개발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고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터넷 등에 공개된 소프트웨어 모듈을 사용하기 용이하게 재정리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멀티미디어 관련 모듈을 구입하여 개발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내외 기술자료 및 해외유명 패키지의 분석자료, 국내외 시장정보 등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각종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함으로써 동 자료의 구입 및 분석 등에 소요되는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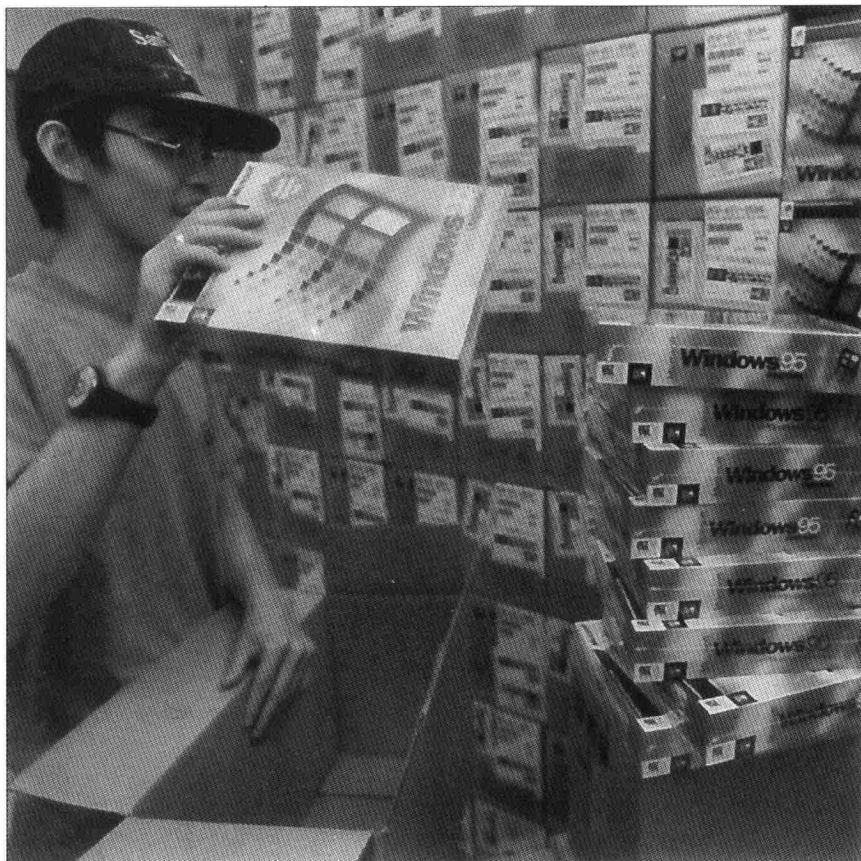
간을 절약하고 개발비용을 절감도록 하여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동센터는 기술력 있는 창업예비자를 육성하는 창업보육기능과 중소기업체들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기술교육장 및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홍보할 수 있는 전시관의 역할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소프트웨어종합육성센터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이 편리하고 개발자가 밀집해 있는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올해 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차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기술개발투자의 효율성을 제고

소프트웨어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은 올해 1천억원 이상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정보화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정보화촉진기금이 설치되었으며, 기술개발자금의 지원방법도 종래에는 정책지정방식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공모방식으로 전



환하여 경쟁체제를 확충함으로써 기술개발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분야 병역지정업체 추천권이 96년부터는 정보통신부로 이관될 예정이므로 그동안 제조업의 일부분으로 추천되어 온 정보처리산업에 대하여 별도의 추천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정보처리산업의 특성에 맞는 추천기준을 제정·시행함과 동시에 정보처리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추천배정인원의 확대를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94년말 정부조직 개편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업무가 일원화되고, 95년도에 발전기반을 마련한 소프트웨어산업은 96년도부터 육성시책이 하나씩 가시화되어 나감으로써 2000년대의 소프트웨어 선진대열로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원**

우

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성공적인 경제개발에 힘입어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었고 국제 사회에서는 경제성장의 모범국가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의욕적인 개발에 가려져 아름답고 건강한 우리의 삶의 터전이 점차 훼손되어 왔으며, 국민의 삶의 질은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다.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밝은 희망을 주기 위하여 미래 환경의 청사진을 담은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비전 21'이라 이름하였다.

정부는 이 계획이 사회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汎國家的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절차와 과정을 거쳤다.

환경부는 이 계획의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한 '21세기

미래 환경의 청사진 — '환경비전 21'

한편 눈을 밖으로 돌리면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산성비 등 지구환경에의 위협요소에 대처하고자 선진국을 중심으로 환경과 무역을 연계하려는 이른바 그린라운드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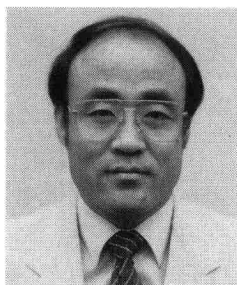
우리는 이제 곧 21세기를 맞이하게 된다. 우리가 21세기에 추구하는 '통일된 세계중심국가'는 소득수준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도 세계화되고 일류화되는 나라를 뜻한다.

환경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삶의 질을 세계화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국토환경을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쾌적한 삶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미래 환경의 청사진 담은 '환경비전 21' 수립

이와 같은 국내외 움직임에 대처하고자 정부내의 부처는 물론 환경운동단체·기업·소비자 등은 환경보전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환경정책이 제시되지 않아 방향설정에서 어려움을 겪어 온 것도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추구할 환경



정도영
환경부 정책총괄과장

환경비전'을 작성하여 세계화추진위원회와 대통령께 보고하였으며, 대통령은 이를 구체화시킨 세부추진계획의 수립을 지시하였다.

이에 95년 10월 시안을 작성하여 부산·대구·광주 등 전국 7개 도시에서의 공청회와 환경보전위원회를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세계화추진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된 것이다.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의 목표는 하나
뿐만 지구를 영원히 보전하고 우리의 국

토환경을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는 데 있다.

'환경비전 21'은 오염과 훼손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고,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추구하며, 환경을 훼손하는 자와 환경자원을 사용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키고, 국민의 자발적인 환경개선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경제적 유인책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정보의 공개와 국민의 참여로 환경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다섯 가지 원칙 아래 작성되었다.

이와 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깨끗하고 넉넉한 물과 쾌적한 하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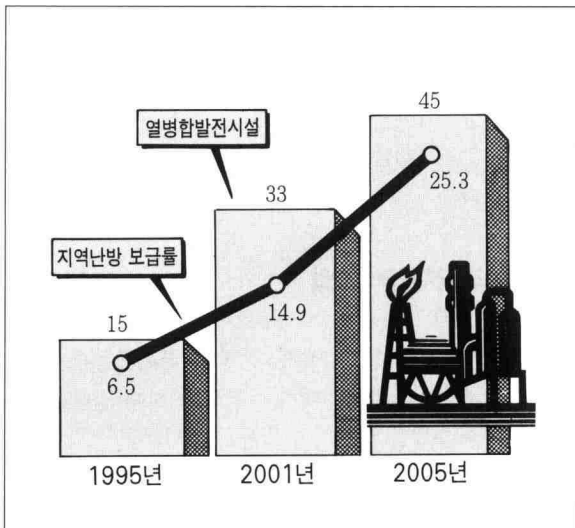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수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비하여 인구와 산업활동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물의 수요와 공급에 불균형이 발생될 전망이다. 따라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깨끗한 물을 풍부하게 공급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물 관리의 목표로 삼았다.

먼저 먹는 물을 깨끗하고 넉넉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다목적댐 8개를 2001년까지 개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식수전용댐 건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81%에 불과한 상수도 보급률을 95%로 높이고, 남은 수도관은 지속적으로 개량하여漏水率을 18%에서 10% 이하로 낮춰나갈 것이다. 또한 취수원의 개발을 地表水 위주에서 하천 伏流水 또는 강변 濾過水 등으로 다변화하고, 상습 급수제한지역인 해안·도서지역에는 빗물을 활용하거나 바닷물을 淡水化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둘째, 먹는 물의 수질기준을 현재의 43개 항목에서 2005년까지 120개 항목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고도 정수처리시설을 28개로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물 절약을 생활화하기 위하여 원가의 40%에 불과한 수도요금을 99년까지 원가수준으로 조정하고, 中水道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그림>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 계획

(단위: 개소, %)



정부는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추구할 환경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밝은 희망을 주기 위하여 미래 환경의 청사진을 담은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비전 21'이라 이름하였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05년까지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에 77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셋째, 물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친수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장·폐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2005년까지 하수처리율과 管渠 보급률을 각각 80%로 높이고, 오염이 심한 지역은 사업장별로 배출총량을 할당하여 관리하며, 富營養化 등의 원인이 되는 비료·농약 등 非点汚染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푸른 하늘과 상쾌한 공기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와 저급연료의 사용이 대기오염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자동차 공해를 저감하고 청정연료를 공급하여 도시의 공기를 상쾌하게 하고 스모그 발생을 억제하는 데 정책의 목표를 두고자 한다.

먼저 경유차의 저공해화를 위하여 화물트럭 등 중량차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소형차량은 LPG차량 등으로 전환하며, 기존 운행차량은 매연후처리장치나 CNG 혼소장치를 2000년까지 120만대에 부착토록 할 방침이다.

청정연료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2005년까지 청정연료사용 의무화지역을 수도권 등에서 중·소도시로 확대하고, 열병합발전시설과 연계한 지역난방을 이용하여 집단에너지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기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기환경기준을 2005년까지 WHO 권고수준으로 강화하고, 울산 등 오염우심지역은 아황산가스·먼지에 대하여 배출되는 양을 제한하는 總量規制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에서 실시중인 오존경보제를 97년까지 6대 도시로 확대하고 점차 일기예보제와 같이 미리 알려주는 예보제로 전환하며, 지하와 실내 생활공간의 환경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실내 공기의 관리기준, 오염물질의 유해성 평가 등을 규정한 「실내공기질관리

법」을 97년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쓰레기를 자원으로 되살리는 사회

생활수준의 향상과 산업생산의 증가로 폐기물의 발생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폐기물의 감량·재활용·열병합 소각 등을 통하여 자원의 순환구조를 이루고 최종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을 정책의 목표로 삼고자 한다.

먼저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처리비용의 40% 수준인 쓰레기 수수료를 2001년까지 실비수준으로 조정하고,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설계시 재활용성을 평가하는 제도를 자동차·가전제품에서 전기·전자제품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또한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재활용 종합단지를 조성하고, 폐자원 비축기지를 2001년까지 6개 권역에 설치할 방침이다.

한편 님비(NIMBY)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쓰레기가 발생하는 지역에서 처리하는 지역별 처리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입지선정 단계부터 주민 대표를 참여시키며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복리증진 등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한다.

또한 폐기물을 안정적이고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대형시설 187개 등 소각시설 2,577개를 설치하여 생활쓰레기 소각률을 50%로 높이고, 위생매립률을 100%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양해지는 화학물질로 인한 인체와 환경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생산·유통·폐기 등 단계별로 추적하여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유해성 평가를 위한 우수시험기관을 육성하고, 환경 중 유해화학물질 농도를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자연환경의 보전과 복원

급속한 산업화 및 도시개발로 녹지면적은 줄어들고 야생동식물은 감소되어 생태계 파괴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훼손된 생태계를 치유·복원하여 인간이 자연생태계의 한 부분으로 공생하는 삶을 조성하는 데 정책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먼저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고 복원하기 위하여 보존가치가 큰 지역에 대하여 지정하는 자연생태계보전지역을 현재의 7개소에서 50개소로 확대하고, 도로 등을 건설할 경우에는 생태계의 단절을 예방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단절된 생태계에 대하여는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생태연결통로를 100개 지역에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립공원은 개발과 이용보다는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체계로 개편하고자 한다.

둘째, 미생물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미생물자원에 대한 조사와 이용기술 등에 관한 국가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미생물에 대한 안전성을 심사하고 감시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셋째, 토양과 지하수를 보전하기 위하여 휴·폐광지역의 토양에 대한 오염실태를 조사하여 오염이 심한 지역부터 객토 등 복원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지하수 부존량의 기초조사를 하여 水文地質圖를 작성하고 수질조사를 위하여 수질측정망 5천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넷째, 沿岸域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연안개발 및 육상의 오염물질 유입에 따른 연안역의 오염을 방지하고, 갯벌 등의 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연안역관리법」을 제정하며, 적조·녹조 등 연안오염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여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오염이 심한 연안역에 대하여는 堆積汚泥를 준설하고 광양만 등에 추가하여 적조발생이 우려되는 해역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하고자 한다. 한편 해양환경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민간주도의 해양오염 방제회사를 설립하고, 유조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유조선 전용항로를 설정·운영할 계획이다.

끝으로 도시의 녹지공간을 확대하기 위하여 신도시·공단 등 대규모 개발시 일정한 비율의 녹지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자연생태계 본래의 모습에 가까운 생태도시(Ecopolis)를 2005년까지 10개 지역에 시범조성할 계획이다.

환경분야의 국제협력 강화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한반도 주변의 환경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국력에 걸맞는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먼저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후변화협약 등 주요 국제환경협약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의 경험과 기술

을 개발도상국에 확산시키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하여 환경기술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산성비·황해오염 등 지역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감시망을 확충하고, 미·중·일·러 등 한반도 주변국가와의 환경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기술·정보교류기구의 설치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한편 한반도 환경비전의 공동수립 등 남북한 환경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구체화하고, 북한의 환경보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對北 진출기업의 환경관리를 추진하며, 비무장지대의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하여 생태계 공동조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2005년까지 77조원을 투자

지금까지 설명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선진국 수준의 환경질을 달성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투자되어야 하는바, 정부는 2005년까지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등에 약 77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환경행정 및 정책결정체계가 개선되어야 하고 기업·소비자의 생산 및 소비 방식이 환경친화적으로 전환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환경친화적인 정책결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의 가치변화를 반영하는 녹색국민총생산(Green GNP)과 지속가능성지표를 개발하여 정책결정의 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며, 물·공기·쓰레기 등 매체별로 관리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통합적 환경관리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표〉 분야별 환경투자계획

(단위: 10억원)

	1996년	1997~2001년	2002~2005년	계
자연생태계 등	7	684	784	1,475
대기보전	2,709	11,818	9,643	24,170
수질개선	4,101	21,097	16,405	41,603
폐기물관리	470	4,806	3,560	8,836
연구·기술개발 등	81	689	548	1,318
총 계	7,368	39,094	30,940	77,402

‘환경비전 21’은 오염과 훼손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고,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추구하며, 환경을 훼손하는 자와 환경자원을 사용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키고, 국민의 자발적인 환경개선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경제적 유인책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정보의 공개와 국민의 참여로 환경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다섯 가지 원칙 아래 작성되었다.

둘째, 환경친화적인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현재 실시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체계를 정착시키고, 환경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과학기술연구개발비의 5%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산업체의 기술축적도 등을 평가하여 우수환경산업체를 지정하고,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민간의 자본과 기술이 참여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다.

셋째, 환경친화적인 소비행태를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마크제도, 경제적 유인제도 등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을 강화하며 민간환경단체 중심의 녹색운동을 지원하고자 한다.

이 계획이 끝나는 2005년에는 서울의 경우 스모그가 발생하는 날씨가 현재의 49일에서 30일로 줄어들고, 전국 하천의 수질기준 달성률은 30%에서 95%로 높아지게 되며, 쓰레기 발생량(1인당)은 1.5kg/日에서 1.0kg/日로 대폭 감축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푸른 하늘 아래 상쾌한 공기를 마시게 되고, 맑아진 하천에서 수영과 낚시를 즐기게 되며,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하는 생활이 정착되어 쾌적한 국토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아울러 국제사회에서도 지구환경보전과 지역환경보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환경모범국가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청사진의 실현은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며 국민 모두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기대한다. 

90년 이후 정부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고용취약 계층인 장애인을 위한 정책의 중요성을 재평가 하고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해 오고 있다.

「장애인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따라서 정부는 실질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유인책을 강화하는 데 보다 중점을 둔 장애인고용정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금번에 정부가 수립한 장애인고용정책은 작년 9월에 발표된 '장애인고용촉진대책'과 「장애인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95년 8~11월)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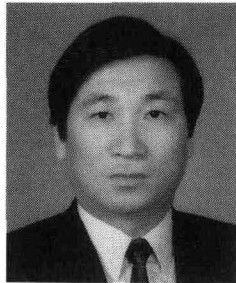
선진 복지사회를 향한 장애인고용 촉진

록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및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서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직업훈련·직업지도 등을 수행해야 할 정부의 역할, 사업주의 책임, 장애인의 자립노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인고용 활성화 위해
사업주에 대한 유인책 강화

동법에서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전체근로자의 2% 이상을 장애인근로자로 고용할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여하고, 의무고용률을 이행하지 못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에 관한 사회연대책임의 이행수단으로 일정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고용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에 대한 우려와 노무관리의 어려움, 우리 사회에 깊이 만연된 장애인에 대한 편견 등으로 인한 사업주의 장애인고용 기피로 장애인고용률은 법이 정한 기준고용률(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95년 6월 30일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의 장애인근로자수는 9,331명으로 장애인고용률은 0.44%에 불과한 실정이다.



송길홍
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

다른 하위법규를 정비하고, 장애인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장애인고용촉진방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애인 실태파악체계를 개선하고
장애인복지공장을 지원

먼저, 장애인등록 등 실태파악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95년 6월 현재 등록된 장애인은 30만 9천명으로 전체 추정 장애인 95만 6천명의 32.3%에 불과한 실정이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인실태조사의 경우 유형별·정도별·원인별·연령별 고용실태 및 장애인 서비스욕구 등이 구체적으로 조사되어 있지 않아 행정대상인 장애인에 관한 자료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올해부터 등록장애인이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게 구직등록을 하는 경우 취업등록카드제를 실시하여 취업알선 및 취업후 사후관리 등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매 3년마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주관으로 '장애인센서스'를 실시하여 장애인고용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공장을 지원해 나갈 것이다.

복지공장이란 작업구조·교통사정 등으로 생산현장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비교적 장애인이 근로하기에 적합한 생산품목을 중심으로 중·소사업장 형태의 생산공장을 설치하여 장애인을 고용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후생·노무관리로 장애인의 사회적응을 용이하게 하는 복지형 생산공장이다.

이러한 복지공장은 근로자 중 장애인근로자가 상시 10인 이상, 전체근로자의 70% 이상되어야 하며 장애인근로자 중 30% 이상이 중증장애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96년부터 사업주나 법인이 이러한 장애인복지공장을 설립할 경우, 공장설립 투자비용의 50%(최고 50억원 한도)까지 연리 3%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하는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하고, 복지공장의 장애인 작업장비, 편의시설 등에 대해서는 최고 2억원까지 무상지원하게 된다.

또한 장애인복지공장을 '직업재활시설' 형태로 운영할 경우 복지공장에 하청을 주는 원청기업에 대해서 일정액의 부담금을 감면해 줄 계획이다.

직업재활시설 연계고용제 도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연계고용제를 도입할 것이다.

장애인직업시설 연계고용제란 장애인보호작업장 및 근로시설 등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하청을 주거나, 생산시설을 투자하는 장애인의무고용 대상사업주에 대해 부담금을 감면(직업재활시설 연간 생산매출액의 30% 범위 내)하여 작업량을 확보토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장애인근로시설의 두 가지로 나뉘는데,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취업이 곤

정부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고용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법을 제정·시행해 오고 있으나 장애인고용률은 사업주의 기피로 法이 정한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유인책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장애인고용촉진정책을 수립하였다.

란한 장애인을 입소시켜 훈련을 행하여 직업을 주는 장애인 복지시설을 말하고, 장애인근로시설은 장애인을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직업을 주어 자활시키는 장애인 복지시설을 말한다.

연계고용제는 장애인이 근무하고 있는 직업재활시설의 판로를 보장하여 장애인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이며, 연계고용대상 직업재활시설의 요건은 계약기간내 생산종사 근로자 중 장애인 근로자수가 70% 이상이고, 그 중 중증장애인 근로자수가 30%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사업주가 연계고용부담금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연계고용대상 직업재활시설운영법인과 반드시 연계고용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고용계약기간은 1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부담금감면기준은 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장애인근로자의 월평균임금액이 최저임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부담기초액(96년 : 17만3천원)을 장애인수로 곱한 금액으로 하고, 월평균임금액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근로자의 월평균임금액에 0.6을 곱한 금액을 감면하게 된다.

고용지원금 및 장려금을 상향 조정하고 장애인고용보조금을 지급

장애인 고용지원금 및 장려금을 상향 지원해 나갈 것이다.

「장애인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서는 장애인을 다수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기

〈표〉 장애인고용지원금 및 장려금의 지급단가 조정

	95년	96년	비 고
지 원 금 (300인 이상 의무고용업체)	119,000원 (부담기초액의 80%)	159,000원 (부담기초액의 100%)	33.6%
장 려 금 (300인 미만 업체)	119,000원	159,000원	33.6%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률 2%를 초과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장애인고용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장애인고용지원금이란 장애인고용의무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업주가 기준고용률 2%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였을 경우 초과 장애인 1인당 일정액을 장애인고용촉진기금에서 지급하는 것이며, 장애인고용장려금은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 장애인을 2% 이상 고용하였을 경우 지급되는 것이다.

96년부터는 장애인고용지원금 및 장려금의 지급단가를 현행 부담기초액의 80%(95년: 11만9천원)에서 100%(96년: 15만9천원)로 인상 조정하여 지급기로 함으로써 장애인고용 촉진을 위한 유인책을 강화하였다.

또한, 장애인고용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장애인고용보조금이란 일반기업의 장애인 직접고용을 촉진하고 신규 장애인고용에 따른 생산성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96년부터 장애인을 신규로 고용하는 사업주는 고용후 2년간 장애인고용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중증장애인을 신규로 고용한 경우, 1년차는 당해연도 최저임금액의 80%(96년 월211,000원×12월=253만원), 2년차는 당해연도 최저임금액의 50%를 1인당 연누계액으로 지급하고, 중증장애인 이외의 장애인을 신규로 고용할 경우, 1년차는 당해연도 최저임금액의 60%(96년 월158,000원×12월=189만6천원), 2년차는 최저임금액의 40%를 1인당 연 누계액으로 지급하게 된다.

직업능력개발을 활성화하고

장애인고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을 활성화해 나갈 것이다.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인정·사업내 직업훈련원 및 특수학교에 대해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또는 개·보수비로 1억원 이내에서 무상지원하고,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훈련장비·공구·작업대의 개조·설치·구입비로 5천만원 이내에서 무상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인정·사업내 직업훈련원 및 직업재활시설 등의 훈련기관에서 훈련기숙사, 휴게실 등 부대시설이나 훈련시설을 설치 또는 확충·개선하는 경우 3억원 범위내에서 장기저리(연리 3%, 5년거치 5년상환)로 융자해 주

고, 훈련생에게는 입소자 1인당 3만원의 훈련준비금을 포함하여 가계보조수당·가족수당·교통비·식비 등으로 월 최저 17만원에서 25만원까지 지급함으로써 장애인 직업훈련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평가·훈련·취업 및 사후지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직업재활센터를 98년까지 수도권과 부산에 각 1개소씩 건립하여 장애인 직업훈련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고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우리 사회에 깊이 만연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매년 9월을 '장애인고용 촉진의 달'로 정하여 장애인을 위한 계몽·홍보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올해부터는 이러한 사회적 계몽·홍보운동 이외에 정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중심으로 펴오던 장애인고용촉진사업을 사회단체·기업·일반시민 등과 연계하여 사회운동 차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각계각층의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95년 7월 1일 고용보험제 시행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진정한 복지사회로의 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으나 우리 사회의 대표적 소외계층인 장애인은 그동안 경제·사회활동에 대한 참가기회의 부족으로 '소비와 면제자'의 입장에 머물러 오고 있어 이들에게 직업생활 참여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여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것이 주요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위에서 간략히 살펴본 '장애인고용촉진방안'은 이러한 현실을 수렴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이 방안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업, 장애인 등 사회구성원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필요하며 이러한 관심과 노력이 있을 때만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주체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복지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남원**

서 기 2000년이 불과 4년밖에 남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회 각 분야별로 21세기를 대비한 비전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이 한창이다.

건설산업도 향후 환경·노동 등 뉴라운드가 태동되고 WTO 및 정부 조달협정이 본격적으로 발효되어 국제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경쟁 및

기능에 치중하여 보증·보험 등 발주자·소비자를 위한 사후적 안전장치도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올해부터의 본격적인 민간건설시장 개방과 97년 공공건설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부실공사 방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삼풍사고를 계기로 작년 7월 이후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부실방지대책

시장기능을 강화하고 시설물의 품질 및 안전 등 사회적 규제를 중시하는 등 전반적인 산업정책방향을 재정립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미국은 'Construction 2000 Task Force'가 활동하고 있고 일본도 '건설산업비전연구회'가 조직되어 21세기 건설산업비전, 건설산업정책대강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건설제도개혁기획단을 설치하여 경쟁력 강화와 부실방지대책을 추진

반면 우리의 건설산업은 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도시화와 80년대 이후 주택건설 및 사회간접자본투자 확대에 따라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하여 왔다. 그러나 산업의 경쟁력은 품질 및 기술적인 측면에서 선진국에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특히 기획·설계·감리·엔지니어링 등 고부가가치 분야의 경쟁력은 매우 낮은 실정에 있다.

또한 담합·불공정 하도급거래·재해다발 등 전근대적인 영업관행과 각종 규제의 상존은 경쟁력 저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면허제·도급한도제 등 정부주도의 점검



정락형
건설교통부 건설경제과장

'건설제도개혁기획단'을 설치하여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부실방지대책을 마련·추진중에 있다.

아래에서는 향후 건설제도 개선의 방향과 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건설제도의 국제화와 경쟁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를 새로이 도입

건설제도의 국제화와 경쟁기반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의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건설공사의 설계·시공·감리 등에 관한 제도가 工種에 따라 여러 개의 법령에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어 공정 관리의 곤란, 하자책임의 불분명, 예산의 낭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건설관련 법령의 체계화를 위하여 「건설업법」을 기획·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등 건설산업 전반에 관한 기본법으로 전환하여 개별 법률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기본법이 적용되도록 하고, 대규모 공사의 경우 발주자를 대신하여 건설공사의 기획·설계·발주·감리·시공관리 등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관리하는 '건설사업관리제도'를 도입함으

로써 건설산업의 선진화와 품질향상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의 개념을 「건설업법」 등 건설관련 법령에 정의하고 공공 부문에도 '건설사업관리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하도급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실제 공사를 수행하는 십장 등 현장근로자의 명단을 신고받아 「근로기준법」·「건설업법」·「하도급법」에 의한 대금의 수령 등 권익을 보호하고 부실시공을 초래한 때에는 자격정지 등 시공책임도 부과하는 '건설공사 현장실명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업체의 신용상태·시공능력에 따라 보증 및 용자 등을 차등화하는 '신용평가제'를 조속히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공사 전체의 이행을 담보하는 '공사완성보증제(Surety Bond)' 및 부실설계·감리에 대한 '손해배상보증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등 경제적 유인에 의하여 부실업체가 배제되도록 시장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건설공사의 전문화·복합화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설분쟁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조정·중재하기 위하여 현행 「건설업법」상의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건설분쟁중재원'으로 확대개편하고, 발주자와 설

정부는 올해부터의 본격적인 민간건설시장 개방과 97년 공공건설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부실공사 방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삼풍사고를 계기로 작년 7월 이후 '건설제도개혁기획단'을 설치하여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부실방지대책을 마련·추진중에 있다.

계자·감리자·시공자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하기 위한 각종 법령 및 계약서의 불평등 조항들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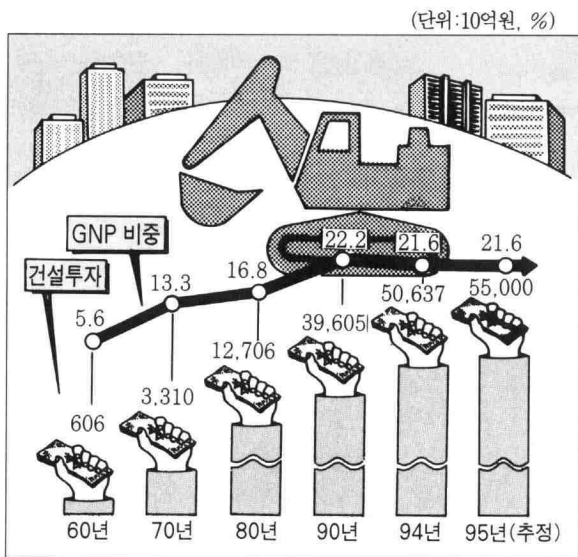
건설인력의 육성과 고용안정을 위한 시책을 시행

경쟁력 제고의 관건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대학교육제도의 개선을 포함한 건설인력 수급대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대규모 건설공사의 증가와 건설생산물의 품질우선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건설기술인력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학의 건설관련학과 정원을 2000년까지 매년 일정 규모로 증원하여 고급기술인력을 배출하고, 건설기술자 중 50%에 불과한 국가기술자격자를 2000년에 70%까지 제고한다는 목표로 시험횟수를 늘려 배출 인원을 대폭 증원하며, 고급 감리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선진외국 감리회사를 활용하여 국내 업계와의 경쟁을 유도해 나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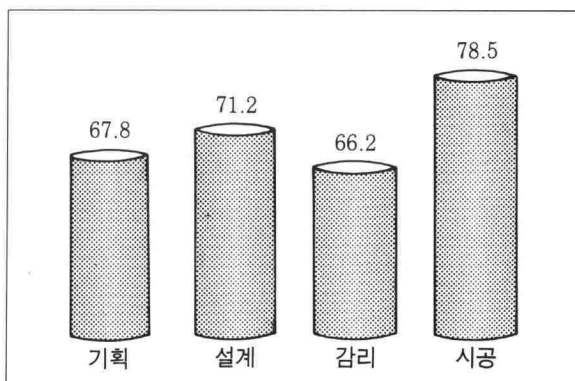
이와 함께 건설기능공의 자긍심과 사회적 책임의식을

〈그림 1〉 건설투자 증가추이



註: 90년 불변가격 기준임.

〈그림 2〉 분야별 기술수준 비교



註: 선진국을 100으로 보았을 때의 수치임.

고취하기 위해 건설기능공이 여러 현장을 전진하여 근무하더라도 경력 관리·공제금 등의 합산관리가 가능하도록 가칭 '건설근로자 복지카드 제도'를 도입하고, 건설업체 실정에 맞는 현장 위주의 기능검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건설현장의 최일선에서 품질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기능공의 고용안정과 양성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공사 시행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

시장이 개방되어 건설공사가 국제적인 관행에 따라 이루어질 것에 대비하여 공사시행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계약·공사관리 등 전문직 공무원을 집중 교육하여 양성하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등 공사발주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감리·건자재를 포함한 건설관련 업체에 관한 정보를 종합관리하는 한편, 규제 위주의 도급한도액 제도를 시공능력 공시제도로 전환토록 하는 등 발주기관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충분한 사전조사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건설공사 시행절차를 제정하고 공사기간이 3년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는 최대한 계속비사업으로 편성되도록 계속비제도의 운영을 활성화하며, 동일사업내에서의 예산 전용권을 단계적으로 각 중앙관서장에게 위임하는 등 충실한 설계와 탄력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제도개선도 아울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체계적인 제도 개선으로

건설현장의 품질관리체제를 구축

건설현장의 품질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건자재에 대한 품질관리 및 구조물의 안전과 직결되는 철근콘크리트와 철강재에 대한 품질관리체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現場배치플랜트(batch plant) 설치를 확대하여 레미콘의 품질관리를 일원화하고, 레미콘 재료인 골재·시멘트·물을 공장에서 혼합하여 공급하는 현

정부는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부실 방지를 위해 '건설사업관리제도' 도입 등 각종 제도의 도입·개선을 추진하고, 건설인력의 육성과 고용안정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며, 공사시행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시키는 한편, 체계적인 제도 개선으로 건설현장의 품질관리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행 습식배합 대신에 물만을 현장에서 혼합하는 건식배합 방식을 검토·도입하며, 철강재·철구조물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일정기술을 갖춘 공장에서만 제작토록 하는 '공장인증제'의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립건설시험소가 중심이 되어 건설업에 대한 국제표준기구(ISO)인증기능을 확충하고 인증업체에 대한 인센티브시스템을 확대하는 한편 대형교량·소각로·하수처리장 등 유지관리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하여는 시공업체가 사후관리를 일괄 책임지는 '시공 및 유지관리 일괄 계약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등 건설공사 품질보증 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사용비중이 높고 파급효과가 큰 자재를 표준화 우선대상으로 정하여 95년부터 단계별로 추진(2000년까지 106개 품목)하고 표준규격자재 생산 및 사용업체에 대하여는 국민주택기금·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 등을 집중지원하는 한편 발주기관·건자재생산업체·건설업체를 연결하는 '건설자재 종합정보화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건설자재산업을 육성하여 표준화·정보화를 앞당길 계획이다.

이와 아울러 민간건축물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하여 연면적 5천㎡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을 안전관리대상에 추가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건축심의단계에서 구조검토 등 설계심의를 의무화하고 설계자의 책임감 고취를 위하여 설계도서에 대한 실명제를 추진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중에 있다.

이와 같은 대책이 마련, 시행될 경우 우리의 건설산업이 경쟁적 시장구조로 전환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어 건설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

제

2차 아·태경제협력체(APEC) 과학기술각료회의가 96년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다.

95년 10월 5일, 6일 양일간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제1차 APEC 과학기술각료회의에서 17개 회원국(파푸아뉴기니 불참) 과학기술각료들은 제2차 회의의 서울 개최를

sterial Meeting), 고위실무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 인적자원개발·전기통신 등 10개의 실무그룹 회의(Working Group Meeting)와 3개의 공식위원회(예산행정위원회, 무역투자위원회, 경제위원회) 및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의 APEC 과학기술협력사업은 10개의 APEC

아·태지역 과학기술협력으로 과학기술 세계화의 토대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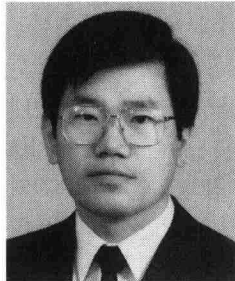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당초 미국·캐나다·일본 등 선진국들은 APEC 과학기술각료회의의 정례적인 개최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와의 개별 장관회담을 통해 합의를 유도해 낼 수 있었다.

제2차 APEC 과학기술각료회의의 서울 유치를 계기로 향후 1년간 APEC 과학기술협력 활동의 중심이 서울로 옮겨짐으로써 지역내 과학기술협력 증진을 우리 주도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과학기술 세계화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협력과제 등 域內國간 과학기술협력사업 추진

APEC은 89년 아·태지역의 경제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역내 주요 국가간의 경제협력과 무역증진을 목표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18개 회원국과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 아세안 사무국과 남태평양도서국 협의체 등 3개의 업저버가 참여하는 역내 최초의 범지역적 정부간 공식협력체이다.

APEC의 조직은 3개의 공식회의인 각료회의(Mini-



구본제
과학기술처 기술협력2과장

실무그룹 중 산업과학기술 실무그룹(Industrial Science & Technology Working Group)을 중심으로 회원국간의 분야별 과학기술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전문각료회의인 과학기술각료회의에서 심의·채택하는 형태로 발전·운영되어 왔다.

주요한 역내 과학기술협력활동을 살펴보면, 95년 9월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된 제9차 과학기술 분야 실무그룹회의에서는 기술 및 정보의 교환, 과학기술 분야와 관련된 인적자원 개발, 과학기술

분야 규제조치의 투명성 제고, 역내 공동연구사업의 촉진, 지속적인 연구개발, 정책대화에 관한 정책이슈들이 다루어졌다. 아울러 자유로운 기술의 이동을 가로막는 각 회원국들의 관련법규 및 규제조치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바 있다.

95년 10월 북경에서 개최된 제1차 과학기술각료회의에서는 21세기에 아·태지역이 세계의 중심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원동력은 과학기술의 혁신과 발전에서 나온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95년 11월 오사카 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산업과학기술협력 실천강령(Action Program)을 검토·승인했다.

이 회의에서 APEC 역내 과학기술 정보유통 구축, 해양환경기술 개발, 생물자원탐색·활용기술 개발, 고급연구인력 훈련(Post-DOC.) 등 우리나라가 제안한 4개 과제를 포함한 29개의 공동협력과제가 채택되었다. 그리고 사업의 우선순위와 과제별 주관국가를 지정하고 회원국간 상호협약하에 조속한 시일내에 관련 협력사업을 협의·추진키로 합의하였다.

95년 11월 오사카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서는 산업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 효율적인 과학기술협력을 위한 원칙을 승인했다.

또한 우선협력대상 분야로서 ①기술정보 및 기술교류의 증진 ②산업과학기술 분야 연구인력 교류 및 인적자원개발 증대 ③공동연구사업의 진흥 ④규제제도의 투명성 증대 ⑤지속가능한 개발에의 기여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과학기술 관련지표에 관한 연구, 산업기술지원 증진방안 및 공동연구, 기술교환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센터 설치, 환경보호와 지속적 개발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95년 10월, 일본), APEC 기술이전 워크숍 개최(95년 12월, 대만), 연구정보망(Research Information Network) 설치를 위한 심포지엄 개최(96년 3월, 일본) 등의 협력사업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회원국이 처한 입장에 따라 과학기술협력의 관심분야 상이

아·태지역 각국은 경제발전 수준과 경제상황의 다양성,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을 위한 채널의 부족 등의 이유로 인해 과학기술 수준이 매우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선진국인 미국·일본·호주·캐나다와 신흥공업국인 우리나라·대만·싱가포르·홍콩·멕시코 그리고 후발공업국인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태국·필리핀·중국 등으로 크게 범주화할 수 있는데, 과학기술협력에 대해서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선진국들은 환경문제와 같은 세계적인 차원의 과학기술협력과 무역자유화에 직접 관련된 과학기술협력에 치중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개별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의 입장은 한마디로 과학

우리나라는 우리의 강점을 살려 선진국과 후발공업국간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을 촉진하는 架橋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아·태지역의 경제성장과 역내기술협력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00년대를 향한 아·태지역 과학기술협력의 비전과 목표를 선도적으로 제시하여 APEC 회원국간 원만한 합의를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기술의 우위를 유지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신흥공업국에 대해서는 견제와 보완의 차원에서 知的財産權의 철저한 보호 아래 공동연구 및 해외직접투자 등을 통한 기술협력에 국한하는 방어적인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 아세안국가들에 대해서도 이들 국가의 기술수준이 낮고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기술협력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자국의 기술이 다른 선진국의 기술보다 역내 후발공업국에게 적합한 기술이라는 인식과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기술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또한 자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창조적인 기술혁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판단하에서 미국과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한 기술협력에도 적극적이다. 그러나 역내 신흥공업국에게는 부메랑효과를 두려워하여 기술이전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기초과학 분야에서 강한 호주·캐나다·뉴질랜드는 산업응용기술이 발달한 역내 일본 및 신흥공업국과의 공동연구개발 및 실용화에 관심을 보이는 한편, EU 과학기술협력사업에 상응한 APEC 역내 공동연구사업 추진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편 신흥공업국들은 선진국으로의 진입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연구개발의 추진 등에 치중하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후발공업국들은 과학기술 발전을 자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력 진흥 등 APEC 차원의 산업기술협력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신흥공업국이면서 독자적인 기술개발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으므로 우리의 강점을 살려 선진국과 후발공업국간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을 촉진하는 가교역할(Bridging Function)을 담당함으로써 아·태지역의 경제성장과 역내기술협력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00년대를 향한 아·태지역 과학기술협력의 비전과 목표를 선도적으로 제시하여 APEC 회원국간 원만한 합의를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제2차 APEC 과학기술각료회의의 서울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는 이러한 가교 및 비전제시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함으로써, 우리나라가 APEC 과학기술협력 분야에 있어 중심국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과 동시에 APEC 과학기술협력의 새 지평을 여는 계기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각료회의의 서울 개최를 계기로 과학기술의 세계화전략 적극 구현

우리나라는 서울 과학기술각료회의가 과학기술 최고위급 정책결정권자간 지속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회원국간 과학기술협력을 촉진하고, 각료회의의 주요성과들이 96년 APEC 정상회의(필리핀)의 과학기술 부문 주요 합의사항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본목표를 두고 있다.

아울러, APEC 공동협력사업, 과학기술 관련 이벤트 등을 통해 아·태지역 공존공영이라는 APEC 이념 구현에 앞장섬으로써 우리나라 주도 아래서 APEC 국가간 실질적인 과학기술외교가 전개되도록 추진하는 것이 추가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서울 과학기술각료회의를 통해 APEC 회원국의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우리의 과학기술 세계화전략을 적극 구현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의 과학기술자원 및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서울 과학기술각료회의의 상징주제에 포함될 수 있는 이념으로서 선진국과 후발공업국 간의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을 촉진하는 가교역할, 아·태지역의 공생·공동창조 그리고 21세기 아·태지역의 쾌적한 미래공유 등이 고려되고 있다.

상징주제가 결정되면, 서울과학기술각료회의시 상징주제의 정신을 반영한 서울선언문을 채택할 계획이다. 신규 협력사업도 상징주제의 의의 및 정신을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발굴하여 96년 11월 서울 APEC 과학기술각료회의에서 제안할 계획이다.

또한 제1차 북경 과학기술각료회의의 29개 제안과제 중 유망 협력과제를 중점 발굴하여 후속조치를 취해 나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제1차 APEC 과학기술각료회의

갈 것이다.

우리가 제안한 과제(4개, 일본과의 공동제안과제 1개 포함)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계획(Action Plan)을 작성하여 96년 1월 인도네시아 산업과학기술 실무그룹회의에서 회원국에게 시범사업으로 제시한 데 이어, 중국(7)·일본(8)·호주(4)·미국(4)·싱가포르(1)·대만(1)·태국(1)의 제안과제 중 우리의 산업 및 기술수요에 부합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적극 참여해 나갈 것이다.

적극적인 과학기술외교로 내실있는 공동연구사업 수행

오늘날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은 제로섬 게임이 아닌 상호간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포지티브섬 게임이다. 결국, 우리 과학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는 일은 과학기술 협력의 전략적 추진을 통해 우리의 잠재력과 선진국의 방대한 과학기술력을 어떻게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도 미·일·EU 등 주요 선진기술 권역과 대등한 입장에서 내실 있는 공동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과학기술외교를 체계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끝으로, 그동안 우리는 미국·일본·歐洲로 형성된 '동서기술협력라인'을 통해 과학기술을 습득해 왔다. 그러나 APEC 과학기술각료회의의 서울 개최를 계기로 앞으로는 중국·호주·아세안 등을 포함하는 '남북기술협력라인'을 구축하고, 우리의 과학기술역량을 활용해 그들에게 봉사하며 새로운 기술협력 분야를 개척함으로써 과학기술을 함께 창조해 나갈 계획이다. **남북**

최 근 세계각국은 통신시장 개방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통신사업에 경쟁도입·민영화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미 80년대부터 기존 독점시장에 대한 진입장벽 제거, 공기업 민영화, 경쟁도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규제완화시책 등을 추진해 왔으며 90년대 들어서는 경쟁적으로 외국기업의 참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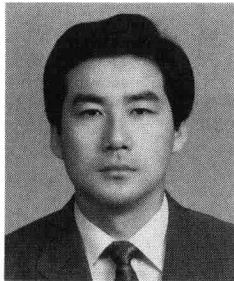
한편 WTO 기본통신협상이 현재 진행중인데, 이 협상은 전화 등 모든 형태의 기본통신사업에 대해 외국인 투자 등을 자유화하기 위한 국제다자간협상으로 늦어도 금년에는 타결될 예정이다. 기본통신협상의 주요 쟁점은 기본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자유화와 자유경쟁

통신시장 개방에 대비한 통신사업자 허가

여를 허용하는 등 국제간 전략적 제휴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작년 12월 신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공고 내

각국이 정보통신사업을 개방하려는 이유는 독점적 시장구조와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체제로 인해 발생하는 경영의 비효율성 등을 제거하고 정보통신시장에 민간의 창의와 활력을 도입함으로써 통신사업의



이규태
정보통신부 통신기획과장

환경조성이다.

WTO 협상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경쟁도입이나 개방화 정도는 각국별로 어느 정도 다르겠지만 전반적으로 98년부터 세계 정보통신시장은 개방화가 이루어져 자유경쟁체제에 돌입하게 된다. 이러한 체제가 되면 통신서비스 시장이나 통신장비 시장 모두 소수의 '수출국'과 다수의 '수입국'으로 양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정부는 통신시장 개방전 국내통신사업의 경쟁체제 조기구축을 통해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정보통신산업의 세계화를 앞당기고 국민의 통신서비스 이용편익을 증진시키고자 작년 12월 15일 신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공고를 하였다.

〈표 1〉 통신사업 구조조정의 주요내용

	구조조정 주요내용
90년	- 국제전화, 이동전화, 무선호출에 신규 사업자 허가 - 부가통신사업 참여 완전 자유화(94년 1월부터 100% 외국인 참여도 허용) - 이에 따라 국제전화(91. 12), 무선호출(93. 8), 전용회선(94. 1)에 실제로 경쟁도입 - 이동전화도 96년 상반기중 경쟁체제 돌입 예정
94년	-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일반/특정 통신사업자의 구분을 없앴. - 대주주 및 외국인 지분한도를 1/3로 완화 (단, 전화사업은 공공성과 경쟁력 집중방지를 위하여 외국인 참여는 불허하고, 대주주는 10%로 제한) - 시외전화 경쟁도입:데이콤 96년 1월부터 사업 개시

국내 통신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시급

국내 통신시장은 현재 전화보급률이 세계 8위 수준에 이르는 등 통신 시장이 급진장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통신사업에 대한 경쟁도입과 개방화를 서두르고 있다.

정부에서는 80년대 후반부터 <표 1>과 같이 통신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국내통신사업의 경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또한 앞으로 사회가 정보지향, 정보의존화됨에 따라 양질의 다양한 정보통신수단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진입과 퇴거의 장벽 제거, 상호접속 보장, 역무별 회계분리 등 자유 경쟁적인 정보통신 시장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자유경쟁적인 시장질서는 정보유통을 활성화하여 국내 경제활동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신기술과 첨단 서비스의 유입을 자유롭게 하여 새로운 정보통신시장을 창출하고 해외시장 진출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본다.

정부는 통신시장 개방전 국내통신사업의 경쟁체제 조기구축을 통해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정보통신산업의 세계화를 앞당기고 국민의 통신서비스 이용편익을 증진시키고자 작년 12월 15일 신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공고를 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세계정보통신시장에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여 '정보통신 수출국' 대열에 서기 위해서는 통신사업의 세계화 추진과 함께 국내 통신사업자의 경쟁력을 조기에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사업자 심사·선정과정은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방침

정부에서는 국내통신사업자의 경쟁력을 빠른 시일내 강화하고자 신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경쟁을 도입하여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역무는 국제전화,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 개인휴대통신(PCS), 주파수공용통신(TRS), 발신전용휴대전화(CT-2), 무선데이터, 무선통신로 일곱 가지이다 (〈표 2〉 참조).

기간통신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설립예정법인)에 한하여 허

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통신 분야에 사업자들이 통신사업에만 전념하여 21세기 정보화사회를 조기에 구현하고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사업에는 그 지역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를 장려하고

〈표 2〉 통신사업자 허가 내역

역무명	사업구역	사업자수
국제전화	• 전 국	1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국내유선)	• 허가신청법인이 희망하는 지역	적격법인
개인휴대통신	• 전 국	3
주파수공용통신	• 전 국	1
	• 수도권: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경기도	1
	• 부산 · 경남권: 부산광역시 · 경상남도	1
	• 대구 · 경북권: 대구광역시 · 경상북도	1
	• 광주 · 전남권: 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1
	• 대전 · 충청권: 대전광역시 · 충청남도	1
	• 전북권: 전라북도	1
	• 충북권: 충청북도	1
	• 강원권: 강원도	1
	• 제주권: 제주도	1
발신전용휴대전화	• 전 국	1
	• 수도권: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경기도	2
	• 부산 · 경남권: 부산광역시 · 경상남도	1
	• 대구 · 경북권: 대구광역시 · 경상북도	1
	• 광주 · 전남권: 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1
	• 대전 · 충청권: 대전광역시 · 충청남도	1
	• 전북권: 전라북도	1
	• 충북권: 충청북도	1
	• 강원권: 강원도	1
	• 제주권: 제주도	1
무선데이터	• 전 국	3
무선통신로	• 수도권: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경기도	1

이번에 경쟁을 도입하여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역무는 국제전화,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 개인휴대통신, 주파수 공용통신, 발신전용휴대전화, 무선데이터, 무선통신로 일곱 가지이며, 올해 4월 15일에서 4월 17일 사이에 허가신청서를 접수하여 5~6월에 심사를 거쳐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과 그 법인이 주주로서 참여하는 설립예정법인은 허가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였다.

사업자 허가시 허가심사는 1·2차로 구분하여 심사하되, 1차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술적 능력 · 재정적 능력 등의 심사를 위한 사업계획서 심사하고 2차에서는 정보통신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지원계획(출연금)을 심사한다. 다만, 출연금이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할 계획이나, 추첨에 의해 사업수행능력이 없는 업체가 선정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 1차 심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에서는 올해 4월 15일에서 4월 17일 사이에 허가신청서를 접수하여 금년 5~6월에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사를 거쳐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끝으로,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이번 통신사업자 허가는 그동안 3회에 걸친 공청회를 통하여 기존 통신사업자와 참여희망업체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가능한 한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 있을 사업자 심사 · 선정 과정은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남원**

‘과학’을 위하여

김대우

내외경제신문 기자/과학기술처

기자는 지난 1년간 과학기술처를 출입하면서 전국민적인 관심을 끌었던 굴업도 핵폐기물처분장 선정과 백지화 과정을 지켜보았다.

돌이켜 보면, 굴업도 핵폐기물처분장 부지 선정과정은 ‘정치적’, ‘비과학적’이었지만 백지화과정만큼은 아주 ‘과학적’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비과학적인 결정으로 수년간 정부가 심혈을 기울인 대형과제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돼버렸고, 정부정책의 신뢰도에 금이 갔으며 엄청난 국가예산과 행정낭비를 불러왔다.

당초 부지선정에서는 가장 먼저 인문·지리적인 요소가 고려됐고 다음으로 정치적인 요소가 저울질됐다. 지질 조사 등 과학적 요소는 가장 뒤로 밀렸다.

그러나 굴업도 백지화과정을 보자. 지난 10월 굴업도 해역에서 활성단층 징후가 처음으로 발견됐다. 정밀조사결과 활성단층으로 최종판명이 났고 공학적으로도 보완할 수 없다는 과학적 결론이 났다. 굴업도는 즉시 처분장부지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과학논리가 다른 모든 논리를 뒤집어버린 것이다.

기자는 이 사실을 앞에 놓고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과학논리’의

승리를 참으로 오랜만에 즐길 수 있었다. 굴업도 백지화는 우리가 왜 과학적이어야 하는지, 그렇지 못할 경우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본보기였다.

이처럼 중요한 과학이지만 과학이 받는 대접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 우리나라 과학은 우선순위에서 자주 뒤로 밀려났다. 합리적 논리의 과학은 과정과 절차인데 그동안 우리에게서 목표나 결과만 있었지 정작 과학은 없었다.

장기적인 안목의 과학논리가 아니라 당장 눈에 드러나는 결과물만을 기대하는 정치논리·경제논리가 늘 우선시됐다.

성수대교 붕괴, 대구 도시가스 폭발, 삼풍백화점 붕괴 등의 대형참사들은 모두 과학논리의 부족에서 비롯된 人災였다. 전문가가 마땅히 서 있어야 할 자리를 비전문가들이 차지하고 소수전문가의 의견은 종종 무시됐다. 기본적으로 기술천시 등 그릇된 ‘비과학논리’가 만연한 사회에서 전문가가 설 땅은 좁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말 당산철교의 철재빔 균열 현상을 놓고 ‘보완’, ‘재시공’ 등으로 의견이 분분하였다. 결국 외국 기술자들의 의견을 듣고서야 재시공하

기로 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처럼 자원이 없는 나라가 살 길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에 누구나 동의한다. 그동안 값싼 노동력으로 경제발전을 이루었으나 한계에 달했고 이제는 우수한 인적자원에 바탕한 기술로 승부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쉽게 이뤄지는 게 아니다. 정부의 강력한 주도만으론 부족하다.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이룩해야 달성할 수 있다.

과학논리가 비과학논리를 우선하고 과학기술이 존중되고 전문가가 존경받고 있는가? 무분별하게 암반 관정을 뚫고 방치해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비과학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나라에서 왜 노벨 수상자가 안 나오는가?

대답에 앞서 과학이 국민의식에 얼마나 파고들었는지를 먼저 자문해 보아야 한다.

이제는 과학의 세계화만 외칠 게 아니라 국민의식의 과학화에도 힘써야 한다. 그렇게 할 때에만 우리도 노벨상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남원**

公正委의 보물

김영태

매일경제신문 기자/공정거래위원회

공

동행위과 辛奉三 사무관. 올해 나이 스물일곱. 미혼인데다 흰칠한 키와 준수한 용모로 내외부적으로 못 여성들의 시선을 끌어들이고 있다. 특히 결혼 적령기의 딸을 둔 상사들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부산남고와 서울대 경제학과(88학번)를 거쳤다. 재경 35회. 지난 92년 농림수산부에서 공직생활의 첫발을 내디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의 공직생활의 두번째 터전이다. 그는 지난해 11월말 수많은 만류의 손길을 뿌리치고 정든 농림수산부를 떠나 공정거래위원회로 자리를 옮겼다.

“담당하는 일의 스케일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국민생활과 가장 가까운 곳, 개인·기업 등 경제주체의 활동에 가장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공정거래위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로 옮기면서 그가 품었던 이상이다. 공무원은 말 그대로 서비스맨으로서 보다 국민과 가까운 곳에서 봉사하는 게 본질이어야 한다는 것이 고시 준비할 때부터 마음 깊숙히 품어온 ‘공무원像’에 대한 지론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일터 공정거래위원회는 그의 생각을 현실화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말 그대로 공정거래의 임무를 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었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그 일의 현실화를 이룰 힘이 없다는 얘기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이라는 것도 단발성, 1회성에 그칠 뿐이었다. 지속적인 관리가 안되는 탓에 고질적 불공정행위의 병폐를 치료하기에는 무리였다. 일시적인 진통을 완화시키는 진통제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공정거래위원회에서의 새생활을 후회하지 않는다. 국민 또는 소비자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는 공무원, 실제 생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일, 자신이 하는 일의 결과를 가장 빨리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이기 때문이다.

국제업무2과 수습사무관 金正基씨. 천안북일고와 서울대 경영학과(89학번)를 거쳤다. 94년 고시에 합격(재경 37회). 작년 11월 중순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 몸담게 됐다.

고시 동기 76명 중 7등. 상위권들이 재정경제원이나 통상산업부를 선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그의 공

정거래위원회行은 의외로 비칠 수도 있다. 하지만 그의 선택은 분명하다.

“시대가 바뀌면서 정부도 바뀌고 있습니다. 세상이 달라진만큼 정부도, 공무원도 달라져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기일이 분명합니다. 또 규제완화라는 대세로 볼 때 앞으로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직 다른 경제부처에 비해 규모나 위상도 보잘것 없지만 적어도 장래성만큼은 최고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근 두달 동안의 근무기간 중 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너무 작다는 데 약간의 불만을 갖게 됐다. “한마디로 衆寡不敵입니다.” 해야 할 일은 많지만 일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다. 일각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을 장관급 이상으로 격상시키고 조직도 불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를 피부로 느끼게 됐다.

記者는 앞에서 두명의 신세대 사무관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오늘과 내일을 생각해 봤다. 물론 넘어야 할 산이 없는 건 아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젊다는 점에서 그 미래가 밝다. 젊다는 건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봉삼·김정기 사무관, 이들의 내일은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내일이다. **남원**

21세기형 정부의 창조를 위한 제언

이계식 · 문형표 編

정부혁신
-선진국의 전략과 교훈

공공 부문의 비효율성이 국가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先進各國은 이러한 인식 하에 이미 10여년 전부터 정부개혁을 통한 공공부문의 생산성제고 노력을 기울여 왔다. 21세기를 맞아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우리 역시 국가경쟁력의 제고가 무엇보다도 긴급하며, 이를 위해 낙후된 정부생산성의 제고가 요청되는 시점에서, 선진국이 이 부문에 기울인 노력과 체험으로부터 교훈을 얻어 이를 우리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선진각국의 정부개혁을 개관하고 그로부터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 이 책의 時宜適切함이 우선 돋보인다.

이 책은 전체 3부로 구성되어 있는바, 우선 1부 총론에서는 선진국들이 추구하는 정부개혁의 戰略을 제시하고, 2부에서는 지금까지 정부개혁이 비교적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되는 뉴질랜드·호주·영국·미국·스위스·독일의 6개국 사례를 분석하고 있으며, 3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올해 예산에 반영된 정부생산성 제고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책에 제시·정리된 선진국의 정부개혁 조치들은 참신하고 흥미롭기까지 한 것들로서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즉, 기존의 투입물 통제방식으로부터 결과에 초점을 맞춘 제도로의 전환, 정부서비스 공급을 독점하지 않고 민간과 경쟁하는 이른바 상업화의 추진과 정부부처 통폐합을 통한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의 추진, 인사권의 부처위임, 외부인력 활용, 엄정한 실적평가제도의 도입 등 인사제도의 광범위한 개혁 등이다.



〈한국개발연구원 刊, 376쪽, 값: 12,600원〉

또한 총괄경상비제도·효율성 배당(efficiency dividend)과 같이 경상비의 감축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예산운영의 신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 복식부기의 원리·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 등을 통한 예산회계제도 개혁 등도 있다.

이러한 改革은 결국 정부서비스의 독점성 때문에 초래되는 정부서비스의 비효율성 즉, '政府의 失敗'를 민간부문에서와 같이 경쟁의 도입에 의해 제거하려는 시도로 요약된다. 우리는 이렇게 하여 새로 탄생되는 정부를 21세기형 정부라고 불려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개혁에도 일정한 한계는 있다. 著

者들이 잘 지적한 바와 같이 정부서비스는 기본적으로 '市場의 失敗'를 보완하기 위해 공급되는 것이므로 정부서비스의 모든 부문을 다 개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럴 수도 없다. 또한, 한 나라에서 성공한 개혁이 다른 나라에도 자동적으로 성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선진국의 사례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著者들의 의견에도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정부개혁이 불가피하며 또한 잘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에 이 책의 의미가 있다 하겠다. 다만, 이 책의 각장에 제시된 우리나라에 주는 示唆는 기본방향의 제안과 개혁조치 도입의 가능성 타진에 머물러 있는 듯한 인상이다. 이들을 좀더 구체적인 정책방안으로 다듬어 차후 研究에서 다루어 주기를 기대한다. 남광재

이근식 ·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

국제금리 하락세 지속

박 훈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94년에 미국금리를 중심으로 크게 상승하였던 국제금리가 지난해에는 미국·일본·독일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의 공금리 인하에 영향을 받아 하락세로 반전되었다.

국제금리를 대표하는 리보금리(LIBOR, 3개월物)의 경우 작년말에 5.66%로 재작년말보다 0.84% 포인트나 하락하였다. 선진국들은 지난해에 물가가 안정된 가운데 경기가 둔화양상을 보이자 경기부양을 위해 공금리를 잇따라 인하하였다.

금년에도 국제금리는 하락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금리가 경기 둔화에 따라 하락함으로써 국제금리의 하락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과 독일의 단기금리는 금년 중반까지 하향안정세를 지속할 것이나, 연말에 가서 물가상승 압력에 따라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작년 7월부터 금융 완화기조로 전환

재작년부터 높은 경제성장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을 우려해 금융 긴축정책을 실시하였던 美國이 작년초부터 경기가 급격히 둔화되자 경기의 연착륙을 이룩하기 위해 7월부터 금융정책을 완화기조로 전환하였다.

聯準은 금융완화정책의 일환으로 7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연방자금금리를 0.25% 포인트씩 인하하였다. 聯準이 7월에 연방자금금리를 인하한 것은 재작년에 4.1%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던 GDP 성장률이 작년

1/4분기 및 2/4분기에 각각 前期比 연율 2.7% 및 1.3%의 저조한 수준을 기록하자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나온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12월에 들어와 또다시 연방자금금리를 인하한 것은 3/4분기에 들어와 GDP성장률이 4.2%의 높은 수준을 기록함으로써 다시 회복되는 듯하였던 경기가 10월부터 개인소비 및 제조업생산 등을 중심으로 둔화세로 돌아섬으로써 4/4분기중 GDP성장률이 잠재성장률 2.5%보다도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편 재작년에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내었던 장기금리는 지난해초부터 물가가 하향안정세를 보인 가운데 경기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둔화됨으로써 하락세로 반전되었다. 장기금리를 대표하는 30년만기 채무부 채권수익률의 경우 지난해말에 5.94%로 재작년말보다 무려 1.93% 포인트나 하락하였다.

일본금리는 사상 최저수준 기록

지난 한해 동안 일본의 장·단기금리는 물가가 낮은 수준에서 유지된 가운데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으로써 동반 하락세를 나타내었다.

일본중앙은행은 작년초의 급격한 엔高 및 관서지방의 대지진 등의 영향으로 경기회복이 지연되자 엔高를 저지하고 경기회복을 부추기기 위해 4월 14일에 1.75%였던

공정할인율을 1%로 무려 0.75% 포인트나 인하한 데 이어 9월 8일에도 사상 최저치인 0.5%로 0.5% 포인트나 인하하였다.

이처럼 일본중앙은행이 9월에 공정할인율을 인하한 것은 물가가 낮은 수준에서 안정된 가운데 실업률이 크게 상승한데다 광공업생산도 감소세를 지속하는 등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잇따른 부실채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기관들의 수익을 개선시키고, 더 나아가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도 내포하고 있다.

한편 제작년에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장기국채 발행 확대 등으로 크게 상승하였던 장기금리도 작년 초부터 물가안정 및 경기침체의 장기화 등으로 꾸준한 하락세를 보여 장기금리를 대표하는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의 경우 작년 12월 12일에 2.6%로 1월초보다 무려 2.12% 포인트나 하락하였다.

그러나 12월 중반부터 엔/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하자 해외 투자자들이 엔貨표시 채권을 대량 매각하면서 상승세로 반전되어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의 경우 12월말에 2.91%를 기록하였다.

지난해 독일의 장·단기 금리도 꾸준한 하락세 보여

지난해에 독일의 장·단기 금리도 물가와 물가의 선행지표인 통화증가율이 낮은 수준에서 안정된 가운데 마르크貨 강세 등의 영향으로 경기가 둔화되면서 꾸준한 하락세를 나타내었다.

마르크貨의 강세를 진정시키고 또한 유럽 외환시장의 혼란으로 인해 야기되고 있는 약세통화들의 환율조정체계(ERM)의 탈퇴를 막기 위해 지난해 들어와 두 차례에 걸쳐 공금리를 인하한 獨逸聯邦銀行이 12월 14일에 공정할인율과 롬바르트금리를 또다시 각각 3% 및 5%로 0.5% 포인트씩 인하하였다.

독일연방은행은 작년 1/4분기와 2/4분기에 각각 전년 동기대비 2.9% 및 2.2%였던 GDP성장률이 3/4분기에는 1.5%의 저조한 수준을 기록하자 경기회복을 부추기기 위해 공금리를 인하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는 물가와 통화증가율이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도 연방은행이 공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하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경우 95년 11월 현재 전년 동월대비 1.7%로 전년말보다 1% 포인트나 낮아졌다. 그리고 M3 증가율도 관리목표인 4~6% 범위를 크게 하회하는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한편 제작년에 통화량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 우려로 인해 상승하였던 장기금리는 지난해에 경기가 둔화되면서 하락세로 반전되었다. 장기금리를 대표하는 10년만기 국채수익률의 경우 작년말에 6.02%로 제작년말보다 1.58% 포인트나 하락하였다.

영국·프랑스 등 여타 유럽국가들도 공금리 인하

독일의 공금리 인하를 전후하여 영국·프랑스를 비롯한 주요 EU국가들도 잇따라 공금리를 인하하였다.

EU국가들은 1999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유럽통화통합(EMU)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자 규모를 GDP 대비 3% 이하로 유지시켜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EU국가들은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이 3%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경기가 둔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출을 늘릴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에 EU국가들은 경기부양을 위해 독일의 금리인하를 전후하여 금리를 잇따라 인하하였다.

경기성장에 따른 인플레이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제작년 9월부터 공금리를 인상하였던 英蘭銀行은 지난해에 경기가 크게 둔화된데다 연초부터 크게 대두되었던 물가상승압력이 10월부터 크게 완화되자 경기회복을 부추기기 위해 12월 14일에 기준금리를 6.75%에서 6.5%로 0.25% 포인트 인하하였다.

프랑스 중앙은행도 작년 중반부터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시장개입금리를 23년 만에 최저치인 4.45%로 인하하였다. 프랑스 중앙은행은 11월 15일 프랑스 정부의 사회보장개혁안 발표를 계기로 촉발된 대규모 파업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민간소비 및 기업의 설비투자가 위축될 것을 우려해 경기부양의 일환으로 공금리를 인하하였다.

95년에 이어 올해도 國際金利는
하락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금리가 하락함으로써
국제금리의 하락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과 독일의
단기금리는 금년 중반까지
하향안정세를 지속할 것이나,
연말에 가서 물가상승 압력에
따라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금리, 금년에도 하락세 지속될 전망

聯準은 작년 7월부터 금융완화정책의 일환으로 연방자금금리는 인하하였지만, 공정할인율은 달러貨 약세 우려 및 클린턴 행정부와 의회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균형예산안 합의 지연 등으로 인하하지 못한 채 작년초의 5.25%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클린턴 행정부와 의회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균형예산안 협상이 조만간에 타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초에 공정할인율과 연방자금금리를 한 차례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초에 공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배경은 우선 물가가 2%대에서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聯準이 이제까지 달러貨 약세를 방어하기 위해 금리인하에 신중한 자세를 취했으나, 최근 엔/달러 환율이 105엔대를 넘어서는 등 달러貨 가치가 강세를 지속하고 있어 더 이상 달러貨 약세를 방어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할 필요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설비투자를 부추겨 경기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공금리의 추가 인하가 시급한 실정이다. 재작년 4/4분기와 작년 1/4분기에 각각 前期比 연율

17.6% 및 21.5%의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던 설비투자증가율이 2/4분기에 11.3%로 둔화된 데 이어 3/4분기는 한 자리수인 8.3%로 크게 둔화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들어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장기금리는 금년에도 聯準의 공금리 인하 등에 영향을 받아 하락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정부의 재정적자 감축 노력에 힘입어 재정적자가 줄어들어 금리하락을 부추길 것이다.

일본·독일의 공금리는 금년말부터 인상될 듯

일본중앙은행은 금년 중반까지 경기회복을 부추기기 위해서 공정할인율을 현수준에서 유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금년에도 물가 및 물가의 선행지표인 통화증가율이 낮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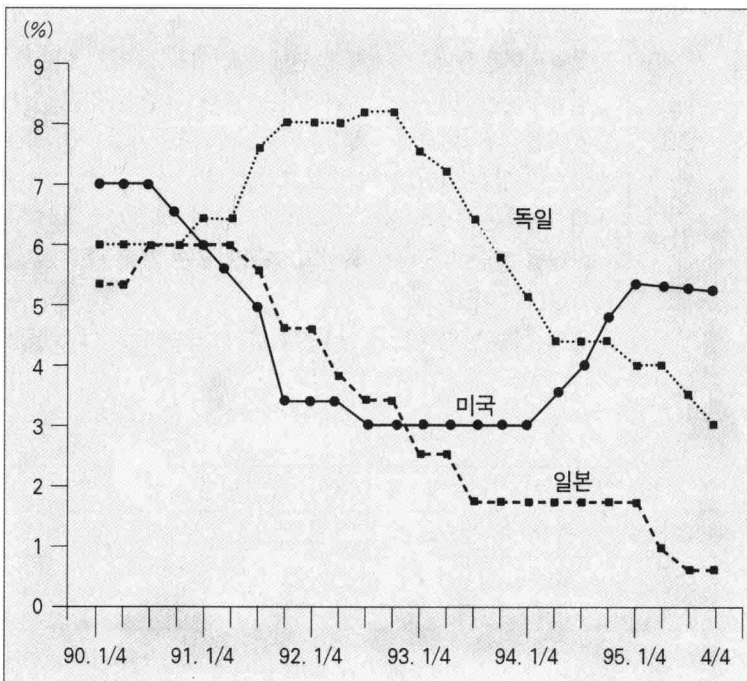
그러나 일본중앙은행은 연말경에 가서 공금리를 소폭이나마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공금리 인하 등 일련의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경기회복 속도가 빨라지면서 연말에 가서는 물가상승 압력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작년 12월 중반부터 상승세로 돌아선 일본의 장기금리는 올해도 경기회복에 따른 기업의 자금수요 증가 및 물가상승 압력 등으로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독일연방은행은 금년 중반까지는 물가가 낮은 수준에서 안정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경기회복도 가시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공금리를 현수준에서 유지하거나 소폭이나마 한 차례 더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독일연방은행은 연말에 가서는 공금리를 인상하는 쪽으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하반기부터 일련의 공금리 인하에 따른 경기상승으로 점차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장기금리도 연초까지는 하락세를 보일 것이나, 중반부터는 설비투자의 확대에 따른 기업의 자금수요 증대 및 민간소비 증가에 따른 물가상승 우려 등으로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미국·일본·독일의 공정할인율 추이





南北韓의 경제 · 사회상 비교

최봉호

통계청 국제통계과장

남한과 북한은 같은 민족이면서도 지난 50년간을 서로 체제를 달리하여 고립된 상태로 지내왔다. 이와 같이 체제를 달리한 장기간의 분단상황은 당연히 인구학적으로나 경제

사회구조 측면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몇가지 지표에 대한 차이를 북한 대비 남한의 倍數로 나타낸다면 인구는 1.9배, 국민총생산은 17.8배, 1인

당 GNP는 9.2배, 자동차 생산능력은 95.5배, 조선능력은 24.2배, TV수상기 생산능력은 71.1배, 무역총액은 94배, 임금수준은 10~20배를 나타내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격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GNP 구조 측면에서도 남한에

서는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이루어져 GNP 중 농림어업 7%, 광공업 27.2%,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65.8%로 되어 있으나 북한의 경우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에서는 아직 농림어업이 29.5%로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은 39.1%로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같이 남한과 북한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요즘 북한이 겪고 있는 식량·에너지·외화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의 농가인구는 계속 증가 추세

남한의 농가인구는 65년 1,581만2

〈표 1〉 남북한 주요 경제지표(94년)

주요지표	남한	북한
인구수* (천명)	44,851	23,261
1인당 GNP (달러)	8,483	923
경제성장률 (%)	8.2	-1.7
수출액 (억달러)	960.1	8.4
GNP대비 총외채비율 (%)	15.1	50.3
GNP대비 군사비비율 (%)	3.5	26.7
산업구조 (%)	100.0	100.0
• 농림어업	7.0	29.5
• 광공업	27.2	31.4
• SOC 및 기타	65.8	3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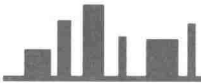
註: *인구수는 95년 기준임.

자료: 농림수산부, 통일원

〈표 2〉 농업생산성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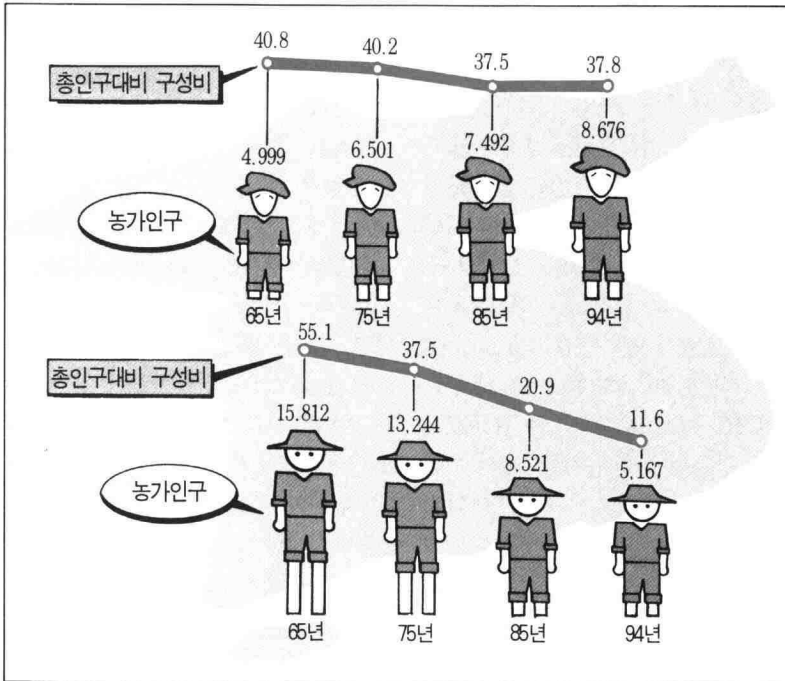
	정보당 식량작물생산량(t)			단보당 쌀생산량(kg)			농가인구 1인당 식량작물생산량(t)		
	남한	북한	남/북(배)	남한	북한	남/북(배)	남한	북한	남/북(배)
65년	2.03	1.34	1.51	285	233	1.2	0.41	0.71	0.6
94년	4.09	2.78	1.47	459	264	1.7	1.11	0.48	2.3

자료: 농림수산부, 통일원



〈그림 1〉 농가인구 및 총인구대비 구성비

(단위: 천명, %)



자료: 농림수산부, 통일원

천명에서 75년 1,324만4천명, 85년 852만1천명, 94년도에는 516만7천명으로 지난 30년간 67.3%나 감소하였으나, 북한의 농가인구는 65년 499만9천명에서 75년 650만1천명, 85년 749만2천명, 94년도에는 867만6천명으로 지난 30년간 73.6% 증가하였다.

농가인구를 인구대비로 살펴보면, 남한은 65년 55.1%, 75년 37.5%, 85년 20.9%, 94년도에는 11.6%를 나타내 지난 30년간 43.5%포인트나 감소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는 농가인구비율이 65년 40.8%, 75년 40.2%, 85년 37.5%, 94년 37.8%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남한의 경지면적은 65년도에는 225만6천ha, 75년 224만ha, 85년 214만4천ha, 94년도에는 203만3천ha로 경제개발에 따라 감소추세에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지면적 변화를 보면, 65년도에는 199만3천ha, 75년 207만8천ha, 85년 213만6천ha, 94년도에는 199만2천ha로서 큰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해마다 200만 이상의 식량 부족 겪는 북한

남한의 식량생산량은 65년에 652만4천t에서 94년에 574만4천t으로 지난 30년간 12% 감소하였으나 북한의 식량생산량은 65년 354만8천t에서 94년에 412만5천t으로 16.5% 증가하였다. 남한은 식생활패턴의 변화로 식량작물의 소비량이 줄고 있는 데 반해 북한은 먹을거리라고는 식량뿐이어서 해마다 650~670만t의 식량수요로 인하여 매년 200만t 이상의 식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65년 남한의 정보당 식량작물생산량은 2.03t으로 북한의 1.34t에 비하여 1.51배, 94년도에는 남한은 4.09t으로 북한의 2.78t에 비하여 1.47배를 나타냈다. 65년 남한의 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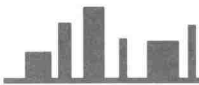
〈표 3〉 에너지 공급구조

(단위: 천TOE, %)

	남 한						북 한				
	석탄	석유	수력	원자력	기타	계	석탄	석유	수력	기타	계
65년	5,280 (43.8)	1,455 (12.1)	178 (1.5)	- (-)	5,142 (42.7)	12,055 (100.0)	8,519 (71.9)	351 (3.0)	1,797 (15.2)	1,185 (10.0)	11,853 (100.0)
92년	23,618 (20.4)	71,740 (61.8)	1,216 (1.0)	14,133 (12.2)	5,304 (4.6)	116,011 (100.0)	15,476 (70.9)	1,520 (7.0)	3,550 (16.3)	1,288 (5.9)	21,834 (100.0)

註: 괄호 안은 구성비임.

자료: 통상산업부, 통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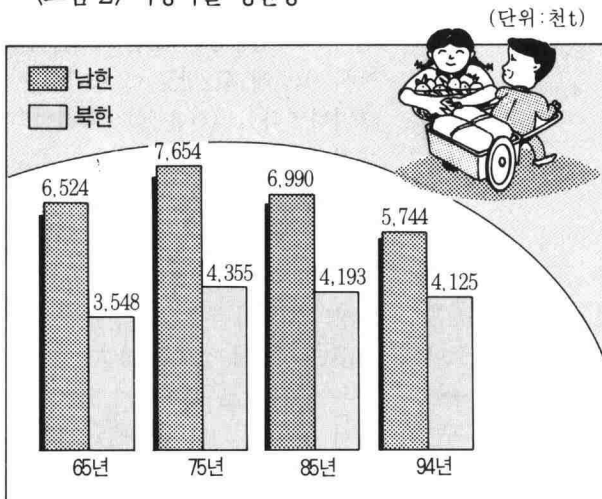
보당 쌀 생산량은 285kg으로 북한의 233kg에 비하여 1.2배, 94년도에는 남한은 459kg으로 북한의 264kg에 비하여 1.7배를 기록하고 있다.

65년 남한의 농가인구 1인당 식량 생산량은 0.41t으로 북한의 0.71t에 비하여 0.6배였으나 94년도의 경우, 남한은 1.11t으로 북한의 0.48t에 비하여 2.3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

92년 북한 1인당 에너지공급량은 남한의 65년 수준

남한의 에너지공급총량은 65년

〈그림 2〉 식량작물 생산량



자료:농림수산부, 통일원

〈표 4〉 발전량

	남한				북한			남/북
	수력	화력	원자력	계	수력	화력	계	
65년	7 (21.9)	25 (78.1)	- (-)	33 (100.0)	72 (54.5)	60 (45.5)	132 (100.0)	0.3
94년	41 (2.5)	1,022 (62.0)	587 (35.5)	1,650 (100.0)	138 (59.7)	93 (40.3)	231 (100.0)	7.1

註:괄호 안은 구성비임.
자료:한국전력공사, 통일원

1,205만5천TOE(TON OF OIL EQUIVALENT)에서 92년에 1억 1,601만1천TOE로서 65년 대비 9.6배 증가한 반면, 북한의 에너지공급 총량은 65년도 1,185만3천TOE에서 92년 2,138만4천TOE로 1.8배 증가하였으나 90년의 2,729만2천TOE에 비해 감소함으로써 최근의 에너지난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남한의 65년도 1인당 에너지공급량은 0.42TOE에서 92년 2.66TOE로서 65년 대비 6.3배 증가한 반면, 북한은 0.97TOE에서 92년에 0.98 TOE로서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최근

북한의 에너지 사정을 나타내 주고 있다.

남한의 에너지공급원은 65년도에는 석탄이 43.8%, 석유가 12.1%를 차지하였으며 92년도에는 석유가 61.8%, 석탄 20.4%, 원자력이 12.2%를 차지하여 에너지 공급구조가 다

양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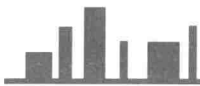
반면 북한의 에너지공급원은 65년도에는 석탄이 71.9%, 수력이 15.2%를 차지하였으며 92년도에는 석탄이 70.9%, 수력이 16.3%를 차지함으로써 구조변경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다.

남한의 석탄생산량은 65년에 1,024만8천t에서 94년에는 744만t으로 최근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북한은 65년 1,786만t에서 94년에 2,540만t으로 생산량이 증가하였으나 85년의 3,750만t에 비해서는 32.3% 감소하였다.

남한의 원유도입량은 65년 1,117만배럴에서 94년 5억7,796만9천배럴로 65년 대비 51.7배로 규모가 크게 증가한 반면 북한의 원유도입량은 65년에 284만2천배럴에서 94년에 667만배럴로 2.3배 증가에 그쳤다. 그러나 94년 도입량은 90년 대비 63.9%가 감소한 것인데, 이는 구소련의 몰락으로 러시아에서 원유도입에 대한 경화결제 요구로 북한의 외환사정이 어려워 원유도입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남한의 발전량은 북한의 7.1배

남한의 발전용량에 대한 구성비는 65년도에는 화력이 72.0%, 수력이 28.0%를 차지하였으나 94년에는 화력이 64.8%, 원자력이 26.5%, 수력이 8.7%로서 화력과 수력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원자력은 증가하고 있다. 북한의 발전용량에 대한 구성비를 보면, 포장수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수



력이 88.3%, 화력이 11.7%였으나 94년에는 수력이 60.0%, 화력이 40.0%로서 화력의 비중이 높아지긴 했으나 해방후 지금까지 수력 위주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의 발전량은 65년에 33억 kWh에서 94년에 1,650억kWh로 50배나 늘어났으나, 북한은 65년에 132억kWh에서 94년에 231억kWh로 75% 증가에 그쳤다. 특히 북한의 발전량은 85년의 252억kWh에서 94년에는 231억kWh로 지난 9년 동안 8.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발전시설의 노후화, 석탄공급의 부족 및 저열탄의 사용, 에너지 관리기술의 낙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한의 94년 무역총액 북한의 94배

남한의 65년 무역총액은 6.0억달

〈표 5〉 총외채/GNP 비율
(단위: %, 배)

	남	한	북	한	남/북
80년	44.9	16.5	39.7		
85년	52.1	19.2	47.4		
90년	13.1	34.0	14.9		
94년	15.1	50.3	17.0		

자료:통계청, 통일원

〈표 6〉 무역총액 및 무역수지

(단위: 억달러, 배)

	남 한				북 한				남/북		
	무역총액	수출	수입	무역수지	무역총액	수출	수입	무역수지	무역총액	수출	수입
65년	6.0	1.8	4.2	-2.4	3.9	1.9	2.0	-0.1	1.5	0.9	2.1
75년	116.7	50.0	66.7	-16.7	19.1	8.2	10.9	-2.7	6.1	6.1	6.1
85년	614.2	302.8	311.4	-8.4	31.0	13.1	17.8	-4.7	20.0	23.1	17.5
90년	1,348.6	650.2	698.4	-48.2	46.4	20.2	26.2	-6.0	29.1	32.2	26.7
94년	1,983.6	960.1	1,023.5	-63.4	21.1	8.4	12.7	-4.3	94.0	114.3	80.6

자료:관세청, 통일원

리에 불과하였으나 94년에는 1,983억6천만달러를 기록함으로써 65년 대비 330.6배의 신장세를 보였다. 북한의 무역총액은 65년도에는 3억9천만달러였으나, 85년에 31억달러, 90년에 46억4천만달러를 기록하여 상승추세를 보이다가 91년 구소련의 붕괴 이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94년에는 21억1천만달러로서 65년 대비 5.4배 증가에 그쳤다. 북한의 무역총액이 91년 이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이유는 러시아의 경화결제 요구 및 중국의 일부 품목에 대한 경화결제 요구로 무역규모가 축소된 데에 기인한다.

무역규모를 수출입으로 나누어 보면 94년 남한의 수출은 960억1천만달러, 수입은 1,023억5천만달러로서 통관기준 무역수지가 -63억4천만달러였다. 북한의 경우 94년 수출은 8억4천만달러, 수입은 12억7천만달러로서 무역수지는 -4억3천만달러로 나타났다. 북한의 무역수지는 65년 -1천만달러, 75년 -2억7천만달러, 85년 -4억7천만달러, 90년 -6억달러에 이어, 94년에도 -4억3천만달러를 기록하는 등 만성적인 적자가 계속되고 있다. 90년 이후 무역수지 적자 폭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 원인

은 중국의 對북한 원유 수출가격의 인상 및 러시아의 對북한 수출가격의 국제시세화와 곡물수입 증대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남한의 순외채는 북한보다 적어

남한의 총외채는 80년도에는 271억7천만달러, 90년도에는 317억달러였으며, 94년에는 568억5천만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남한의 순외채는 80년도 196억3천만달러에서 94년에는 103억1천만달러로 감소하고 있다. 북한의 외채는 만성적인 무역수지적자 등으로 인하여 외채의 규모가 계속 증가하였다. 80년도의 북한의 총외채는 22억3천만달러, 90년 78억6천만달러이었으며, 94년에는 106억6천만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남한의 총외채/GNP 비율은 80년도에는 44.9%, 85년 52.1%이었으나 계속 감소하여 90년 13.1%, 94년에는 15.1%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북한의 총외채/GNP 비율은 80년도에는 16.5%, 85년에는 19.2%에 불과하였으나 90년에는 34.0%, 94년에는 현재 50.3%를 기록함으로써 외채의 비중이 계속 높아졌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김연근

국세청 민원봉사실장

■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무엇을 말하는지요.

— 소득세를 과세하는 방법에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종합과세방법과 소득종류별로 각각 과세하는 분리과세방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종합과세방법을 채택하면서 예외적으로 은행·단자사·증권회사·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분리과세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은 금융기관이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었으나 앞으로는 금융소득도 부부의 이자·배당소득을 합하여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게 되었습니다.

■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 원칙적으로 개인별 금융소득인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15%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부부의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종합과세하게 되지만 다음의 경우는 원천징수 세율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첫째, 세금우대저축에 대한 이자는 10% 세율로 원천징수후 종합과세하게 됩니다.

둘째, 농·수·축협 단위조합, 신탁, 새마을금고 예탁금(2천만원 이하) 이자와 출자금(1천만원 이하)에 대한 배당은 금년까지 비과세이지만 97년부터 5% 세율로 원천징수후 종합과세하게 됩니다.

셋째, 그동안 만기전에 매도하는 경우 과세되지 않던 채권·CD·CP 중개어음·표지어음·개발신탁 수익증권 등을 만기전에 법인에 매도하는 경우에도 이자소득을 원천징수(15%)한 뒤 종합과세하게 됩니다.

그러나 私債利子 등 비영업대금의 이익, 상장법인 또는 장외등록 법인의 대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국외에서 받는 이자·배당소득 등의 금융소득은 금액 크기에 관계없이 모두 종합과세됩니다.

또한 분리과세되거나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금융소득도 있습니다. 즉, 1,200만원 이하 가계생활자금저축 이자는 10%로 분리과세되고, 상환(저축)기간 5년 이상 장기채권과 장기저축 이자는 30% 원천세율(10년 이상은 25%) 적용하여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5년 이상 장기저축의 범위는 은행의 예금·적금·부금, 신용금고의 부금, 신탁·새마을금고·단위 농수축협·우체국의 적금(은행신탁·보험·투신·투금·종금·증권사 상품 제외) 등이 됩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장기저축(개인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 상장주식·채권 매매차익, 5년 이상 유지된 저축성 보험차익 등의 금융소득은 비과세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언제부터 실시하는지요.

— 9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금융소득분부터 종합과세됩니다. 따라서 96년도에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97년 5월에 종합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부부합산 과세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자·배당·부동산 임대소득을 자산소득이라고 하며 95년까지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중 이러한 자산소득을 제외한 타소득(사업근로·기타소득)이 많은 사람이 모든 가족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했으나, 9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자산소득은 부부간에만 합산과세됩니다.

따라서 부부 중 자산소득을 제외한 타소득이 많은 사람이 부부의 자산소득과 본인의 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부 각자의 자산소득에 포함된 이자·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은 종합과세됩니다. 즉, 본인의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3천만원이고 배우자의 금융소득이 2천만원일 경우 부부의 합산 금융소득 5천만원 중 1천만원은 종합과세됩니다.

■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

—부부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이자·배당소득의 연간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되어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확정신고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부부의 이자·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사채이자 등 비영업대금의 이익, 상장법인 및 장외등록 법인의 대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등이 있는 경우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고 세액을 은행 등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종합과세대상이 되는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배우자·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및 특별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원칙적으로 받지 못하므로 납부할 세액이 늘어나고, 또한 납부할 세액의 10%를 납부불성실가산세로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적게 신고한 세액의 10%를 납부불성실가산세로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금융소득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이를 어떻게 확인하여야 하는지요.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평소 자기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이자나 배당소득이 얼마인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기의 금융소득이 얼마인지는 이자나 배당소득을 받을 때마다 기록을 해두거나, 금융기관 등이 이자나 배당소득을 지급하면서 교부해주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모아서 합계하면 됩니다.

그러나 금융기관 등에서 거래통장

에 이자·배당소득의 지급내용을 기재하여 주는 경우와 예금주의 신청을 받아 금융기관 등이 이자·배당소득의 지급내용을 우편으로 통보하여 주는 경우는 거래통장이나 우편통보 내용으로 금융소득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별첨**

다음 호(3월호)에는 96개정세법을 다룰 예정입니다. 〈편집자註〉